

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23-30

미디어리터러시 지수의 국가승인통계 추진 타당성 및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Feasibility and Plan of Promoting Nationally
Approved Statistics of Media Literacy Index)

김광재/권순길/이종명/이종호

2023. 12

연구기관 : 사단법인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이 보고서는 2023년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 융합 정책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방송통신 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미디어리터러시 지수의 국가승인통계 추진 타당성 및 방안 연구』의 연구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12월

연구기관 : 사단법인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총괄책임자 : 김광재

참여연구원 : 권순길

이종명

이중효

목 차

요약문IX

제1장 서 론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 내용과 범위 4
제3절 연구 방법 8

제2장 해외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운용 현황13

제1절 유럽위원회의 미디어리터러시 지침 15
1. 미디어리터러시 수준 평가 기준(유럽시청자권익위원회) 18
가. 개인적 역량(Individual Competence) 19
나. 환경적 요인(Environmental Factors) 21
다. 미디어리터러시 수준 평가 24
라.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측정 결과 26
2. 미디어리터러시 수준 평가를 위한 개선 기준(유럽시청자권익위원회) 28
가. 개선된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측정 결과 30
3. 미디어리터러시 평가 프레임워크(UNESCO) 32
제2절 The Media Literacy Index (Open Society Institute - Sofia) 37
1.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구성요소 39
가. 교육(Education) 39
나. 미디어의 자유(Freedom of the press) 39
다. 대인관계 신뢰(Trust in others) 39
라. 전자 참여(E-participation) 40
2. 2023년 유럽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측정 결과 40

제 3 절 The Media Literacy Implementation Index (Media Literacy Now)	43
제 4 절 소결 및 시사점	47

제 3 장 국내 미디어리터러시 조사 분석 -----49

제 1 절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개발 연구	51
1. 조사 목표 및 특성	51
2. 지수 구성 및 정교화	54
3. 연구 결과 및 적용	58
제 2 절 미디어리터러시 지수를 활용한 정책 연구	63
1. 조사 목표 및 특성	64
2. 지수 구성 및 정교화	68
3. 조사 결과의 정책적 활용	71
제 3 절 소결 및 시사점	75

제 4 장 국가 승인통계 현황 및 체계 -----80

제 1 절 국가 승인통계 현황	80
1. 법적 근거	80
2. 국가승인통계 현황	83
가. 통계 작성기관 현황 정보	84
나. 국내 승인통계현황	85
1) 기관구분별 현황	85
2) 각 통계부문별 현황	85
다. 국가 통계 검색 및 승인(합의) 절차	86
3. 정기통계품질진단 보고서	89
가. 통계품질의 개요 및 제고 필요성	89
나. 정기통계품질진단의 대상과 절차	92
4. 통계와 정책의 연계 강화 현황	102
가.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	102

1)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의 도입	102
2) 평가대상 및 평가체계	102
3) 평가절차 및 평가방식	103
나. 행정통계의 전반적인 관리 체계	104
1) 유사중복 여부	105
2) 발간통계자료로서 적합성 여부	106
제2절 국가 승인통계 추진 요건 및 체계	107
1. 국가 승인 통계 요건	107
가. 형식 요건	107
1) 조사의 기획과 설계	107
2) 자료수집(조사)	107
3) 자료처리(분석 및 가공)	107
4) 자료정리 및 공급	107
나. 내용 요건	107
1) 중립성 보장	108
2) 신뢰성 제고	108
3) 효율성 제고	108
4) 비교 가능성	108
5) 비밀 보호	109
6) 인프라 확충	109
7) 이용자 참여	109
8) 서비스 향상	109
다. 기타 추가 요건	110
1) 조사항목	110
2) 모집단 및 표본 설계	112
3) 통계생산 체계 설계	113
4)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115
2. 추진 및 절차 요건	121
가. 통계작성승인 검토 요건 및 내용 서류	121
나. 통계작성승인 추가 요건	128
1) 통계작성 승인제도의 취지	128

2) 통계작성 승인 및 취소 요건	129
3) 승인대상과 협의대상 구분	129
4) 통계작성 승인(협의) 사항	130
제 3 절 소결 및 시사점	131

제 5 장 실증 분석133

제 1 절 국가승인통계 운영 사례 분석	135
1. 한국미디어패널조사	135
가. 국가승인통계 추진 배경	135
나. 조사 수행 및 개선과정	136
다. 정책적 활용 및 기여	137
2.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138
가. 국가승인통계 추진 배경	138
나. 조사수행 및 개선 과정	139
다. 정책적 활용 및 기여	141
3.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142
가. 국가승인통계 추진 배경	142
나. 조사 수행 및 개선 과정	143
다. 정책적 활용 및 기여	144
제 2 절 전문가 심층 인터뷰	147
1. 인터뷰 개요	147
가. 인터뷰 절차	147
나. 인터뷰 내용	148
2. 인터뷰 결과	149
가. 정책적 활용의 한계	149
나. 국가승인통계 추진 당위성과 요건	152
다. 정책적 함의와 한계점 제언	155
3. 소결 및 시사점	159

제6장	지수 운용체계 구성 및 제안	162
제 1 절	분석결과 및 시사점	162
제 2 절	국가승인통계 추진 방안	167
1.	국가승인통계화 추진 조직 구성	167
2.	적합성 판단을 위한 업무 체계 구축	170
3.	승인대상 분류 체계 확립 및 개선계획 수립	173
제 3 절	국가승인통계 추진 로드맵	176
참 고 문 헌		182

표 목 차

<표 2- 1> 역량의 수준별 단계	24
<표 2- 2> 분석틀에서의 유효 질문	28
<표 2- 3> 유럽 국가들의 개선된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순위	31
<표 2- 4> 미디어리터러시 구성요소 및 미디어리터러시 세부 인자	34
<표 2- 5>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평가 프레임워크	36
<표 2- 6> Open Society Institute - Sofia의 6대 주요 사업 분야	37
<표 2- 7> Open Society Institute - Sofia의 Media Literacy Index 구성요소	38
<표 2- 8> 2023 Media Literacy Index 측정 결과	41
<표 2- 9> Media Literacy Implementation Index 구성요소	44
<표 2-10> Media Literacy Now의 미디어리터러시 적용 지수 구성요소 분석	45
<표 3- 1> 미디어리터러시 연구 개요	79
<표 4- 1> 국가통계의 유형	80
<표 4- 2> 통계의 종류	82
<표 4- 3> 통계법의 통계작성기관 관련 조항	83
<표 4- 4> 승인통계현황	85
<표 4- 5> 각 통계부문별 현황	86
<표 4- 6> 국내의 통계보급시스템	88
<표 4- 7> 통계법의 통계 승인 관련 조항	89
<표 4- 8> 통계품질진단제도	90
<표 4- 9> 공식통계 10가지 기본원칙	91
<표 4-10> 통계작성단계에 따른 품질진단방법	98
<표 4-11> 통계청의 통계품질관리 현황	99
<표 4-12> 조사지침서 표준화 가이드라인	110
<표 4-13> 실시계획 주요 내용	113
<표 4-14> 통계작성 승인서 및 첨부 서류 등	114
<표 4-15> 통계작성 승인사항	115

<표 4-16>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시행절차	118
<표 5- 1> 기존 국가승인통계의 특징과 시사점	146
<표 5- 2> 인터뷰 대상자 특성	148
<표 5- 3> 인터뷰 질문 내용	149
<표 6- 1> 확률표본추출 및 비확률표본추출의 비교 분석	165
<표 6- 2> 단기 및 중·장기 내부 개선방안	169
<표 6- 3> 승인통계 처리 절차와 그에 따른 보완 및 권고사항	179

그림 목 차

[그림 1- 1] 연구 설계 및 추진전략	12
[그림 2- 1] 미디어리터러시 평가 기준 구조	19
[그림 2- 2] 개인의 역량 세부 기준, 하위 요소, 지표	20
[그림 2- 3] 환경적 요인 세부 기준, 하위 요소, 지표	22
[그림 2- 4] 가중화된 미디어리터러시 평가 기준 구조	26
[그림 2- 5] 유럽 국가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 평가 결과	27
[그림 2- 6]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의 통합 측정 방법론 컨셉	32
[그림 2- 7] 미디어리터러시의 구성요소 및 세부 인자 도식	33
[그림 2- 8] 2023 Media Literacy Index 클러스터별 지리적 분포	42
[그림 2- 9] Example of Community Report Card Findings.	46
[그림 4- 1] 통계작성 승인(협의) 절차	114
[그림 5- 1] 공식통계 판단을 위한 전체흐름도 (flow chart)	161
[그림 6- 1] 미디어리터러시 지수의 국가 승인통계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시사점	166
[그림 6- 2] 승인대상 관련 통계 조직 내부 업무 흐름도	172
[그림 6- 3] 미디어리터러시의 국가승인통계화를 위한 연차별 사업 추진 내용	181

요 약 문

1. 제 목

<미디어리터러시 지수의 국가승인통계 추진 타당성 및 방안 연구>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디지털 전환으로 촉발된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해, 우리 국민의 미디어리터러시를 측정하고, 정책활동을 전개해 온 역사는 어느덧 10여 년을 넘어 서고 있다. 도출된 연구 결과는 크게 두 가지 갈래로 구분할 수 있다. 환경 변화를 반영한 미디어리터러시 전반의 지수 추출 및 평가 문항의 구성과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운영하는 센터의 미디어교육 과정을 중심에 둔 효과성 파악이다.

우선 환경변화를 반영한 미디어리터러시 전반의 지수 추출 및 측정 문항의 구성은 지수 개발의 원형을 제시하거나, 앞선 연구의 맹점을 보완하는 방식을 취하며, 지속적인 결과를 도출해왔다. 선행연구들이 취한 논의의 출발은 유럽 등에서 도출된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및 측정 문항이었다. 하지만 이 지수를 활용해 국내 상황에 최적화되도록 구성하는 방식에 있어선 여전히 아쉬움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지수 구성의 출발이 우리와 다른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도출된 결과였고, 이를 차용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의도했던 미디어리터러시 지수에 철저히 최적화되었는가라는 의문이 남는 탓이다. 이와 같은 판단은 지수 구성의 원형으로 꼽히는 모델들이 미디어에 집중된 리터러시 지수라기보다는 디지털 혹은 정보 환경 등을 토대로 한 리터러시 모델들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디어를 넘어서는 폭넓은 개념들이 자연스럽게 추출된 지수 및 평가 문항의 구성에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흐름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운영하는 미디어센터 내 미디어교육 과정의 효과성 파악에 집중했던 연구들이다. 이 연구들은 도출된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및 평가 문항을 활용해 교육 과정 이수 후 실제 역량 강화가 일어났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런데 선행연구에서 제

시되고 있는 이 과정은 사실 최적화된 효과성 파악 절차로 판단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일반적으로 교육의 효과성을 판단하기 위해선, 교육의 목적에 따른 역량이 체계적으로 설정되고 교육내용이 구성된 뒤, 교육과정 이수 후 그 효과로서 의도한 역량 강화가 일어났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교육의 목표, 추구할 역량 그리고 교육의 효과를 판단할 평가 지표 등의 개발이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과정을 거친다. 미디어센터가 제공하는 교육과정은 그러나 목표에 따른 역량분류, 교육설계를 통한 내용 구축이 상대적으로 체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를 통해 개발된 지수 및 평가 지표 역시 교육 목표에 반드시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 개발된 지수 및 평가 지표를 시청자미디어센터 교육내용에 부합하는 효과성 판단지표로 최적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앞선 연구들에선 이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이다.

선행연구들은 연구가 수행되던 시점에서, 정책적 필요성과 수요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한 최적의 과정을 거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교육의 성과로서 미디어리터러시의 효과를 판단하는데 집중하거나, 특정 기관의 교육프로그램에 한정된 평가 도구로서 논의를 제한하는 방식 등은 주요 개선점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이는 주로 연구 재원의 한계 그리고 정책 목표 설정에 따른 일관된 통계 결과의 품질관리 등이 부족한 것에서 기인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언급한 한계를 극복하지 않고선 연구의 성과를 명확하게 계승하지 못한 채 통계 결과의 정책적 활용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해 일관된 통계분석 결과에 기반한 정책적 활용이 어려워지고, 조사 시점마다 파편화된 접근 방식과 해석을 가하게 되면서, 미디어리터러시 지수의 활용이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미디어리터러시 지수의 국가승인통계 추진의 정당성은 바로 이 지점에 존재할 수 있다. 국가승인통계가 되면, 미디어리터러시 지수는 품질관리 측면에서 매우 엄격한 관리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며, 조사 결과로부터 도출된 함의는 정책 목표 추진에 있어 방향타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파편화된 채 이뤄지는 조사내용 그리고 동어 반복적인 조사 행위 역시 체계화될 것이며, 일관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 목표 달성 여부도 효과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동안 다소 선언적 수준에 그치던 미디어리터러시 역량 제고가 가시적 수준으로 구체화 되고 성과 역시 분명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본 연구는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기존 미디어리터러시 연구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사 결

과의 객관성 및 활용성 담보 그리고 정책활용도를 증강시키기 위한 국가 승인통계 추진의 타당성을 분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추진의 타당성이 존재한다면 추진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정책적 노력들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본 연구는 기존 지수 개발 연구에서 나타난 다양한 문제, 예를 들어 샘플, 지수 개발과정의 체계성, 지수 및 평가 지표 구성의 간명화 등 지엽적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방식을 넘어서고자 한다. 미디어리터러시 역량을 측정하는 지수가 체계화됨으로써 지속 가능한 구조 속에서 조사의 결과물에 대한 정책활용도를 높이고 엄정한 품질관리를 통해 조사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바로 이 지점이 본 과제가 갖는 차별성이 될 수 있다.

연구진은 위의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승인통계화 추진의 정당성을 분석적으로 검토하고, 타당성이 존재한다면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본 연구의 주요 목표로 삼는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에서 개발된 미디어리터러시 지수가 표준화되고 객관화된 지표로써 폭넓은 정책적 활용도를 갖출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것이 이 연구의 차별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판단한다.

이상에서 논의된 연구의 내용과 범위를 축약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현황 분석 및 쟁점 진단

- 해외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개발 및 정책적 활용 현황
- 국내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개발 및 정책적 활용 현황
-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운용 및 정책적 활용 문제점 진단 및 과제

② 국가승인통계 추진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요건 분석

- 미디어리터러시 지수의 국가 승인통계 추진의 타당성 검토
- 국가승인통계 추진 형식 및 내용, 품질 요건에 대한 분석적 검토
- 미디어리터러시 지수를 국가 승인통계로 추진할 경우, 과제 및 시사점 도출

③ 국가 승인통계 추진을 위한 지수체계 개선안 및 정책 실행방안

- 국가 승인통계 추진 시,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보정 및 개선방안 수립

- 국가 승인통계 추진 시,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보정 및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적 대응책 수립
- 국가 승인통계 추진 시,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보정 및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적 로드맵 구성 및 제안

4. 연구 내용 및 결과

해외의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운용 사례에서 찾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디어리터러시 수준 향상은 개인적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가짜뉴스(Fake news)의 횡행은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미디어 정보에 대한 비판적 이해 능력 함양이 가짜뉴스를 근절시킴에 있어 근본적인 대책임을 시사한다. 그리고 미디어 정보에 대한 비판적 이해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미디어 활용 능력과 더불어 습득한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비판하는 능력이 반드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둘째, 미디어리터러시는 객관적인 측정 및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해외의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운용 사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디어리터러시 측정 방법론의 공통점은 개인의 미디어 활용 능력 및 미디어 사용 양상, 미디어 활용 과정에 있어 반드시 발휘되어야 하는 개인의 교육 정도를 설문을 통해 측정한다. 지표의 구성 방식 및 측정 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기는 하나,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본 장에서 소개한 해외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사례들은 설문 항목의 유사도가 높으며, 각 연구에서의 설문 항목들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충분히 갖춘 측정 도구의 구성요소로서 기능하고 있다.

국내에서 논의된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동향을 살피고,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한 사례들을 논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주요 선행연구들은 해외의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개발에서 출발하여 제시된 지수 체계를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정교화를 수행했다. 2017년 연구는 유럽시청자권익위원회(EAVI)의 2011년 자료를 바탕으로 유럽의 지수체계를 국내 상황에 맞게 수용하여 특수성을 반영한 지수로 발전시켰다. 아울러 연구진의 분석적 검토와 델파이 기법을 통한 지수 구성의 정교화, 구체화를 통해 지수 적합성을 검증했다. 이러한 지수 구성 체계에 있어서 주요 쟁점은 개인적 역량과 환경적 요소의 통합적 고려, 다양성 및 일관성 요소의 수용, 그리고 사회적 지표로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2009년 연구는 개발된 미디어리터러시가 갖추어야 할 원칙으로 포괄성, 종합성, 비교가능성을 제시했다. 현실의 미디어리터러시가 지수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 다양성 측면에서의 종합적 측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그리고 해당 지수가 비교 가능한 틀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지수 개발을 통해 미디어교육 평가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 현장의 효과성 측정 및 능력 향상에 있어서 균형성을 담보하는 교육 정책 마련에 집중했다. 특히 접근 능력, 비판적 이해능력, 창의적 표현 능력, 소통 능력이라는 네 가지 요건은 미디어리터러시의 표준화된 분류로 지금까지도 활용되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리터러시 역량을 측정하고자 논의된 2006년의 지수 개발 및 정교화에서도 각각의 판별 요소에 대한 구분 및 검사 목적 구체화, 도구 개발 및 테스트, 그리고 실제 활용이라는 목표를 강조했다. 특히 생애주기별 교육 실현을 위해 초등학교부터 대학 수준에 이르는 모든 교육기관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실현에 대한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지수의 활용에 대한 논의까지 개진되었다.

조사된 미디어리터러시 역량은 인구 특성에 따라 수준 차이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예컨대 2007년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 지역에 따른 차이, 학력 수준에 따른 차이,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 그리고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외 계층 등 집단별 정책 마련과 국가적 대응에 대한 근거 자료로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국가통계의 필요성에 주목하는 계연으로 귀결된다. 2009년 연구는 교육 성과에 대한 측정에 따라, 미디어 접근 능력의 높은 수준, 창의적 표현 능력의 낮은 수준을 짚어냈다. 아울러 미디어 교육과 학습 성향, 자기 효능감 등에서의 상관관계를 밝힘으로서, 교육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2006년 연구 역시 다양한 상황에서 측정을 위한 기준 마련을 강조했다. 정책적 계연으로서 국가 차원의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지표 및 지수 마련을 역설했다. 또한, 지수 개발을 통한 정책적 활용에 주목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비교적 최근에 수행된 세 건의 연구들은, 앞선 지수 개발을 목표로 수행된 논의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도출된 지수를 검토하고 이를 정책, 특히 미디어 교육 현장에서 측정과 활용에 집중했다. 2022년 수행된 연구는 2020년 지수 개발 연구의 검토 목적에서 출발하여, 이용자 관점을 반영하고, 전 국민 대상 조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목표를 분명히 했으며, 질문 항목 설계의 용이성을 고려해 보편적인 조사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했다. 지수 신뢰성과 유효성 향상을 위해 문항 타당도와 적합도를 평가했으며, 미디어리터러시에 대한 ‘비판적 이해’, ‘미디어 이용’, ‘생산과 표현’, ‘소통과 참여’, ‘성찰과 자기 보

호' 라는 정의들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구성된 6가지 핵심역량은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개발 및 평가의 틀을 제시했으며, 교육 및 정책 개발의 지침 마련을 지향했다.

국가승인통계화를 위한 절차와 내용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가승인 통계화를 위한 요건은 크게 형식 및 내용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더불어 국가승인통계 승인 절차에 대하여 검토했다. 이 과정을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조사에 적용할 경우, 갖게 될 함의 등도 추출해 제시했다. 이를 축약하면,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조사가 국가승인통계로서 지위를 획득하는 과정에선, 연계·활용을 위해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각 통계자료의 포괄범위(일반정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표주기(년, 월, 일), 시계열 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관해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전문가 대상 FGI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전문가들의 응답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는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압축됐다. 우선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조사의 국가승인통계 추진은 결국 전 국민의 미디어리터러시 역량 평가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 수립과 집행의 근간을 마련하는 부분에서 함의를 갖는다. 이는 또한 주무 부처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과 위상 확보는 물론, 종단적 연구로서 기초 조사를 제공하고 이를 국가 차원의 비교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삼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둘째,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조사의 국가승인통계 추진은 미디어 취약 계층에게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련된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근거 자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시의성과 함의는 지대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가 차원의 승인통계로서 파급력을 갖춘 조사 결과의 제시는 전 국민적 인식 개선 및 미디어리터러시 조사 및 정책 필요성의 정당화를 이끌어내는 근거가 될 것으로 인식하는 특성을 살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기술적 차원에서 국가승인통계 추진의 한계점들을 보완하고, 이를 일관되게 수행할 때, 미디어리터러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지원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는 결론에 대다수 응답자들의 동의가 이뤄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조사의 국가승인통계화의 정당성이 강하게 존재하며, 이를 통해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정책활용도 제고는 물론 낭비되는 정책자원을 최소화함으로써 도출된 결과물의 획기적 활용 및 관리가 가능하리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정책방안 및 로드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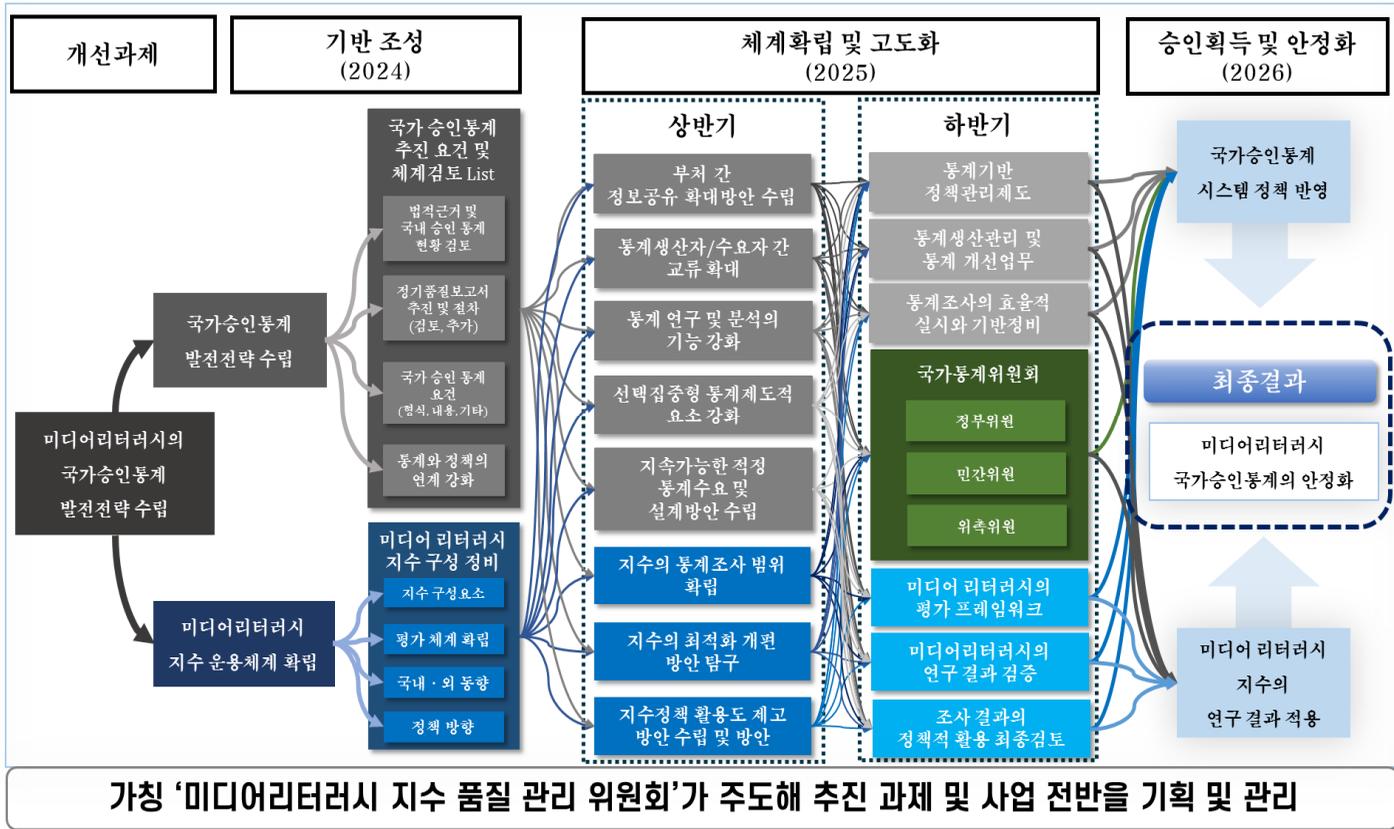
연구진은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조사를 국가승인통계화 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추진조직이다. 연구진은 추진조직으로서 가칭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품질관리 위원회’ 를 구성해, 지수의 국가승인통계화 과정의 사업 전반을 기획하고, 연차별 사업 및 지수 조사 과정의 품질을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둘째, 적합성 판단을 위한 업무 체계 구축이다. 국가승인통계화 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거쳐야 할 적합성 판단을 위한 업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셋째, 승인대상 분류 체계 확립 및 개선계획 수립이다. 승인통계 신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조사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안정되고 지속가능한 지수 조사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개선계획 수립 방안들을 제안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수립된 구체적인 로드맵은 다음 도식 “미디어리터러시의 국가승인통계화를 위한 연차별 사업 추진 내용” 과 같다.



< 미디어리터러시의 국가승인통계화를 위한 연차별 사업 추진 내용 >

SUMMARY

1. Title

A Study on the Feasibility and Plan of Promoting Nationally Approved Statistics of Media Literacy Index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Previous research on media literacy highlights the need for stringent quality control in developing the media literacy index. The implications derived from survey results are crucial for steering policy goals. This study aims to overcome limitations in existing media literacy research, focusing on promoting nationally approved statistics to ensure objectivity and usability and enhancing policy utilization.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1) Media Literacy Index Status Analysis and Issue Diagnosis:

- Evaluate overseas and domestic media literacy index development and policy utilization.
- Identify challenges in media literacy index operation and policy utilization.

2) Feasibility Review and Requirements Analysis for Promoting Nationally Approved Statistics:

- Assess the feasibility of promoting nationally approved statistics for the media literacy index.
- Analyze the format, content, and quality requirements for promoting nationally approved statistics.

- Identify challenges and implications in promoting the media literacy index as a nationally approved statistic.

3) Index System Improvement Plan and Policy Implementation Plan to Promote Nationally Approved Statistics:

- Propose measures for media literacy index correction and improvement when promoting nationally approved statistics.
- Establish policy response measures for media literacy index correction and improvement.
- Formulate and propose a policy roadmap for media literacy index correction and improvement during the promotion of nationally approved statistics.

4. Research Results

1) Implications from Overseas and Domestic Media Literacy Cases:

- Improving media literacy is tied to enhancing personal capabilities.
- Media literacy can be objectively measured and analyzed.

2) Research Trends and Analysis:

- Previous studies in Korea often started with the development of foreign media literacy indices.
- Media literacy should exhibit comprehensiveness, inclusivity, and comparability.

3) Procedure for Linking Nationally Approved Statistics:

- Identify data expressing the structure, properties, characteristics, and history of statistical data.
- Promote collaborative efforts to link and utilize nationally approved statistics on media literacy, establishing a governance system.

4) Results of FGI for Media Literacy Experts:

- A foundation for social consensus and policy support can be established through improved national awareness.
- Complementing limitations in promoting statistics and managing them consistently as an institution will contribute to national-level approval.

5) Internal Detailed Plan for Promoting Nationally Approved Statistics:

- Ensure consistency in writing in survey items.
- Categorize 'media literacy' as the main category and 'media' and 'literacy' as subcategories to create approval statistics.

5. Policy Suggestions & Roadmap

This study proposed three approaches to turn the media literacy index survey into nationally approved statistics.

- Firstly, making the promotion organization. It was proposed to form a tentatively named 'Media Literacy Index Quality Control Committee' as a promotion organization to plan the overall project of the nationally approved statisticalization process of the index.
- Secondly, establishing a work system for determining suitability. It was proposed to efficiently construct a work system for judging suitability at each stage in the national approval statistics process.
- Thirdly, establishing a system to classify media literacy index statistics. It was proposed to effectively respond to applications for approved statistics, we proposed measures to establish an improvement plan to secure the differentiation of the media literacy index survey and establish a stable and sustainable index survey structure.
- The specific roadmap has been showed in section 3 of chapter 6.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디지털 전환으로 촉발된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해, 우리 국민의 미디어리터러시를 측정하고, 정책활동을 전개해 온 역사는 어느덧 10여 년을 넘어 서고 있다. 도출된 연구 결과는 크게 두 가지 갈래로 구분할 수 있다. 환경 변화를 반영한 미디어리터러시 전반의 지수 추출 및 평가 문항의 구성과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운영하는 센터의 미디어교육 과정을 중심에 둔 효과성 파악이다.

우선 환경변화를 반영한 미디어리터러시 전반의 지수 추출 및 측정 문항의 구성은 지수 개발의 원형을 제시하거나, 앞선 연구의 맹점을 보완하는 방식을 취하며, 지속적인 결과를 도출해 왔다. 선행연구들이 취한 논의의 출발은 유럽 등에서 도출된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및 측정 문항의 도출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이다. 관건은 이 지수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국내 상황에 최적화 되도록 지수 및 측정 문항을 구성하는 방식에 있어서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이다. 기존 연구가 취한 과정은 주로 당시 연구진이 수행한 문헌분석과 전문가 인터뷰 등을 반영한 결과였다. 이는 타당한 방식일 수 있으나, 지수 구성의 출발이 우리와 다른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도출된 결과이기에 이를 차용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의도했던 미디어리터러시 지수에 철저히 최적화되었는가라는 의문이 남는다. 이와 같은 판단의 이유는 지수 구성의 원형으로 꼽히는 모델들이 미디어에 집중된 리터러시 지수라기보다는 디지털 혹은 정보 환경 등을 토대로 한 리터러시 모델들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디어를 넘어서는 폭넓은 개념들이 자연스럽게 추출된 지수 및 평가 문항의 구성에 반영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두 번째 영역인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운영하는 미디어센터 내 미디어교육 과정의 효과성 파악에 집중했던 연구는 도출된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및 평가 문항을 활용해 교육과정 이수 후 실제 역량 강화가 일어났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런데 선행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이 과정은 사실 최적화된 효과성 파악 절차로 판단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교육의 효과성을 판단하기 위해선, 교육의 목적에 따른 역량이 체계적으로 설정되고 교육내용이 구성된 뒤, 교육과정 이수 후 그 효과로서 의도한 역량 강화가 일어났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교육의 목표, 추구할 역량 그리고 교육의 효과를 판단할 평가

지표 등의 개발이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과정을 거친다. 미디어센터가 제공하는 교육과정은 그러나 목표에 따른 역량분류, 교육설계를 통한 내용 구축에 있어 다소 아쉬운 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를 통해 개발된 지수 및 평가 지표 역시 보완할 영역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현재 개발된 지수 및 평가 지표를 시청자미디어센터 교육내용에 부합하는 효과성 판단지표로 최적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앞선 연구들에선 이를 추구했으나 다양한 변수로 인해 여전히 아쉬운 면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 밖에도 선행연구들이 갖는 일부 한계들이 존재하는데, 지수 및 평가지표의 타당성을 입증할 검증 과정에 활용된 표본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는 연구 재원의 한계로 부득이하게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안게 된 한계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선된 연구를 진행한다면, 반드시 적정 규모의 샘플을 확보해 지수 및 평가 지표의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존재한다.

선행연구들은 연구가 수행되던 시점에서, 정책적 필요성과 수요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한 최적의 과정을 거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이들 연구가 갖는 한계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여전히 존재한다. 교육의 성과로서 미디어리터러시의 효과를 판단하는데 집중하거나, 특정 기관의 교육프로그램에 한정된 평가 도구로서 논의를 제한하는 방식 등은 주요 개선점 가운데 하나다. 이는 주로 연구 재원의 한계 그리고 정책 목표 설정에 따른 일관된 통계 결과의 품질관리 등이 부족한 것에서 기인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언급한 한계를 극복하지 않고선 연구의 성과를 명확하게 계승하지 못한 채 통계 결과의 정책적 활용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해 일관된 통계분석 결과에 기반한 정책적 활용이 어려워지고, 조사 시점마다 파편화된 접근 방식과 해석을 가하게 되면서, 미디어리터러시 지수의 활용이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미디어리터러시 지수의 국가승인통계 추진의 정당성은 바로 이 지점에 존재할 수 있다. 국가승인통계가 되면, 미디어리터러시 지수는 품질관리 측면에서 매우 엄격한 관리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며, 조사 결과 도출된 함의는 정책 목표 추진에 있어 방향타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파편화된 채 이뤄지는 조사내용 그리고 동어 반복적인 조사 행위 역시 체계화될 것이며, 일관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목표 달성 여부도 효과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동안 다소 선언적 수준에 그치던 미디어리터러시 역량 제고가 가시적 수준으로 구체화되고 성과 역시 분명해질 수 있다.

한국미디어패널조사,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등이 국가승인통계로 지위가 격상되면서, 통계품질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로 통계 결과에 대한 신뢰가 상승했던 점은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방통위, 과기정통부 등 정책당국이 국가통계로 격상된 통계치를 근거로 다양한 정책 기획 및 수립 그리고 집행에 이르는 전반적 활동을 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조사의 국가승인통계 추진의 필요성은 상당 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진은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기존 미디어리터러시 연구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사 결과의 객관성 및 활용성 담보 그리고 정책활용도를 증강시키기 위한 국가 승인통계 추진의 타당성을 분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추진의 타당성이 존재한다면 추진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정책적 노력들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내용과 범위

지난 2012년부터 정책연구과제로 수행되고 있는 미디어리터러시 관련 연구는 안정임과 서운경의 SNS시대의 한국 디지털미디어리터러시 지수 개발 및 측정 조사가 최초였다. 이후 다수의 연구(안정임·서운경·김성미, 2013; 천혜선·이찬구·성지연·이수연, 2016; 김경희·김광재·이숙정, 2017; 심재웅·전주혜·신명환·김민주·유지윤·천혜선, 2020; 심재웅·신명환·김민주·유지윤, 2021; 신명환·최혜궁·최현정·이현준, 2022)가 이어지며 지수개발, 측정 문항 개발, 실증 조사 등의 과정이 지속적으로 수행됐다.

기존 연구들은 연구의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급격히 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선행연구가 갖는 한계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제시한 것처럼 타당성 입증을 위한 실증적 검증과정에 활용된 샘플규모가 적어 타당도를 온전히 확보하기 어려웠거나 역량 분류, 교육설계, 효과성 분석의 체계적 과정이 세밀하게 논의되지 못한 채 역량평가지표 발굴에만 노력을 기울인 측면이 있다. 근본적으로는 유럽의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및 평가지표를 참고함에 따라 미디어 뿐 아니라 다른 영역의 리터러시 평가 지표가 혼재되어 구성된 측면들 역시 극복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된다.

2012년 처음으로 시작한 안정임·서운경·김성미(2012)의 디지털미디어리터러시 지수 개발 및 측정연구는 기존 미디어리터러시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고, 정책적 시사점이 강한 지수개발을 시도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수의 표준화 시도로 인해 다양한 영역의 지표가 비교될 수 있도록 시도한 부분과 이를 통해 리터러시 관련 현황을 과학적으로 파악하게 했다는 점이 여타 다른 연구에 비해 강점으로 부각된다. 그러나 지수 구성에 이르는 과정의 제시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지수 구성의 구조화 부분이 사후검증 방식에만 치우쳐 있다는 점 등이 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표준화 시도가 연구의 큰 의의로 부각되기도 하지만 과연 이것이 유의미한 방법인지에 대한 논쟁도 불러왔다. 집단별 차이의 구성이 정확히 정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적 비교를 위한 표준화 작업의 타당성에 의문을 갖는 시선이 존재하는 것이다. 특히 교육의 효과와 다른 사회적 효과의 구분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체계화되고 표준화된 미디어리터러시 지수의 시도 측면만으로도 후속 연구들에게 방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어 높이 평가될만 하다.

2013년에는 안정임·서윤경·김성미(2013) 등이 주도한 연구가 이뤄졌다. 이 연구는 과거 수행된 교육 평가 도구 개발 및 성과 측정 연구에서 도출된 지수를 정교화하는데 집중했으며, 이전 연구를 승계해 미디어리터러시 지수의 고도화를 추구하면서, 연속성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대부분의 연구가 일회성으로 그치는 가운데 몇 안되는 연속적 연구라는 측면에서 이 연구는 높게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이전 연구에서 지적되었던 지수 구성 과정의 논리적 절차가 여전히 아쉽다는 지적이 있다. 2012년 연구에 이어 2013년 연구에서도 지수체계 구성 방식이 연구진의 판단과 해석에 의존하고 있으며, 근거를 들었다하더라도 대부분 2012년의 개발과정에서 도출한 결과만 제시하고 있는 탓이다. 이는 연속성을 갖지만 엄연히 다른 연구임에도 이전 연구의 분석을 그대로 가져옴으로써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2016년에 진행된 천혜선·이찬구·성지연·이수연(2016)의 연구는 지수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교육의 성과를 판단하고 측정하는 측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시청자미디어재단 교육프로그램의 성과를 판단하고 검증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어 지수 구성 체계 확립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목표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연구는 되지만 이전 연구와 비교할 때 확장하여 적용될 가능성은 줄어 들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2016년에 진행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범용성과 적용 가능성이 좁다는 약점을 지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방법론적으로는 이전보다 진일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수의 구성 영역별 가중치를 부여해 각 영역에 대한 차별화된 해석과 적용을 가능케 했다는 점은 높게 평가할만하다.

지수개발 연구는 2020년에도 이어졌다(심재웅·전주혜·신명환·김민주·유지윤·천혜선, 2020). 2020년 연구에서는 기존 역량지수에 비해 최소한의 추상성을 담보하여 미디어 환경 변화나 기술개발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전에 계속해서 비판받아 온 적용 가능성을 넓힌 것이다. 또한, 측정항목이 지나치게 많았던 기존 지수와 다르게 항목의 최적화를 시도하여 응답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를 하였다. 응답자가 항목을 적게 보고 집중하여 설문에 응한다면 그만큼 객관적이고 질 높은 데이터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지수의 검증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표본의 검증이 이루어졌으며, 지수의 검증 체계화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는 측면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

2021년에는 2020년의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졌다(심재웅·신명환·김민주·유지윤, 2021). 실태조사 샘플이 적다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사대상 수를 늘렸

으나 여전히 미디어센터 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샘플이 유의미한 통계적 분석이 가능한 만큼 수집되지 않는 문제 등이 발생했다. 연구의 연속성 측면에서 기존 2020년 연구의 보완은 되었으나 하나의 독립된 연구로 합의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2022년 연구(신명환·최혜궁·최현정·이현준, 2022)는 가장 최근에 이뤄진 연구로 유럽의 미디어리터러시 지수를 종합 추출하여 새로운 형식의 지수개발을 했다는 측면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미디어리터러시에 강한 관심을 갖고 있는 유럽 여러 지수를 종합 정리한 것은 후속 연구에도 합의하는 바가 클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이것이 이 연구의 한계점이 될 수 있다. 기존에 개발되고 수정되었던 많은 지수들의 반영은 거의 없이 유럽 지수 차용에 집중하다 보니 사회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2021년 연구에 비해 샘플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500명의 샘플을 가지고 연령별, 지역별 특징을 분석하려다 보니 객관성 측면에서 약점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수개발에 집중한 학술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최근 미디어리터러시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지수 자체에 대한 접근보다는 미디어리터러시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탐색하는 교육학적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장애아동부터 고등교육의 교과서, 대학 기초교양 교육 등에서의 미디어리터러시의 역할에 대한 사례 연구 및 외국과의 비교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손미란, 2022; 이정은·김병련·조은지·윤혁, 2023; 전영은·정문성, 2022). 미디어적 측면에 한정하면 미디어메시지 리터러시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심미선, 2022)을 분석하거나 미디어리터러시를 활용한 알고리즘 접근 사례 등을 분석한 연구(오세욱·윤현옥, 2022)가 최근에 이뤄졌다. 상대적으로 지수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독립된 학술연구로 이루어지기에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많고, 연구 범위가 넓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세부적 항목에 대한 미디어리터러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논의를 종합하면, 제법 오랜 기간에 걸쳐 미디어리터러시 역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객관화하려는 시도들이 공공영역과 학계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져 왔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결과들이 응축되고 활용되는 방식은 정책적 관점에서 그리 효과적으로 다뤄지지 못한 면이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문제 발생의 원인을 다양한 경로에서 찾을 수 있지만, 현 상태에서 단편적 연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일시적 방안 모색은 임시방편에 가까울 수 있다. 기존 조사 및 분석 결과가 한정된 자원과 일시적 필요에 의존해 이뤄졌던 탓에 일부 원인을 해소할들 근본적인 처방이 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본 연구는 따라서 기존 지수개발 연구에서 나타난 다양한 문제, 예를 들어 샘플, 지수 개발 과정의 체계성, 지수 및 평가 지표 구성의 간명화 등 지엽적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방식을 넘어 서고자 한다. 미디어리터러시 역량을 측정하는 지수가 체계화됨으로써 지속 가능한 구조 속에서 조사의 결과물에 대한 정책활용도를 높이고 엄정한 품질관리를 통해 조사의 신뢰를 확보할 방안에 초점을 맞춰야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이 본 과제가 갖는 차별성이 될 것이다.

국가승인통계화 추진의 정당성을 이 과정에서 찾아 검토하고,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본 연구의 주요 목표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에서 개발된 미디어리터러시 지수가 표준화되고 객관화된 지표로써 폭넓은 정책적 활용도를 갖출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것이 이 연구의 차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된 연구의 내용과 범위를 축약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현황 분석 및 쟁점 진단

- 해외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개발 및 정책적 활용 현황
- 국내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개발 및 정책적 활용 현황
-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운용 및 정책적 활용 문제점 진단 및 과제

② 국가승인통계 추진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요건 분석

- 미디어리터러시 지수의 국가 승인통계 추진의 타당성 검토
- 국가승인통계 추진 형식 및 내용, 품질 요건에 대한 분석적 검토
- 미디어리터러시 지수를 국가 승인통계로 추진할 경우, 과제 및 시사점 도출

③ 국가 승인통계 추진을 위한 지수체계 개선안 및 정책 실행방안

- 국가 승인통계 추진 시,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보정 및 개선방안 수립
- 국가 승인통계 추진 시,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보정 및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적 대응책 수립
- 국가 승인통계 추진 시,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보정 및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적 로드맵 구성 및 제안

제3절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제한된 연구 기간 내에서 상정하고 있는 목표에 효과적으로 도달하기 위해 연구의 각 단계들이 도출한 시사점이 상호 조응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우선 연구를 6단계로 구성하고, 각 단계가 모두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선후 단계에서 서로 조응하며 단계별로 도출된 결과가 점차 명확해지는 구조를 취하도록 했다.

연구 착수 후, 현황분석 단계에선 연구과제의 범위 및 내용 그리고 요구사항 파악 을 구체화한다. 이 단계에서 진행될 주요 연구는 정책 추진 방향과 지수 조사 실무 영역간 간극(Gap)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설계전략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의 의견을 집중 청취할 계획이다. 이 과정엔 미디어, 통계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가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들은 정책성과 혹은 현장에 존재하는 각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치우친 결과가 도출되지 않도록 상호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는 시스템을 통해 분석 결과가 정제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현황 분석, 사례 분석 등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조사를 고도화하고, 정책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히 국가승인통계화를 추진하는데 따른 이불리를 점검하고 타당성을 확인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내외 사례분석은 물론 기존 미디어리터러시 조사 연구를 포괄적이며 분석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를 거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선 문헌분석 및 해석적 메타분석 과정이 적용될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이와 같은 논의를 구체화하고, 실제 제안될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미디어리터러시 지수의 국가승인통계 추진의 정당성이 존재한다면, 이를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가장 효과적인지를 살피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다.

본 연구에서 활용될 방법론은 모두 세 가지로, 문헌분석, 심층인터뷰, 해석적 메타분석 등임. 이 가운데 실증분석 방법으로서 적용될 심층인터뷰와 해석적 메타분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심층인터뷰를 통한 정책 추진의 주요 고려점 도출

- 심층인터뷰를 시도하고자 하는 이유는 정책목적의 타당성 검토, 정책 추진의 주요 고려점 도출 그리고 정책 추진의 효율적 절차 및 방식 등을 폭넓게 검토하고 이를 구성하기 위한 단초를 얻기 위한 것임. 본 연구는 미디어리터러시 분야 전문가, 방통위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정책 실무 담당자, 통계청 국가승인통계 업무 담당자 및 관련 전문

가 등을 선별해 인터뷰 대상으로 구분할 계획임. 이 그룹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가 승인통계 정책 추진을 위한 다양한 고려요소를 추출한 뒤, 이를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분석 과정에 반영하고자 함.

- 구체적인 조사 및 분석범위는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음.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조사를 국가승인통계화 하기 위해 지수 조사가 갖춰야 할 각 단계별 구조적 적합성과 지수 구성개념의 합리성강화 방안,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측정개념 및 변인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각 개념 및 변인에 대한 간명화 및 중복도 최소화를 위한 보완과 수정방안. 이를 통해 국가승인통계 추진 과정에서 균형 있는 접근과 측정이 이뤄지기 위한 절차, 국가승인통계 추진을 위한 지수 및 평가문항의 체계화 방안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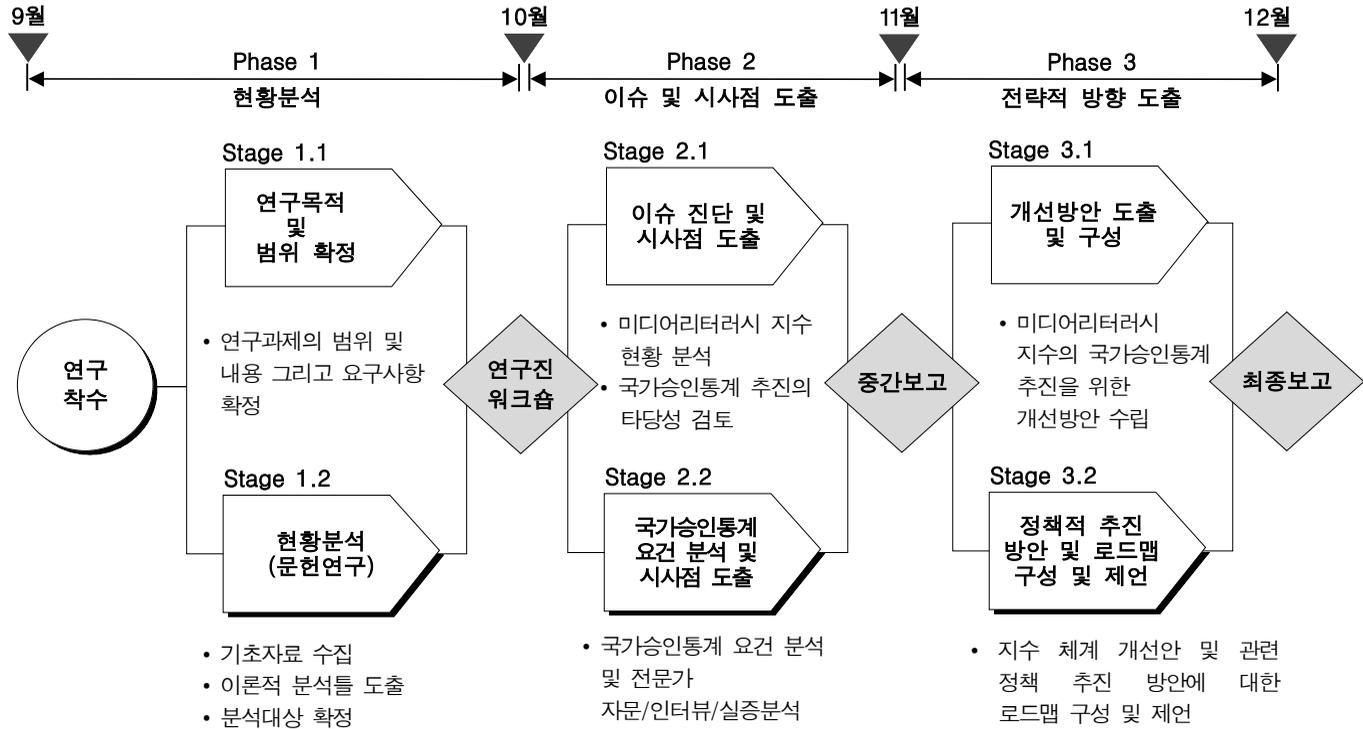
② 해석적 메타분석을 활용한 지수 운용의 시사점 도출

- 해석적 메타분석은 질적 연구의 통합적 검토를 위해 논의된 질적-해석적 메타분석(QIMS, Qualitative Interpretive Meta-synthesis)의 일환으로서, 해석 중심의 연구를 체계화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기되었음(Evans, 2003; Weed, 2008; 길태영, 2019). 다시 말해 질적 연구를 개별 연구주제로 분류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해석하는 방법론으로(Aguirre & Bolton, 2014), 엄밀하게는 질적 연구에만 주목하는 ‘Meta-Ethnography’ 중심의 접근으로 국한될 수 있음. 그러나 질적 연구 중심의 논의를 넘어서, ‘해석적’이라는 개념에는 개별 연구를 통합적으로 집계하면서 상황적 맥락에 따라 구조화하고 그 특징과 가치를 분석하는 맥락이 담겨 있음(Sandelowski & Barroso, 2003).
- 본 연구 과제에 해석적 메타분석을 적용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기존 미디어리터러시 조사 연구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피고, 각 조사 연구들이 보인 특징 등을 파악해 조사 연구가 한 단계 더 강화된 의미를 갖기 위해 추진되어야 할 내용을 종합적으로 구성해 본 뒤,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임.

- 본 연구는 연구 시작 및 주제 설정의 과정을 분석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을 수행한 뒤, 미디어리터러시와 관련된 기존 연구를 검토하는 단계부터 수행하여 그 관계성(관련성)을 파악하고 개념들의 상호 변형을 통한 현상을 해석하는 틀을 개발하는 차원에 집중할 계획임
- 해석적 메타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국가승인통계 추진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이를 타당한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한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됨.

이상에서 언급된 각 단계는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돼, 그 성과들이 체계적으로 도출되도록 구조화할 것이며, 이를 전체적으로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구 설계 및 추진전략



제 2 장 해외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운용 현황

2000년대 초반부터 높은 상호작용성을 바탕으로 하는 뉴미디어(New-media)의 사용이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최근 20년간 허위정보(Disinformation)의 유통 또한 급증하였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여 있는 유럽의 경우, 문화적 다양성을 기반으로 수많은 정치적 현안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허위정보들 또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15년부터 시작된 난민수용 이슈 기반 인종 차별 주의와 국수주의의 확산,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Brexit)와 관련한 가짜뉴스 확산 등 허위정보의 유통은 유럽 지역의 통합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허위정보 규제를 위한 자율규제 중심의 공식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18¹⁾).

2023년 2월, 유럽위원회가 공표한 「미디어리터러시 기술의 증진 및 개발을 위한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은 민주주의의 시민으로서의 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허위정보를 적극적으로 근절하고자 하는 국가 연합 차원의 대응 방안으로 볼 수 있다.

미디어리터러시는 허위정보 판별 측면에서 민주사회 시민들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정량화·가시화된 미디어리터러시 역량은 개인 또는 집단이 허위정보 확산과 같은 미디어 부작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척도로써 기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유럽, 미국 등 다양한 국가와 권역에서 미디어리터러시 지수를 개발해 적극적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 또한 바로 이와 같은 이유다.

이에 본 장은 유럽시청자권익위원회(EAVI),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불가리아 Open Society Institute - Sofia, 미국 Media Literacy Now에서 운용 중인 미디어리터러시 측정 도구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디어리터러시는 미디어에 대한 접근 능력, 미디어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능력, 미디어를 비판하는 역량, 미디어를 적절하게 생산·활용할 수 있는 역량으로 그 개념에 대한 합의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미디어리터러시를 측정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측정 도구의 세부 구성요소들은 측정 대상 및 측

1) European Commission (2018).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disinformation : Report of the independent High level Group on fake news and online disinformation. Luxembourg ::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정 주체의 의도,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앞서 소개한 4개 미디어리터러시 측정 도구 개발 주체가 공개한 5개 방법론을 세부 구성요소 측면에서 면밀히 분석하고 각 측정 도구들이 지니는 특징과 측정 도구들 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위주로 시사점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제1 절 유럽위원회의 미디어리터러시 지침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23년 2월 21일, 「미디어리터러시 기술의 증진 및 개발을 위한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²⁾」(Guidelines pursuant to Article 33a(3) of the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on the scope of Member States' reports concerning measures for the promotion and development of media literacy skills, 이하 “지침”)을 공표하였다. 해당 지침은 미디어리터러시의 증진 및 개발을 목적으로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유럽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보고서의 범위 및 내용, 미디어리터러시 평가 수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 제출된 보고서는 유럽연합 각국의 미디어리터러시 관련 특수성을 반영한 사례로 공유된다.

지침은 「디지털 교육 실행 계획(2021-2027)³⁾」, 「유럽 민주주의 실행 계획⁴⁾」의 일부이며, 2025년까지 EU 회원국들이 「European Education Area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추진 동력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이는 유럽위원회가 현재 진행 중인 Erasmus+ Programme⁶⁾, European Solidarity Corps⁷⁾ 및 eTwinning⁸⁾과 상호 연계하여 「허위정보

2) European Commission (2023).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Guidelines pursuant to Article 33a(3) of the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on the scope of Member States' reports concerning measures for the promotion and development of media literacy skills」, Brussels, 21.2.2023 C(2023) 1105 final.

3) European Commission, 「Digital Education Action Plan (2021-2027)」, Retrived from <https://education.ec.europa.eu/focus-topics/digital-education/action-plan>

4)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Democracy Action Plan」, Retrived from https://commission.europa.eu/strategy-and-policy/priorities-2019-2024/new-push-european-democracy/european-democracy-action-plan_en#documents

5)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Education Area」, Retrived from <https://education.ec.europa.eu/>

6) 교육, 연수, 청년,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실시되는 다양한 프로젝트, 파트너십, 행사 및 이동성을 지원하는 EU 프로그램으로 유럽 국가 간 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와 전 세계 파트너 국가들이 위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https://erasmus-plus.ec.europa.eu/>)

7) 유럽연대단(European Solidarity Corps)은 유럽위원회 산하 조직으로, 만 18세 이상 30세 미만 청년들이 해외 또는 국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지원·독려하는 조직(<https://youth.europa.eu/solidarity>)

(Disinformation)」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유럽위원회가 추진 중인 여러 교육 관련 정책 수행을 보완한다. 특별히, 허위정보에 맞서는 과정에서 미디어리터러시 영역은 Creative Europe Programme⁹⁾과 European Digital Media Observatory¹⁰⁾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야이다.

유럽위원회는 2022년 5월, 유럽위원회 소속 비공식 미디어리터러시 전문가 그룹이 발간한 「교육 및 훈련을 통한 허위정보 대처 및 디지털 리터러시 증진에 관한 위원회 전문가 그룹의 최종 보고서¹¹⁾」(Final report of the Commission expert group on tackling disinformation and promoting digital literacy through education and training, 이하 “최종 보고서”)를 골자로 본 지침을 마련하였다. 최종 보고서는 시민들이 현시대의 미디어 환경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역량을 갖추는 것과 더불어 허위정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또한, 현재 미디어 환경의 능동성·복잡성으로부터 기인된 주요 과제들과 이에 대한 잠재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최종 보고서는 허위정보가 어떻게 기술적(technological), 심리적(psychological)으로 확산되는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① 디지털 리터러시, ② 교사의 요구사항, ③ 미디어리터러시 전문 교육자의 요구사항, 그리고 ④ 회원국 전역으로의 효과적인 적용 방안의 네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8) 유럽연합 회원국의 교육기관들이 정보통신기술(ICT)을 사용하여 상호 협력하도록 장려하는 이니셔티브 중 하나로, eTwinning 활동에 등록된 교육자는 인프라(온라인 도구, 서비스, 기타 지원 등)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ICT를 사용하여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다른 유럽 국가의 교사와 협력하여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공동 교육 프로젝트를 수행 가능 (<https://school-education.ec.europa.eu/en/etwinning>)

9) Culture strand, Media strand, Cross-sectional strand의 3개 영역에서 문화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에 이루어지는 투자 프로그램으로, 2021년부터 2027년까지 24억 4천만 EURO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음(<https://culture.ec.europa.eu/creative-europe>)

10) 허위 정보에 맞서 싸우는 독립 단체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이해관계자 간 상호 협력을 통해 정책 입안자를 지원하도록 장려하는 프로젝트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european-digital-media-observatory>)

11) European Commission (2022). 「Final report of the Commission expert group on tackling disinformation and promoting digital literacy through education and training」. B-1049 Brussels.

유럽 회원국이 작성해야 할 미디어리터러시 보고서에는 ① 법적·정책적 조치 사항, ② 정부 조직 차원의 조치 사항, ③ 미디어리터러시 증진을 위한 자금 조달 계획(공공 자금 등), ④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커리큘럼을 포함하는 참여 및 인식 제고 활동, ⑤ 미디어리터러시 평가 수단 및 방법의 5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첫 번째로, ① 법적·정책적 조치 사항은 각 유럽 회원국의 미디어리터러시 관련 입법 조치와 각국이 시행하고 있는 미디어리터러시 관련 법적·정책적 조치, 그리고 미디어리터러시를 증진하고 개발하기 위해 계획된 조치를 모두 포함한다. 조치의 대상은 넓은 범위에서의 미디어리터러시(모든 미디어 서비스 및 정보 사회 서비스를 포함)를 의미한다. 또한, 미디어리터러시 관련 법적·정책적 조치 사항이 회원국에 속하는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제공 사업자 및 비디오 공유 플랫폼 제공 사업자에게 시행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회원국은 각 사업자들에게 해당되는 조치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② 정부 조직 차원의 조치 사항은 미디어리터러시와 관련한 각 유럽 회원국의 정부 조직 차원의 조치 사항을 의미한다. 특히, 회원국은 미디어리터러시 증진을 장려하고 개발할 책임과 더불어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는 정책당국 및 기관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회원국은 미디어리터러시와 관련하여 정책당국 및 기관과 협력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협력 구조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세 번째로, ③ 미디어리터러시 증진을 위한 자금 조달 계획은 회원국이 미디어리터러시를 증진하고 개발하기 위해 할당된 공공 예산의 범위와 기간을 명시해야 함을 의미한다. 공공 예산은 국가 차원의 편성을 의미한다. 또한, 회원국은 미디어리터러시 증진을 위한 민간 자금 유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④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커리큘럼을 포함하는 참여 및 인식 제고 활동은 회원국이 정규 교육 그리고 평생 교육 과정의 관점에서 모든 연령층의 미디어리터러시를 증진하고 개발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참여 또는 인식 제고 활동 전체를 포괄한다. 회원국은 시장 참여자, 과학 단체 또는 비정부기구가 수행하는 관련 참여 및 인식 제고 활동을 참조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미디어리터러시 캠페인 및 교육 활동을 예로 들 수 있다. ⑤ 미디어리터러시 평가 수단은 미디어리터러시 증진을 위한 회원국의 모든 노력에 대한 영향 평가를 의미한다.

유럽연합 회원국은 미디어리터러시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회원국은 유럽위원회에서 제시하는 평가 방법론을 사용할 수 있다. 세 가지 방법론은 ① 「미디어리터러시 수준 평가 기준에 관한 연구¹²⁾」(Study on Assessment Criteria for Media Literacy Levels), ② 「유럽에서의 미디어리터러시 수준 평가를 위한 테스트 및 개선 기준¹³⁾」(Testing and Refining Criteria to

Assess Media Literacy Levels in Europe), ③ 「글로벌 미디어 및 정보 리터러시 평가 프레임워크¹⁴⁾」(Global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Assessment Framework)이다. 본 연구는 지수 측면에서 미디어리터러시 측정 방법론에 중점을 두어 앞서 언급한 세 가지 방법론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국내에서 개발되고 활용되고 있는 미디어리터러시 지수가 정책 실행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한 전제와 조건들을 탐구하며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미디어리터러시 수준 평가 기준(유럽시청자권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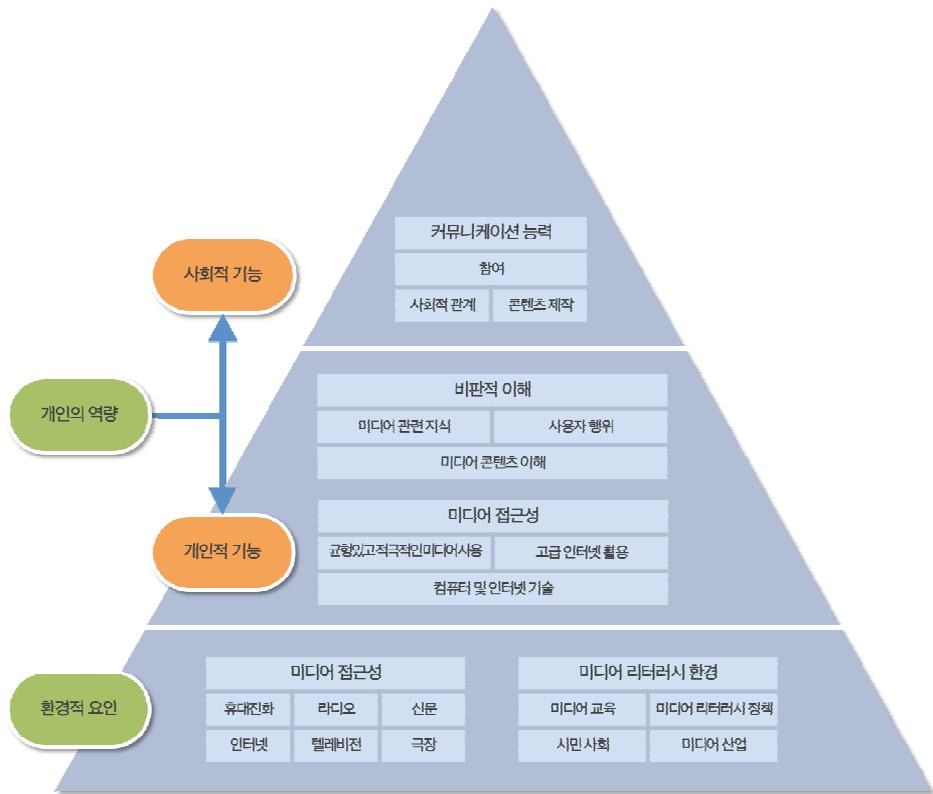
유럽위원회에서 공개한 「미디어리터러시 수준 평가 기준에 관한 연구」는 미디어리터러시를 크게 “개인 역량”과 “환경 요인”의 두 가지 기본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각 분야의 구성요소들은 상호 연관되나, 세부적인 독립 요소들로 나누어져 있다. 첫째, 개인 역량(Individual Competences)은 특정 기술(특히 인지 처리, 분석, 커뮤니케이션 등을 포함)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역량을 의미한다. 개인의 역량은 광범위하며, 인식의 증가(Increasing levels of awareness), 비판적 사고 역량(The capacity for critical thought), 메시지 생성 및 전달 능력(An ability to produce and communicate a message) 등을 포함한다. 개인 역량은 개인적 역량, 사회적 역량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개인 역량은 ① 사용(개인의 미디어리터러시 기술 능력), ② 비판적 이해(개인의 이해도와 해석의 유창함)으로, 사회적 역량은 ③ 의사소통(미디어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는 개인의 능력)으로 정의된다.

두 번째로, 환경 요인(Environmental Factors)은 정보 가용성, 미디어 정책, 교육, 미디어 이해 관계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포함하며, 넓은 범위에서 미디어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상황 요인들로 정의된다. 환경 요인은 ① 미디어 교육, ② 미디어 활용 정책, ③ 미디어 산업, ④ 시민사회, ⑤ 미디어 및 정보의 가용성의 5개 세부 요소들로 구성된다([그림 2-1]).

12) European Association for Viewers Interests (2009). Study on Assessment Criteria for Media Literacy Levels: A comprehensive view of the concept of media literacy and an understanding of how media literacy level in Europe should be assessed, Final Report.

13) European Commission (2011). Testing and Refining Criteria to Assess Media Literacy Levels in Europe, Final Report.

14)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2013). Global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Assessment Framework: Country Readiness and Competenc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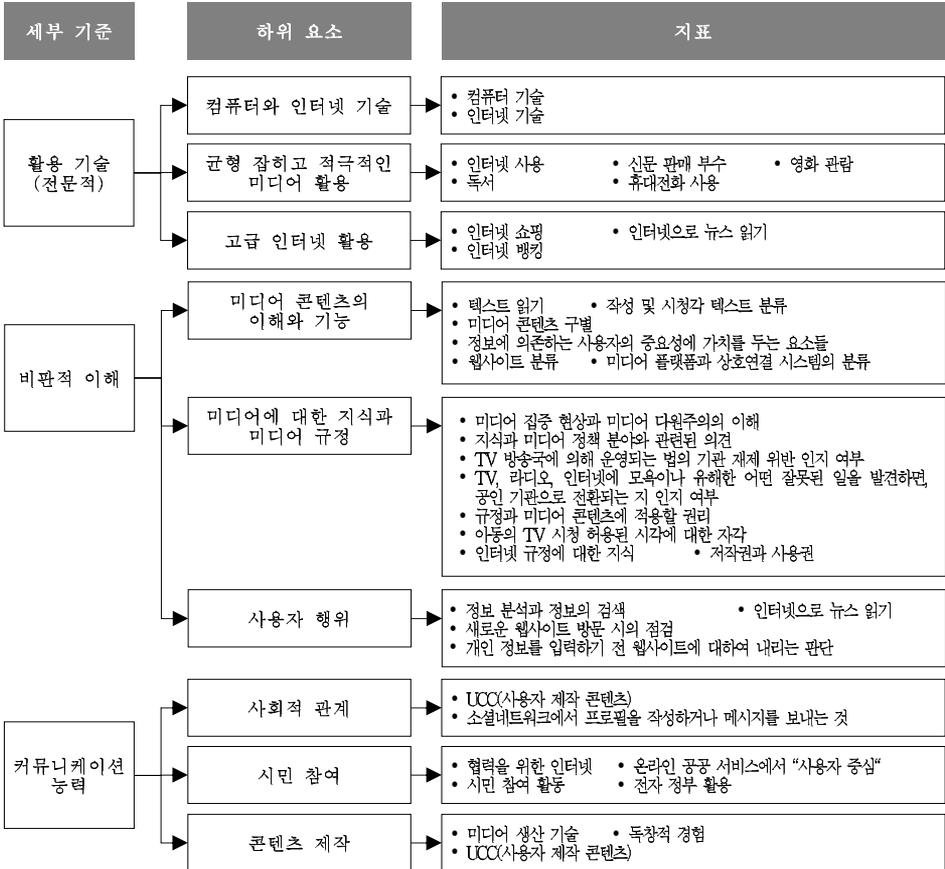


[그림 2-1] 미디어리터러시 평가 기준 구조

* 출처 : EAVI(2009). Study on Assessment Criteria for Media Literacy Levels.

가. 개인적 역량(Individual Competence)

개인은 미디어를 통해 잠재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함양하게 된다. 사회적 관계는 미디어를 통해 개인과 집단의 관계에 대한 잠재적인 가능성을 입증한다. 즉, 개인적 역량은 개인과 개인, 그리고 개인과 사회 간의 관계를 설정·유지하고 타인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2] 개인의 역량 세부 기준, 하위 요소, 지표

* 출처 : EAVI(2009). Study on Assessment Criteria for Media Literacy Levels.

개인적 역량은 ① 전문적 기술의 활용(Use of technical skills), ② 비판적 이해(Critical Understanding), ③ 커뮤니케이션 능력(Communicative Abilities)의 3개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미디어를 통하여 다른 시민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능력은 자율적·인지적·비판적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시민의식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① 전문적 기술의 활용(Use of technical skills)은 커뮤니케이션 도구의 효과적 활용에 필요한 능력을 의미한다. 활용(Use)은 사용자가 자신의 목적에 맞게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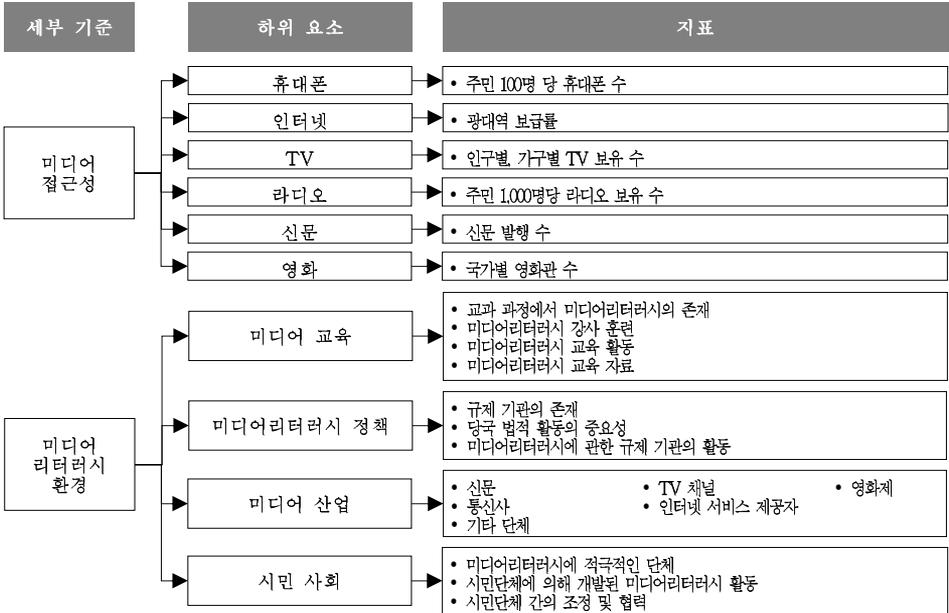
여기에는 미디어 접근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능력(컴퓨터 켜는 법, 마우스 사용법 등)에서부터 미디어의 기능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개인화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전문적 기술(Technical skills)은 개별 상황이나 환경에 부합하는 장치 및 도구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으로 개인 차원에서 다양한 미디어의 기능을 파악하고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을 뜻한다.

② 비판적 이해(Critical Understanding)는 비판적 이해 능력을 바탕으로 개인이 미디어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의미한다. 미디어 콘텐츠의 이용에는 사용자의 이해(메시지 해독)가 필요하다. 비판적 이해 능력은 사용자가 정보를 포착하고 이를 이해하며, 다른 정보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자는 문제해결을 위해 정보를 사용하기도 하며, 새로운 정보를 생산해내기도 한다. 특히, ② 비판적 이해에서의 “이해”는 개인의 “비판적 이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미디어리터러시 관련 모든 분야에서 기초적인 소양으로 간주된다. 미디어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 및 역할의 이해 및 메시지·콘텐츠·정보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이를 생산해내는 능력 또한 비판적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소양을 바탕으로 미디어 사용자는 메시지·콘텐츠·정보를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커뮤니케이션 능력(Communicative Abilities)은 개인이 미디어를 통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거나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③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사회적 관계 형성, 시민 참여, 콘텐츠 제작 능력을 포함한다. 특히, 시민 참여 요소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개인이 미디어를 활용해 공공기관 또는 타인과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형태의 시민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기본권 행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미디어리터러시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유럽 지역에서 장기간 강조되고 있다. ③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측정을 위해 확립된 규범이나 표준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즉, 사용자 제작 콘텐츠 및 미디어 제작과 관련된 새롭고 진화하는 기술 및 역량에 따라 방대한 범위로 구성된다.

나. 환경적 요인(Environmental Factors)

미디어리터러시의 증진에는 환경적 요인 또한 중요한 변수이다. 시민들의 미디어 참여와 디지털 디바이스 사용은 실질적으로 정책당국의 입장, 비정부기구의 활동, 미디어 유관 기관의 입장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그림 2-3] 환경적 요인 세부 기준, 하위 요소, 지표

* 출처 : EAVI(2009). Study on Assessment Criteria for Media Literacy Levels.

환경적 요인은 ① 미디어 접근성(Media Availability), ② 미디어리터러시 환경(Media literacy context)의 2개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미디어리터러시 역량과 더불어 정부, 시민사회의 성숙도, 미디어 산업의 발전 정도, 미디어리터러시 수준이 높은 집단의 영향력 등 미디어리터러시와 관련한 여러 환경적 요인이 특정 지역의 미디어리터러시 수준을 결정하는 것에 있어 중요한 변수임을 의미한다.

첫 번째로, ① 미디어 접근성(Media Availability)은 개인이 주어진 환경에서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도구와 방법의 유형을 의미함과 동시에 이것이 어떻게 개인에게 적용되는지를 의미한다. ① 미디어 접근성의 평가에서는 미디어 다원주의(Media pluralism)를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미디어 다원주의는 미디어리터러시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다. 미디어 콘텐츠 및 플랫폼의 범위는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기 때문이다. 피번 카톨릭 대학의 연구¹⁵⁾에서는 미디어의 전반적인 상황에 중요한 다원주의의 다섯 가지 유형을 확인

했다. 지방 및 지역 사회(지역과 지방에 대한 소통 및 관심의 비례하고 공정한 표현), 문화(사회·문화 단체의 공정하고 다양한 표현), 정치(정치적 견해 및 단체에 대한 공정한 표현), 미디어 유형과 장르 그리고 소유권 및 제어(미디어의 제어와 관련되는 매스컴 및 플랫폼)이다. 이러한 요소는 이 연구의 평가 기준과 관련되고, 미디어리터러시가 형성하는 ‘환경적 요인’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언론의 자유와 본질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미디어 다원주의 지표는 특정 국가의 미디어 환경을 평가하기 위한 국제적인 기준으로 간주된다. 이는 공공의 사안에 대중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중재자로서 미디어에 영향을 미치고, 미디어 산업 전문가들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편향되지 않고 활동을 유지하는가를 정량화한 사회적 지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는 편향되지 않아야 하는 미디어 기관, 신뢰할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미디어,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어야 하는 대중의 세 집단 사이에서 서로 공유되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 의무는 점점 더 확대되어 미디어를 통한 시민의 참여와 토론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② 미디어리터러시 환경(Media literacy context) 요인들은 미디어리터러시 환경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우호적인 환경 요인들은 국가 정책 측면에서 미디어리터러시의 중요도를 높이는 것에 기여할 것이며, 이는 한 국가에 미디어리터러시 수준 향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환경적 요인은 주로 미디어 다원주의와 연결지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미디어리터러시 인프라 확충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미디어리터러시 증진 정책 시행을 통해 미디어 소외 계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미디어 접근은 언론의 자유와도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시민들은 미디어를 통해 공공에 자유롭게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환경적 요인에서는 “미디어 교육”의 정도를 진단하는 것에 집중되어있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미디어 교육이 시민들의 미디어 접근성 및 활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방법이자, 국가 정책 방향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시사한다.

15) Leuven, K. U., et al. (2009). Independent study on indicators for media pluralism in the member states—Towards a risk-based approach. Prepared for the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Information Society and Media. Retrieved from http://ec.europa.eu/information_society/media_taskforce/doc/pluralism/pfr_report.pdf

다. 미디어리터러시 수준 평가

「미디어리터러시 수준 평가 기준에 관한 연구」에서는 유럽 회원국들의 미디어리터러시 수준 평가를 위한 ‘개인적 역량’과 ‘환경적 요인’을 초급·중급·고급의 세 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각 단계별 세부 내용은 <표 2-1>과 같다.

<표 2-1> 역량의 수준별 단계

단계	관점에 따른 정의	
	개인적	환경적
초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의 미디어 사용을 가능케 하는 능력 • 사용자는 미디어의 기능을 알고, 기본적인 부호를 해독하고 사용 • 그러나, 제공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사용자의 능력은 제한적 • 또한, 미디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제한적 	<p>환경은 미디어리터러시의 발전을 위한 자극 미제공</p>
중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은 미디어의 기능을 자세히 알고 복잡한 운영 방법을 이해 • 사용자는 필요한 정보를 얻고 평가할 수 있으며, 정보를 검색하는 전략 평가 • 사용자는 적극적인 미디어 콘텐츠 생산자이며, 미디어를 이용한 사회 활동 적극적으로 참여 	<p>환경은 산발적, 비정기적인 방법으로 자극 제공</p>
고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은 미디어 사용의 전문가이며, 미디어 이용이 끼치는 영향에 대한 법적 조건에 관심을 갖고 인지 • 사용자는 언어와 기술에 대한 아주 깊은 지식과 개인의 커뮤니케이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생산을 변환하고 분석 가능 • 공론장에서는 이용자가 각자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협력 단계를 활성화 	<p>환경은 체계적인 자극을 제공하며, 이는 미디어리터러시 능력을 지닌 집단으로 발전</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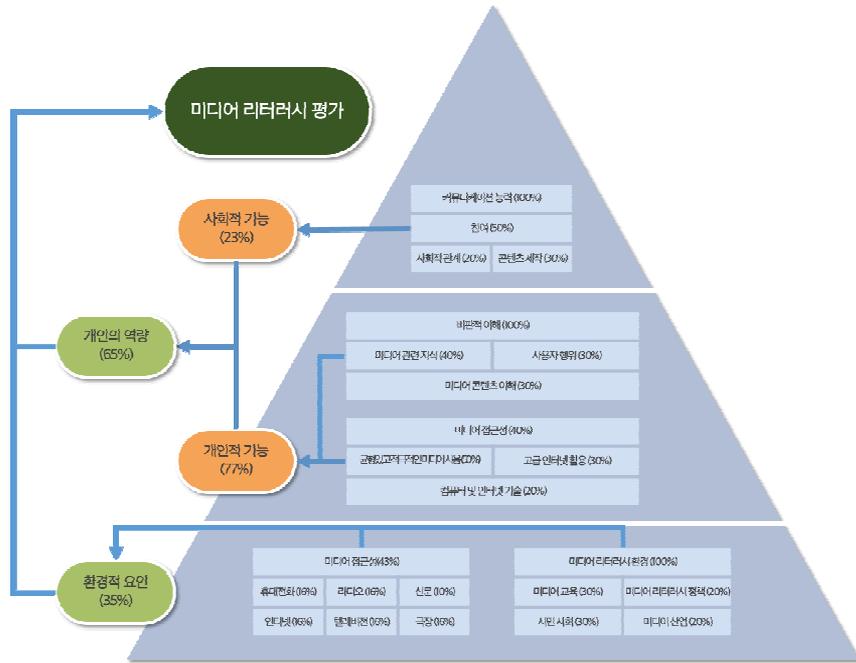
* 출처 : EAVI(European Association for Viewers Interests), “Study on Assessment Criteria for Media Literacy Levels”, p.55 (2009).

초급 수준은 미디어로의 접근 능력만을 의미한다. 개인은 물리적으로 미디어에 접근할 줄 알고, 미디어의 기본적인 기능을 활용할 줄 아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미디어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인 바탕이 되긴 하지만, 이는 미디어의 메시지나 정보·콘텐츠에 대한 표면적인 이해를 의미한다. 즉, 비판적 이해가 가능한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단순히 미디어의 기능을 알고, 메시지의 표면적 의미를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이다. 환경적 부분은 국가적으로 정책적 사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개인의 미디어리터러시 증진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급 수준은 미디어리터러시의 구성요소 중 ‘접근’, ‘분석’, ‘평가’, ‘이해’, ‘창조’, ‘커뮤니케이션’의 6가지가 모두 포함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개인적 부분에만 해당되며, 환경적 부분에서는 개인이 적극적으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 즉, 국가 차원에서의 미디어리터러시 관련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고, 산발적으로 미디어리터러시 관련 교육이나 기관 등이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

고급 수준은 개인과 환경 모두에서 미디어리터러시의 6가지 구성요소가 다 갖춰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인은 미디어에 대한 기본적인 능력과 더불어 미디어 전반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갖추고 있다. 이 수준에서 개인은 미디어 관련 법적 지식을 이해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미디어 공론장에 참여하고, 자유자재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발휘한다. 환경적 요소 또한 미디어리터러시 관련 국가 정책이 마련되어 있고, 미디어리터러시 교육과정 및 시설도 확충되어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미디어리터러시를 바탕으로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

위 논의를 바탕으로 설계된 유럽 국가들의 미디어리터러시 수준 평가를 위한 방법론은 [그림 2-4]와 같다. 먼저, 선택된 지표들 각각은 세부적인 비중으로 분배된다. 세부 지표의 가중치는 집행위원회가 설정한 우선순위와 전문가의 조언을 기반으로 설정되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역량을 측정하고자 할 때 ‘비판적 이해’에 30%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면 이는 ‘활용(20%)’보다 더 중요한 지표로서 간주되는 것이다. 두 번째, 양적 지표(‘활용’, ‘커뮤니케이션 능력’, ‘미디어 접근성’)는 각 지표에 대한 EU 회원국의 자료를 참조하여 구성되었다. 이 지표는 세 단계(초급, 중급, 고급)로 구분되어있으며, 평가 기준은 EU의 평균값이다. 이를 통해, 산정된 양적 지표는 EU 회원국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있다. 세 번째, 질적 지표(‘미디어리터러시 환경’)는 미디어리터러시 전문가의 의견을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연구의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분석 후 세분화되는 과정을 거쳤다. 네 번째, 가중치 부여 이후 양적, 질적 지표로 환산된 자료는 결합이 이루어진다. 결과적으로 미디어리터러시 측정 도구는 개별 미디어리터러시 기준에 대하여 하나의 틀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 평균을 100으로 설정하였으며, 70 이하는 초급, 70~130은 중급, 130 이상은 고급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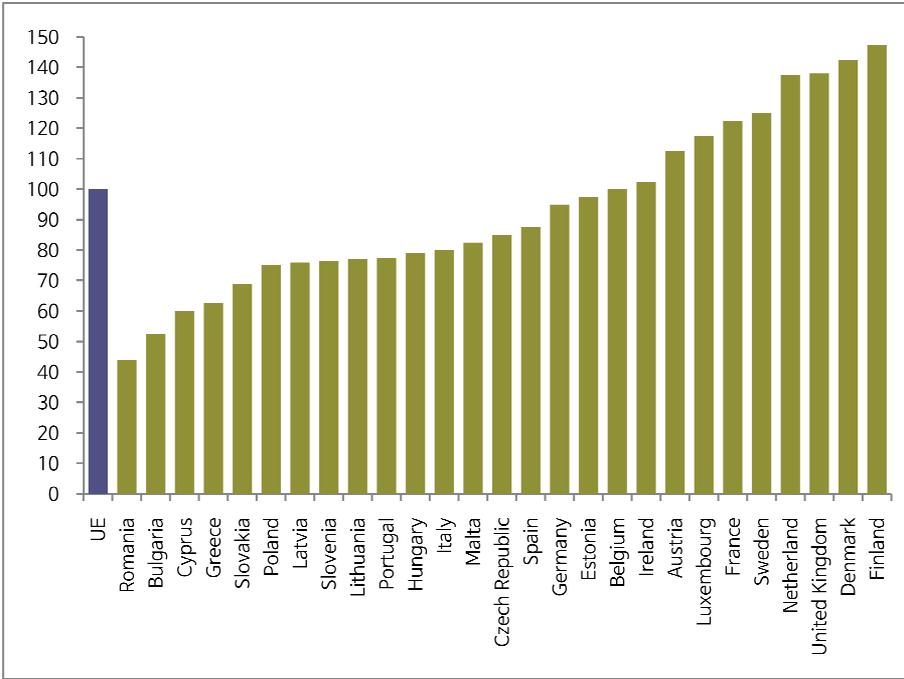


[그림 2-4] 가중화된 미디어리터러시 평가 기준 구조

* 출처 : EAVI(2009). Study on Assessment Criteria for Media Literacy Levels.

라.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측정 결과

유럽 국가들의 미디어리터러시 수준을 측정한 결과,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키프로스, 그리스 등의 국가들은 70점 이하로 유럽 평균 이하의 미디어리터러시 수준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작거나 중간 규모의 나라로, 비교적 최근에 EU에 가입하였으며 대부분 지중해나 동부 유럽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덜하다는 문화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고급 수준을 가진 나라는 스웨덴, 네덜란드, 영국, 덴마크, 핀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프랑스다. 이들은 모두 중앙 유럽이나 북부 유럽에 위치하며, 높은 GDP를 가진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영국, 핀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은 130 이상의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다른 국가들 보다 2 ~ 3배 높은 수준이다.



[그림 2-5] 유럽 국가들의 미디어 리터서 | 수준 평가 결과

* 출처 : EAVI(2009). Study on Assessment Criteria for Media Literacy Levels.

미디어리터러시 정책 및 미디어 교육, 그리고 시민사회 활동을 살펴봤을 때, 결속력이 높은 국가들과 그렇지 못한 국가 간에도 큰 격차를 보였다. 미디어리터러시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적 투자 및 이니셔티브 시행은 국가 차원의 연구 활동 및 입법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본 연구가 시사하는 주요 결론 중 하나로, 일반적인 대중 정책들이 필연적으로 미디어리터러시를 필요로 하는 개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넘어 미디어리터러시 수준의 향상으로까지 이어짐을 시사한다.

2. 미디어리터러시 수준 평가를 위한 개선 기준(유럽시청자권익위원회)

유럽위원회에서 공개한 「유럽에서의 미디어리터러시 수준 평가를 위한 테스트 및 개선 기준」은 앞서 기술한 「미디어리터러시 수준 평가 기준에 관한 연구」의 후속 연구 격으로, 국가 단위의 미디어리터러시 분석을 위해 보다 심층적인 수준에서 개인의 미디어리터러시 역량을 측정·진단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EAVI(2011)의 연구는 선행연구(EAVI, 2009)에서의 미디어리터러시 기본 분야인 “개인적 역량”과 “환경적 요인” 중 “개인 역량”에 집중하고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미디어리터러시 개인 역량 측정을 위하여 Ofcom(2008), ActiveWatch(2008), OxiS(2009), European Social Survey(2010), Eurostat, Eurobarometer 등 미디어리터러시 관련 선행연구에서 제공하고 있는 질문 목록을 종합·가공하여, 인구통계학적 설문은 제외하고 20개 주제의 72개 질문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고안하였다. 이 중, 설문 수집 과정에서의 한계로 유효성을 확보할 수 없는 질문 29개를 분석에서 제외, 최종적으로 9개 주제의 43개 질문의 답변을 바탕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설문의 결과는 개인의 미디어리터러시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모든 질문 영역을 포괄하지는 않으나, 미디어 활용과 관련한 대부분의 구성요소를 다룰 뿐만 아니라, 미디어 고이용자/저이용자의 비판적 이해 역량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질문은 <표 2-2>과 같다.

<표 2-2> 분석틀에서의 유효 질문

기준	요소	설문조사 질문/영역
기술 활용	컴퓨터 및 인터넷 기술	• 컴퓨터 사용-기술 (3)
	균형잡히고 적극적인 미디어 활용	• 균형있는 미디어 활용 (7) • 전통적인 미디어 사용의 온라인 귀결성 (3)
	고급 인터넷 사용	• 인터넷 활동 (6)
비판적 이해	미디어 콘텐츠와 그 기능의 이해	• 신뢰성 인식 (4) • 차이의 인식 (4) • 검색엔진 간의 차이 인식 (1) • 잠재적 미디어 효과에 대한 인식 (4) • 인터넷 광고 (2) • 고도의 기능적 리터러시 (4)
	미디어와 그 규제에 대한 지식	• 규제에 대한 지식 (4)
	사용자 행동	• 사용자 행동 (6) • 예방 조치 (3) • 검색 엔진 활용 전략 (2) • 새로운 웹사이트의 컨트롤 확인 (6)

기준	요소	설문조사 질문/영역
커뮤니케이션 능력	사회적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킹 (1) • 콜라보레이션 (1)
	콘텐츠 창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 창작 (4) • 온라인 콘텐츠 창작 (1)
	시민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참여 (6)

* 출처 : EAVI(2011). Testing and Refining Criteria to Assess Media Literacy Levels in Europe.

** 삭제 표시된 설문 항목은 유효성을 확보할 수 없는 질문으로 분석에서 제외

조사 결과는 3개 기준(기술 활용, 비판적 이해, 커뮤니케이션 능력) 항목별로 조사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로, 기술 활용 기준에서는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을 자주 이용하는 미디어 사용자가 영화관에 자주 가는 사람들과 비교하였을 때 미디어 콘텐츠를 창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미디어를 이용하여 개인의 의견을 표명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영화관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미디어를 통해 얻은 정보를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정의,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영화관을 자주 찾는 사람들(비디오 및 컴퓨터 게임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을 포함)은 하나의 정보 원천만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개인의 의견을 타인 또는 사회 조직과 공유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책이나 신문과 같은 인쇄 매체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른 정보 원천과의 비교가 자주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자신의 의견을 물어볼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독서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 간접 광고의 유무와 비현실적인 미디어 정보를 빠르게 알아챘으며,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규제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미디어 사용자보다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비판적 이해 기준에서는 특정 유형의 미디어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사람들은 해당 미디어를 자주 이용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미디어에서 묘사하는 유사 정보나 연관된 정보의 차이를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정보 불균형과 관련하여 시민 단체 등과 같은 조직에 연락할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특정 유형의 미디어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사람들은 해당 미디어를 향후에도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커뮤니케이션 능력 기준에서는 미디어 콘텐츠를 자주 소비할수록, 미디어 이용에 적극적일수록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할 가능성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으로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일관되지 않은 정보를 접할 때 시민 단체 등과 같은 조직에 우려 사항을 공유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측정 결과를 기반으로 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참여 증진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 및 이니셔티브를 기획, 개선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가. 개선된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측정 결과

조사 대상인 유럽 국가들의 미디어리터러시 수준을 측정한 결과, 기술 활용의 경우 초급 16%, 중급 50%, 고급 35%의 분포를 보였으며, 비판적 이해는 초급 28%, 중급 41%, 고급 31%,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초급 64%, 중급 20%, 고급 16%의 분포를 보였다. 각 기준별 미디어리터러시 수준의 차이는 성별, 연령, 교육 및 소득 등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술 활용과 비판적 이해 수준은 연령대가 가장 낮은 집단, 교육 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 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사소통 능력 수준은 연령대가 가장 낮은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국가, 성별, 연령 및 교육 수준 정도를 기준으로 군집화하면 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Cluster 1)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덴마크, 영국, 일반적인 수준을 지닌 집단(Cluster 2a)에는 벨기에, 에스토니아, 독일, 슬로바키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리투아니아, 아일랜드, 라트비아, 스페인, 슬로베니아, 체코, 키프로스, 폴란드, 몰타, 헝가리, 수준이 낮은 집단(Cluster 2b)은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불가리아, 루마니아가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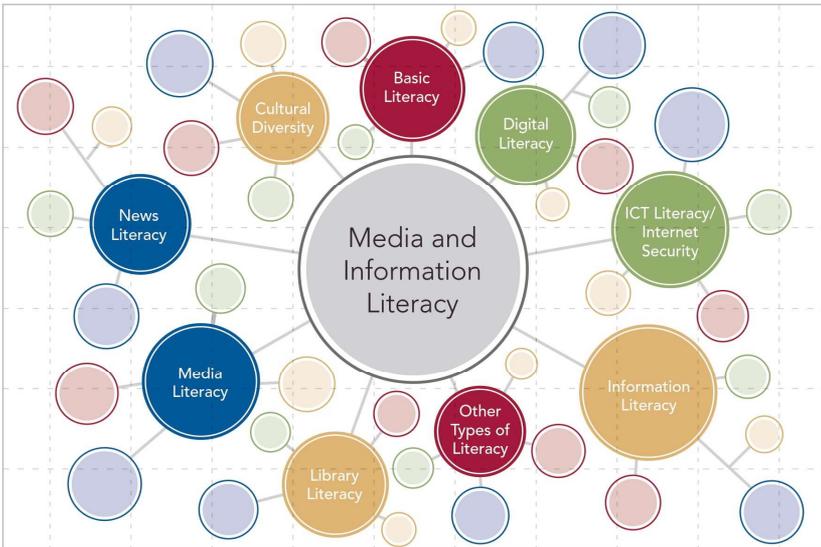
<표 2-3> 유럽 국가들의 개선된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순위

	신규 순위	이전 순위	순위 변동	기술 활용	비판적 이해	커뮤니케이션 능력
Norway	1			2	1	3
Iceland	2			1	5	1
Luxembourg	3	2	-1	3	6	2
Sweden	4	4	0	4	3	7
Finland	5	5	0	6	4	6
Netherlands	6	3	-3	5	7	4
Denmark	7	1	-6	7	8	5
United Kingdom	8	6	-2	8	2	10
Belgium	9	15	6	11	11	8
Estonia	10	7	-3	10	9	11
Germany	11	11	0	9	10	14
Slovakia	12	19	7	12	12	17
France	13	10	-3	14	22	9
Austria	14	8	-6	13	13	20
Lithuania	15	16	1	19	16	12
Ireland	16	9	-7	18	15	15
Latvia	17	12	-5	15	17	16
Spain	18	17	-1	20	18	13
Slovenia	19	13	-6	17	14	21
Czech Republic	20	14	-6	16	19	24
Cyprus	21	23	2	24	20	18
Poland	22	21	-1	21	21	22
Malta	23	20	-3	23	25	19
Hungary	24	18	-6	22	23	23
Greece	25	25	0	28	24	26
Italy	26	24	-2	25	26	28
Portugal	27	22	-5	27	29	25
Bulgaria	28	26	-2	26	27	29
Romania	29	27	-2	29	28	27

* 출처 : EAVI(2011). Testing and Refining Criteria to Assess Media Literacy Levels in Euro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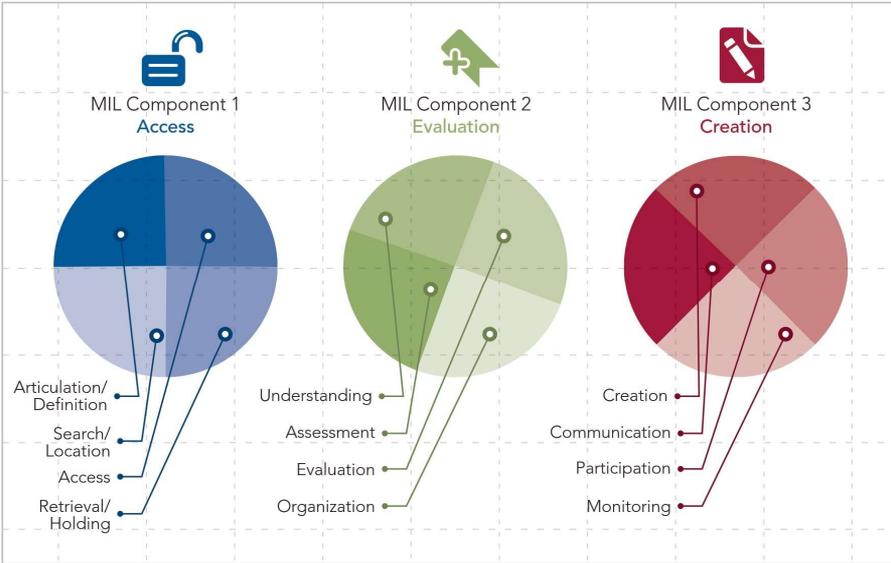
3. 미디어리터러시 평가 프레임워크(UNESCO)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이하 UNESCO)는 미디어 및 정보 리터러시(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이하 MIL)를 “미디어 콘텐츠와 정보를 현명하게 검색, 비판적으로 평가, 사용, 기여하는 능력의 집합” 이라고 정의한다. 2013년 UNESCO가 발간한 국제 미디어리터러시 평가 프레임워크(Global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Assessment Framework, 이하 프레임워크)는 시민 및 미디어 교육자의 미디어 및 정보 활용능력에 관한 국가 차원의 준비도와 미디어리터러시 역량 전반에 걸쳐 이를 평가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프레임워크는 정책 입안자 및 의사결정권자, 통계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담당하는 국가 공무원, 공식 및 비공식 교육 환경에서 일하는 교육 정책 입안자 및 계획자, 교사 양성 기관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림 2-6]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의 통합 측정 방법론 컨셉

UNESCO의 프레임워크에서 MIL의 세 가지 MIL 구성요소는 [그림 2-7]에 자세히 설명된 것처럼 MIL 주제와 직접 연결된 구성요소이다.



[그림 2-7] 미디어리터러시의 구성요소 및 세부 인자 도식

MIL 구성요소 중 첫 번째는 정보 및 미디어 콘텐츠(「구성요소 1 - 접근」)에 대한 요구 인식, 검색, 접근이다. 이는 적절한 기술을 사용하여 정보 및 미디어 콘텐츠에 접근, 검색 및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의미한다. 「구성요소 1 - 접근」은 정보, 미디어 콘텐츠 및 지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인쇄, 오디오, 비주얼 및 디지털을 포함한 모든 형식의 정보와 미디어 콘텐츠를 식별하는 역량을 포함한다.

두 번째 MIL 구성요소는 정보 및 미디어의 이해 및 평가(「구성요소 2 - 평가」)이다. 보편적인 인권과 기본 자유의 맥락에서 정보, 미디어 콘텐츠, 미디어 및 정보 기관의 업무 및 기능을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구성요소 2 - 평가」에는 사실 비교, 의견과 사실의 구별, 시기 인식(새로운/뉴스/구시대적), 강조되는 이념과 가치의 확인,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전문적, 기술적 힘이 미디어와 정보 콘텐츠를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포함된다. 또한 정보의 품질(정확성, 관련성, 통화, 신뢰성 및 완전성)을 평가하는 것을 포함한다. 「구성요소 2 - 평가」는 미디어 기관, 미디어 전문가 및 정보 제공자의 특성, 기능 및 운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보와 미디어 메시지를 해석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특히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 및 정보 접근의 촉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왜냐하면, 미디어

및 정보 활용에 능통한 시민은 미디어 회사 및 정보 제공자, 공공 기관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권력과 통제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요소는 정보 및 미디어 콘텐츠의 생성, 활용 및 모니터링(「구성요소 3 - 생산」)이다. 「구성요소 3 - 생산」은 정보, 미디어 콘텐츠 및 새로운 지식의 생산 노하우를 습득하고 다른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또한 정보, 미디어 콘텐츠 및 지식재산 측면과 같은 일반 지식의 윤리적 및 효과적인 사용을 포함한다. 미디어 및 정보에 능통하다는 것은 분석 및 생산에 필요한 도구를 갖추었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기술을 포함한 미디어와 정보에 대한 지식, 그리고 미디어와 정보 및 ICT를 윤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태도와 가치 또한 갖추었음을 의미한다. 21세기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며 협업적인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기 때문에 Web 2.0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적절한 ICT 액세스와 기술을 가진 모든 시민이 정보 및 미디어 메시지를 생산, 공유, 네트워크 및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따라서, 미디어 생산과 지식 창출, 사용 및 영향 모니터링은 MIL의 핵심 요소이다.

<표 2-4> 미디어리터러시 구성요소 및 미디어리터러시 세부 인자

미디어리터러시 구성요소	미디어리터러시 세부 인자
1. 정보와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수요를 인식하고, 검색하고, 접근하고 얻을 수 있는 능력	1.1. 정보 필요성의 정의 및 표현
	1.2. 정보·미디어 콘텐츠 검색 및 위치
	1.3. 정보·미디어 콘텐츠, 미디어 및 정보 제공자에 대한 접근
	1.4. 정보·미디어 콘텐츠의 검색 및 보유/저장
2. 정보 및 미디어에 대한 이해, 평가 및 평가	2.1. 정보와 미디어의 이해
	2.2. 정보·미디어 콘텐츠, 정보·미디어 제공자 평가
	2.3. 정보·미디어 콘텐츠, 정보·미디어 제공자 평가
	2.4. 정보·미디어 콘텐츠의 구성
3. 정보·미디어 콘텐츠의 생성, 활용 및 모니터링	3.1. 지식의 창조와 창의적 표현
	3.2. 윤리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정보, 미디어 콘텐츠 및 지식 전달
	3.3. 적극적인 시민으로서 사회 공공 활동에 참여
	3.4. 정보, 미디어 콘텐츠, 지식 생산 및 사용, 미디어 및 정보 제공자의 영향력 모니터링

이러한 MIL 프레임워크는 다양한 MIL 역량의 등급을 매기기 위한 MIL 역량 평가로 이어진다. 역량평가의 수준은 크게 3가지로 「기본(Basic level)」, 「중급(Intermediate level)」, 「상급(Advanced level)」으로 나뉘어진다(〈표2-5〉 참조).

첫 번째로, 「기본」은 MIL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훈련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상당한 개선이 필요한 수준을 의미한다. 「기본」 수준에 해당하는 이들은 정보 및 미디어(콘텐츠)의 필요성을 하고, 기본 도구를 사용하여 쉽게 찾고 액세스할 수 있는 정보 소스의 정보 및 미디어 콘텐츠를 식별하고 저장할 수 있다. 그러나, 명확한 평가 기준 없이, 정보 및 미디어 콘텐츠의 인종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미디어 및 정보 제공자의 주요 원칙, 조건 및 기능에 대한 제한적인 적용과 인식으로 정보를 수용한다. 또한, 기본적인 미디어 도구를 사용하여 정제 과정 없이 검색된 정보를 정리하고 저장하며, 이를 비판적 평가나 윤리적, 법적 고려 없이 미디어를 통하여 배포한다.

두 번째로, 「중급」은 MIL에 대한 연습과 훈련을 통해 미디어 활용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지만, 특정 영역에서는 격차를 보이는 수준이다. 「중급」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은 다양한 미디어 도구를 사용하여 정보 및 미디어 콘텐츠 공급자를 선별적으로 선택, 저장하고, 미디어 및 정보 활용에 있어 법적·윤리적 원칙을 적용할 줄 아는 것으로 본다. 또한, 미디어 및 정보 제공자의 필요성과 이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며, 적절한 미디어 도구를 사용하여 새로운 형식의 정보 및 미디어 콘텐츠를 생산, 전달하고 이와 관련하여 타인과 소통한다.

마지막으로, 「상급」 수준의 응답자는 MIL에 대한 체계적인 실습·훈련을 통해 매우 우수한 수준의 미디어 및 정보 활용 지식과 기술을 가진 수준이다. 「상급」 수준의 응답자들은 다양한 미디어 도구들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정보 및 미디어 콘텐츠를 검색하고, 저장한다. 또한, 원하는 정보 및 미디어 콘텐츠에 접근하여 위하여 구체적인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사회·문화적 측면을 적절히 고려하여 새로운 지식의 창조와 생산을 수행하고, 이를 법적·윤리적 기준에 맞게 적절히 배포한다.

〈표 2-5〉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평가 프레임워크

<p>기본 수준: 미디어리터러시에 대한 기본 수준의 지식, 교육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상당한 개선이 필요한 수준</p>	<p>중급: 미디어리터러시에 대한 실습과 훈련을 통해 습득한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특정 영역에서는 격차 존재</p>	<p>고급 수준: 미디어리터러시에 대한 실습과 훈련을 통해 습득한 매우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의 정보와 미디어(콘텐츠) 요구 사항을 인식하고, 기본 도구를 사용하여 쉽게 찾고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소스에서 정보와 미디어 콘텐츠를 식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다양하고 잠재적으로 충돌할 수 있는 정보 소스와 정보 및 미디어 콘텐츠 제공자로부터 찾아 선택하고, 적용되는 법률에 맞게 사용 가능한 미디어(콘텐츠)의 성격, 활용 범위 등을 지정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의 정보 및 미디어(콘텐츠) 요구 사항을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으로 공식화하여 관련성이 있고 필요한 경우 다양한 도구를 체계적이고 명시적이며 효율적인 방식으로 사용하여 다양한 소스에서 정보를 검색하고 액세스하고 추가 활용을 위해 기존 정보를 검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확한 평가 기준이 없고, 사회 내 미디어와 정보 제공자의 주요 원칙, 조건, 기능, 정보 및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인중에 대한 적용 및 인식이 제한되어 있는 정보를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정보 소스 및 콘텐츠의 품질과 증거를 분석하고 차별화하며, 미디어 및 정보 제공자의 필요성과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지만,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는 인식이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용 가능한 상황과 다양한 조건 내에서 사회, 조직 또는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미디어를 통해 콘텐츠 제공자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합성된 정보 및 미디어 콘텐츠를 해석, 비교, 비판적으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색된 정보를 기본 도구를 사용하여 실질적인 합성 없이 정리 및 저장하고 제한된 적용에 대한 비판적 평가나 윤리적, 법적 고려 없이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절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사용하고 윤리적, 법적 의미에 대하여 타인과 소통, 새로운 형식으로 새로운 정보와 미디어 콘텐츠를 생성, 생산 및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중의 사회 문화적 측면을 고려한 새로운 지식의 창출 및 생산을 위해 정보와 미디어 콘텐츠를 결합한 후 참여적, 법적, 윤리적, 효율적인 방식으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에 적합한 다양한 형식과 도구로 소통하고 배포

제2절 The Media Literacy Index (Open Society Institute - Sofia)

Open Society Institute - Sofia(이하 OSIS)는 헤지펀드의 초창기 개척자로 널리 알려진 미국의 조지 소로스가 설립한 Open Society Foundation 부설 연구소로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에 소재하고 있다. 연구소는 비정부 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이하 NGO)이며, 유럽에서는 비교적 부패인식지수, 언론자유지수, 민주주의지수가 낮은 지역인 동유럽 중 불가리아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민주주의 질서 확립을 지원하고 있다.

OSIS는 ① 열린 사회의 가치 확산을 위한 관행을 장려, 개발 및 지원, ② 공공 및 정치 등 시민 사회 발전 과정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화 지원, ③ 시민 자유의 불가침성과 기본적 인권의 존중 확대 및 보장, ④ 민간 부문 강화 지원, ⑤ 공공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 참여 강화 및 공익 보호, ⑥ 핵심 사안에 대한 공개 토론의 확대 장려의 6개 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양한 공익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OSIS의 6대 주요 사업 분야는 시민 사회(Civil Society), 교육(Education), 유럽 정책(European Policies), 여론(Public Opinion), 로마니안 통합(Roma Inclusion), 법치(Rule of Law)이며 이 중 미디어리터러시 지수는 유럽 정책 분야에 해당한다.

<표 2-6> Open Society Institute - Sofia의 6대 주요 사업 분야

시민 사회 (Civil Socie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ulgarian Donors' Forum (BDF) • Support for the programme and organizational development of Citizen Participation Forum (CPF)
교육 (Edu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Bulgarian University Ranking System
유럽 정책 (European Polic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Catch-Up Index • The 10 Years in the EU • EuPI (the European Policies Initiative) • The Media Literacy Index
여론 (Public Opin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Bulgarian University Ranking System • The Catch-Up Index • Opendata.bg
로마니안 통합 (Roma Inclu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cholarship Programme for Medicine Students of Roma Origin
법치 (Rule of La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operation with the Constitutional and Legal Policy Institute (COLPI)

2017년부터 등장한 OSIS의 미디어리터러시 지수(Media Literacy Index)는 유럽 국가를 비롯하여 유럽 외 주요 선진국의 미디어리터러시 현상을 지수화한 개념이다. 이는 정치, 사회, 문화 등 미디어 관점에서 탈진실 현상 관련 문제를 다루고자 도입되었다. 지수는 8개 세부 지표에 가중치를 반영하여 최고 100점에서 최저 0점의 표준화된 점수로 환산된다. 우선, 미디어 자유 지표(Media Freedom Indicators)를 구성하는 프리덤 하우스의 언론 자유 점수(Freedom of the Press score by Freedom House), 국경 없는 기자회견의 언론 자유 지수(Press Freedom Index by Reporters without Borders)는 각각 20%, 교육 지표(Education indicators)를 구성하는 OECD의 PISA 읽기 소양 점수(PISA score in reading literacy, OECD)는 30%, OECD의 PISA 과학 소양 점수(PISA score in scientific literacy, OECD), OECD의 PISA 수학 소양 점수(PISA score mathematical literacy, OECD), 세계은행의 3차 교육 등록율(Tertiary Education enrollment (%), World Bank)은 각각 5%, 신뢰(Trust)지표를 구성하는 세계가치조사의 타인에 대한 신뢰(Trust in others, World Values Survey)는 10%, 새로운 형태의 참여(New forms of participation)를 구성하는 국제연합의 전자 참여 지수(E-participation Index, UN)는 5%로 환산 후 합산되는 형태이다.

<표 2-7> Open Society Institute - Sofia의 Media Literacy Index 구성요소

지표	가중치	
미디어 자유 지표 (Media Freedom Indicators)	프리덤 하우스의 언론 자유 점수 (Freedom of the Press score by Freedom House)	20%
	국경 없는 기자회견의 언론 자유 지수 (Press Freedom Index by Reporters without Borders)	20%
교육 지표 (Education indicators)	OECD의 PISA 읽기 소양 점수 (PISA score in reading literacy, OECD)	30%
	OECD의 PISA 과학 소양 점수 (PISA score in scientific literacy, OECD)	5%
	OECD의 PISA 수학 소양 점수 (PISA score mathematical literacy, OECD)	5%
	세계은행의 3차 교육 등록율 (Tertiary Education enrollment (%), World Bank)	5%
신뢰 (Trust)	세계가치조사의 타인에 대한 신뢰 (Trust in others, World Values Survey)	10%
새로운 형태의 참여 (New forms of participation)	국제연합의 전자 참여 지수 (E-participation Index, UN)	5%

* 각 항목별 점수는 최고 100에서 최저 0까지의 표준화된 점수(z-score)로 변환

1.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구성요소

가. 교육(Education)

교육은 미디어리터러시 측정을 위한 필수 요소 중 하나이다. OSIS는 Jan-Willem van Prooijen의 연구¹⁶⁾에 근거하여 사람들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스스로의 삶에 대한 통제력이 더 높다고 느끼고, 쉬운 해결책을 신뢰하지 않으며, 평균 이상의 분석 기술을 갖춘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OSIS는 PISA(the OECD's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의 읽기, 과학, 수학 리터러시 점수 및 세계은행(World bank)의 고등교육 이수율(Tertiary Education enrollment)에 각각 30%, 5%, 5%, 5%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교육 지수를 측정한다. PISA의 3개 점수는 OECD 국가 학생들의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고안되었으나, 이는 각국 교육 시스템의 고도화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로도 활용될 수 있다.

나. 미디어의 자유(Freedom of the press)

언론의 자유는 미디어리터러시 측정의 필수적인 지표이다. 미디어 환경의 파편화로 인한 가짜 뉴스의 증가, 일부 국가의 미디어 통제 등 다양한 미디어 관련 분열 현상은 질적인 측면에서 민주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OSIS는 언론의 자유 측정을 위하여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의 언론 자유 점수(Freedom of the Press score)와 국경 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의 언론 자유 지수(Press Freedom Index)를 이용한다. 각 항목별 가중치는 20%, 20%이다.

다. 대인관계 신뢰(Trust in others)

OSIS는 대인 간 신뢰를 미디어리터러시 측정에 있어 중요한 측면으로 보고 있다. 특히, 탈진실 현상에는 정부, 언론, 정치인, 전문가에 대한 불신이 기저에 있다. 따라서, OSIS는 대인 간 신뢰 측정을 위하여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의 타인에 대한 신뢰(Trust in others)를 이용한다. 가중치는 10%이다.

16) Van Prooijen, J.-W. (2017). Why education predicts decreased belief in conspiracy theories.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Vol. 31, 50-58.

라. 전자 참여(E-participation)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사람들의 정치 참여를 크게 향상시켰다. OSIS는 UN(United Nations)의 전자 참여 지수(E-participation Index)를 미디어리터러시 측정을 위한 지표로 활용한다. 가중치는 5%이다.

2. 2023년 유럽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측정 결과

2023년 새로운 유럽 미디어리터러시 지수(European Media Literacy Index 2023)에서 핀란드는 74점으로 측정 대상 유럽 국가 41개국 중 1위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덴마크는 73점으로 2위, 노르웨이는 72점으로 3위, 에스토니아와 스웨덴은 각각 71점으로 4, 5위, 아일랜드는 70점으로 6위를 차지하였다. 반면, 조지아는 20점으로 최하위 국가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코소보가 21점으로 40위, 북마케도니아는 23점으로 39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24점으로 38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지수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각 국가별로 획득한 점수의 범위를 설정, 65점 이상은 클러스터 1, 50점 이상은 클러스터 2, 35점 이상은 클러스터 3, 25점 미만은 클러스터 4, 25점 이하는 클러스터 5로 군집화하였다. 클러스터 1은 가장 성과가 좋은 국가 집단이며, 클러스터 5는 미디어리터러시 역량이 가장 저조한 국가를 의미한다. 클러스터 2는 미디어리터러시 역량이 좋은 국가들로 볼 수 있으며, 클러스터 3은 순위가 더 하락할 위험이 있는 국가들로 구성된 과도기적 클러스터이다. 클러스터 4는 미디어리터러시와 관련하여 역량은 부족하나, 클러스터 5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는 비교적 양호한 국가들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수별 군집화 결과는 지도에 표시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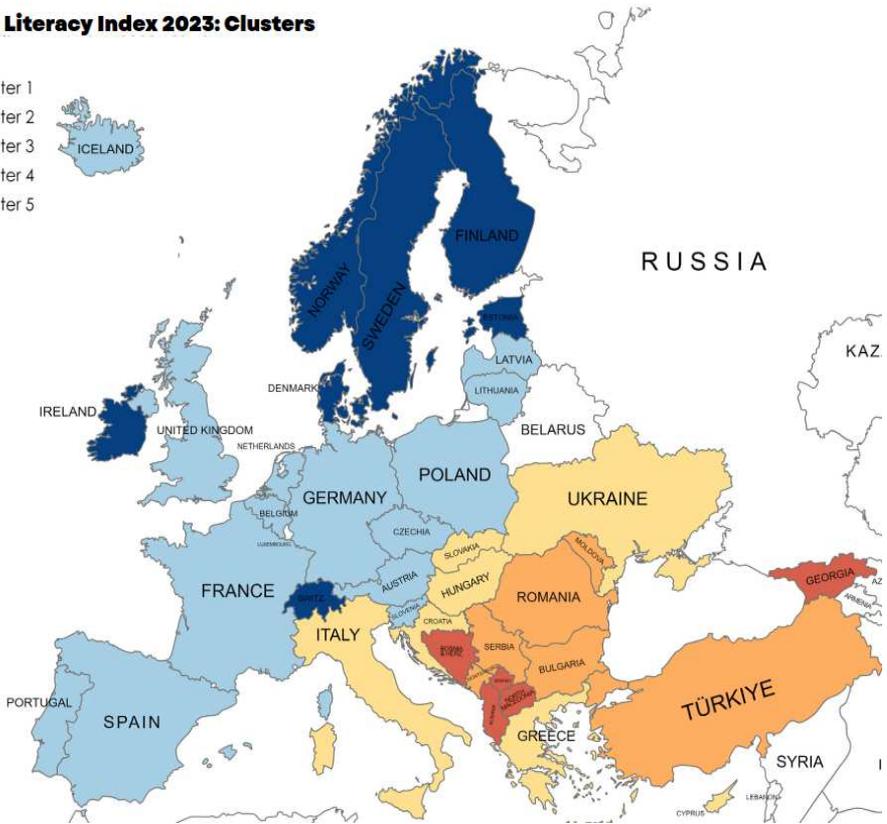
클러스터 1 국가들은 북서부 유럽에 위치하고 있으며, 에스토니아 및 아일랜드와 같은 대부분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을 포함한다. 클러스터 2 국가들은 대부분 중서부 유럽 국가들이다. 클러스터 3은 중남부(이탈리아, 몰타, 키프로스,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헝가리, 우크라이나, 그리스 등)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클러스터 4, 5는 대부분 “확장된 발칸 지역”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클러스터 분포의 지리적 양상은 발칸 반도의 국가들과 캅카스 산맥, 그리고 동서와 남북으로 구분되는 형태를 보였다.

<표 2-8> 2023 Media Literacy Index 측정 결과

순위	국가	점수	클러스터
1	Finland	74	1
2	Denmark	73	1
3	Norway	72	1
4	Estonia	71	1
5	Sweden	71	1
6	Ireland	70	1
7	Switzerland	67	1
8	Netherlands	64	2
9	Iceland	62	2
10	Belgium	61	2
11	Germany	61	2
12	Portugal	60	2
13	United Kingdom	60	2
14	Austria	59	2
15	Czech Republic	58	2
16	Spain	58	2
17	France	57	2
18	Latvia	55	2
19	Slovenia	55	2
20	Lithuania	54	2
21	Luxembourg	53	2
22	Poland	53	2
23	Slovakia	48	3
24	Italy	47	3
25	Croatia	45	3
26	Malta	45	3
27	Hungary	41	3
28	Cyprus	39	3
29	Greece	38	3
30	Ukraine	38	3
31	Serbia	33	4
32	Moldova	32	4
33	Montenegro	32	4
34	Romania	32	4
35	Bulgaria	31	4
36	Turkey	29	4
37	Bosnia and Herzegovina	24	5
38	Albania	23	5
39	North Macedonia	22	5
40	Kosovo	21	5
41	Georgia	20	5

Media Literacy Index 2023: Clusters

- Cluster 1
- Cluster 2
- Cluster 3
- Cluster 4
- Cluster 5



[그림 2-8] 2023 Media Literacy Index 클러스터별 지리적 분포

제3 절 The Media Literacy Implementation Index (Media Literacy Now)

Media Literacy Now는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보급률을 측정하는 검증된 조사 연구 도구인 MLI(Media Literacy Implementation)를 로드아일랜드 대학 내 교육 연구소인 Media Education Lab과 공동 개발하였다. MLI는 2017년 로드아일랜드 주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인 「교육 관련 사항 - 커리큘럼(RELATING TO EDUCATION - CURRICULUM)¹⁷⁾」에 대한 대응으로, 해당 법안은 로드아일랜드 주의 기본 교육 계획 내 미디어리터러시 커리큘럼을 의무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MLI는 학교 지도자들에게 초·중·고등학교 커리큘럼 전반에 걸쳐 미디어 활용 능력 교육의 포함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을 제공하며 미디어 활용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이미 로드아일랜드 주(State of Rhode Island) 내 여러 학교에서 시범 적용된 바 있다.

MLI는 교육기관과 지역사회의 교육자들이 활용가능한 도구로,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미디어 리터러시 학습 기회를 얻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에 도움을 줌과 더불어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현장을 이해하고, 어떤 커리큘럼이 미디어리터러시 증진에 강점을 가지며, 어떤 영역에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활용 목적이 있다.

MLI는 초중등 교육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미디어리터러시 학습 활동을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MLI에서 정의하는 미디어리터러시 학습 활동은 연령대별 발달 과정에 적합하도록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해서는 4개 학습 활동, 고등학생에게는 8개 학습 활동에 대한 질문을 이용하여 설문 대상자들로부터 지역사회 교육과정에서의 미디어리터러시 학습 구현 정도를 답변하도록 설계되었다. 미디어리터러시 학습 활동에 대해서 설문 대상자들은 “거의 모두“, “대부분“, “일부“, “거의“ 또는 “거의 없음“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구조화되어있다.

17) State of Rhode Island General Assembly (2017). AN ACT RELATING TO EDUCATION - CURRICULUM. 2017--S0106 LC000316.

<표 2-9> Media Literacy Implementation Index 구성요소

초등학교	고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지와 광고: 학생들은 다양한 유형의 광고를 해석하여 이미지가 어떻게 변형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광고가 시청자의 태도와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한다. • 비교와 대조: 학생들은 두 가지 다른 형태의 미디어를 비교하고 대조하여 내용, 형식, 대상자 및 관점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한다. • 이야기 하기: 학생들은 책을 애니메이션, 비디오 게임, 비디오 등의 미디어 장르에 적용하여 캐릭터, 갈등, 일련의 사건으로 구성된 상상의 세계를 묘사하는 스토리보드나 대본을 만든다. • 미디어 메시지의 영향력: 학생들은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미디어 메시지의 디자인이 사람들의 생각, 감정 및 신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고려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 및 문화적 가치: 학생들은 다양한 시대의 음악을 탐구하여 음악이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토론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정치적 문제에 대한 합의를 사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구축해나가는지를 확인한다. • 미디어 사업: 학생들은 광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떻게 타겟을 정하고, 어떻게 청중의 관심을 이끌어내며, 어떻게 미디어 회사가 수익을 창출하는지를 학습한다. • 연구 프로젝트: 학생들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다양한 정보 원천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서면 작품, 비디오, 구두 프레젠테이션, 팟캐스트, 인포그래픽 또는 기타 미디어 프로젝트를 만들어 배운 내용을 요약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 자기 주장: 학생들은 자신의 관점을 방어하기 위해 추론과 증거를 사용하여 특정 행동을 옹호하거나 반대하는 기사를 쓰거나 미디어 프레젠테이션을 제작한다.
중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관념: 학생들은 다양한 유형의 미디어 사례를 분석하여 내재되어 있는 고정관념을 파악하고 가치와 이념이 캐릭터와 스토리에 어떻게 내재되어 있는지 조사한다. • 뉴스 탐색: 학생들은 인쇄 및 방송 저널리즘에서 뉴스 기사와 의견 기사의 차이점을 파악한다. • 팀 프로젝트: 소규모 그룹의 학생들이 협력하여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결과물을 학부모, 동료 또는 지역 사회에 공유한다. • 온라인과 오프라인 생활의 균형: 학생들은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미디어 사용을 확인하고 미디어가 자신의 건강, 정체성 및 관계에 어떻게 유익하거나 해로울 수 있는지 토론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광고 제작: 학생들은 주제를 선택하고 협력하여 지역 사회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공공 캠페인을 기획한다. • 해석 반영: 학생들은 다양한 정보 출처를 조사하고 자신의 의견과 기존 사회적 통념이 해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학습한다. • 커뮤니케이터의 사회적 책임: 학생들은 사회적 관계에서 온라인 및 대면 표현과 의사소통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반성하고 대화와 적극적인 경청을 통해 갈등을 줄이고 상처를 주거나 공격적인 대화와 행동을 방해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 미디어 관련 법령 및 정책: 학생들은 민주주의 시민의 입장에서 미디어 메시지의 작성자이자 소비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학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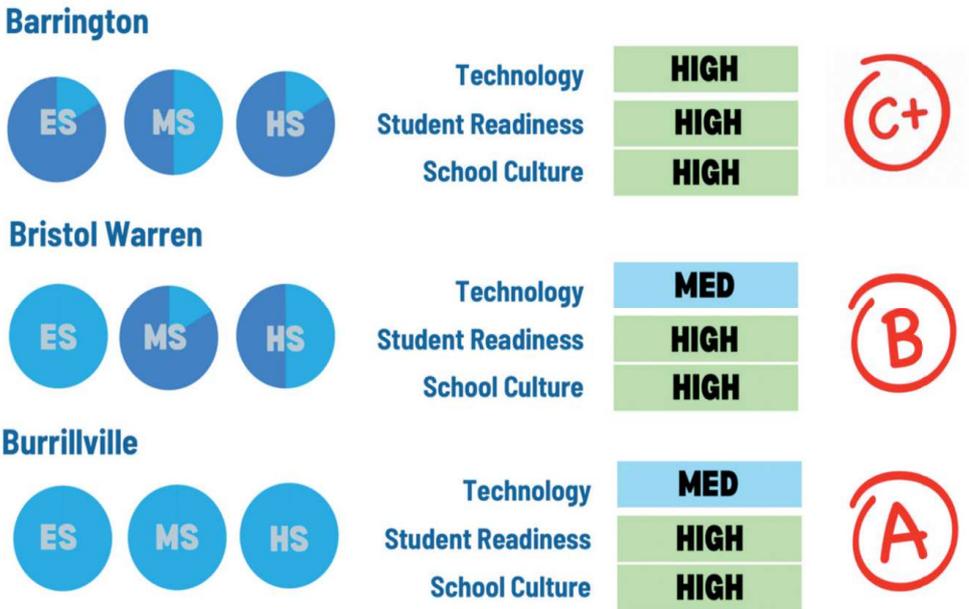
2022년 Hobbs et al.이 수행한 연구¹⁸⁾는 MLI 측정 도구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측정 도구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PCA)을 수행하였다. 수행 결과, 16개 학습 활동을 토대로 MLI를 측정하는 도구는 Cronbach $\alpha = 0.91$ 로 높은 내부 일관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0> Media Literacy Now의 미디어리터러시 적용 지수 구성요소 분석

	구성요소			
	초등학교 커리큘럼	중학교 커리큘럼	고등학교 영어교육 커리큘럼	고등학교 사회교육 커리큘럼
< 초등학교 >				
비교와 대조	0.631			
이미지 및 광고	0.799			
이야기 하기	0.318	0.391		
미디어 메시지가 미치는 영향	0.761			
< 중학교 >				
뉴스 분석		0.554		
온/오프라인 간 균형		0.722		
팁 프로덕션		0.441		
고정관념		0.726		
< 고등학교 >				
연구 프로젝트			0.747	
해석			0.649	
음악적 가치			0.520	0.318
사회적 책임			0.657	
공익 광고 제작				0.694
강력한 POV 제시			0.319	0.532
광고 사업				0.723
미디어법 및 정책				0.727

18) Renee Hobbs, Mary Moen, Rongwei Tang & Pamela Steager (2022). Measuring the implementation of media literacy statewide: a validation study, Educational Media International, Vol. 59, No. 3, pp. 189-208.

이를 토대로 Hobbs et al.의 연구는 로드아일랜드 주 전체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MLJ를 측정하고 이를 A+에서 D-까지의 등급 형태로 가공한 “커뮤니티 성적표“를 공개하였다. 측정 결과, Barrington은 초등학교 수준에서 평균보다 낮은 점수, 중학교 수준에서 평균 점수, 고등학교 수준에서 평균보다 낮은 점수로 전체적으로 C등급을 받았다. Bristol Warren은 초등학교 수준에서 평균보다 높은 점수, 중학교 수준에서 평균보다 낮은 점수, 고등학교 수준에서 평균 점수로 전체적으로는 B등급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Burrillville은 초등학교 수준에서 평균보다 높은 점수, 중학교 수준에서 평균보다 높은 점수, 고등학교 수준에서 평균보다 높은 점수에서 A등급을 받았다([그림 2-9]).



[그림 2-9] Example of Community Report Card Findings.

* 출처 : Renee Hobbs, Mary Moen, Rongwei Tang & Pamela Steager (2022). Measuring the implementation of media literacy statewide: a validation study, Educational Media International, Vol. 59, No. 3, pp. 189-208.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해외의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운용 사례에서 찾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로, 미디어리터러시 수준 향상은 개인적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가짜뉴스(Fake news)의 횡행이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면서,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 또한 크게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미디어 정보에 대한 비판적 이해 능력 함양이 가짜뉴스를 근절시킴에 있어 근본적인 대책임과 더불어 올바른 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근간임을 시사한다. 즉, 정보화 시대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초 소양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개념이다. 그리고 미디어 정보에 대한 비판적 이해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미디어 활용 능력과 더불어 습득한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비판하는 능력이 반드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유럽위원회의 미디어리터러시 지침에서 권장하는 3개 미디어리터러시 측정 방법론인 유럽시청자권익위원회의 미디어리터러시 수준 평가 기준 및 개선 기준, UNESCO의 미디어리터러시 평가 프레임워크는 미디어리터러시의 측정에 있어 개인적 역량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미디어리터러시 측정 도구의 근간이 되는 미디어리터러시 수준 평가 기준(유럽시청자권익위원회)은 습득한 정보에 대한 비판적 이해 능력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후속 연구인 미디어리터러시 수준 평가를 위한 개선 기준(유럽시청자권익위원회)에서는 개인적 역량에 집중하여 비판적 이해에 대한 측정을 인식 측면(개별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신뢰성, 차이, 잠재적 효과에 대한 인식 등)과 기술 측면(미디어 규제 지식, 사용자 행동, 예방 조치, 미디어 활용 전략 등)에서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다. UNESCO의 미디어리터러시 평가 프레임워크의 경우, 미디어 활용에 대한 개인의 역량을 미디어에 대한 접근, 평가, 콘텐츠 생산의 3개 역량에 초점을 맞추어 미디어리터러시를 측정하고 있다. Open Society Institute - Sofia의 The Media Literacy Index에서 또한 미디어 수용자의 역량을 묻는 항목인 교육 지표에서의 가중치 합산은 45%, 신뢰 지표는 10%로 개인의 미디어리터러시 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55%를 차지한다. 이러한 해외 미디어리터러시 지수들의 공통점은 개인의 미디어리터러시 역량 증진이 현재 미디어와 관련된 문제들의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임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미디어리터러시는 객관적인 측정 및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해외 미디어리터러시 측정 방법론 사례의 공통점은 개인의 미디어 활용 능력 및 미디어 사용 양상, 미디어 활용 과정에 있어 반드시 발휘되어야 하는 개인의 교육 정도를 설문을 통해 측정한다는 것이다. 지표의 구성 방식 및 측정 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기는 하나,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본 장에서 소개한 해외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사례들은 설문 항목의 유사도가 높으며, 각 연구에서의 설문 항목들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충분히 갖춘 측정 도구의 구성요소로서 기능하고 있다. 또한, 측정된 미디어리터러시 역량은 상대 비교가 가능한 형태로 지수화된다. 즉, 미디어리터러시는 현재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측정 대상 및 범위, 연구 목적에 맞게 가공하여 측정이 가능하며 이는 시·군·구, 읍·면·동 단위는 물론 특정 집단 및 개인 수준까지 측정범위를 정교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 3 장 국내 미디어리터러시 조사 분석

미디어리터러시 지수를 주제로 수행된 국내 연구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 살펴볼 수 있다. 지수 자체를 개발하는데 집중한 연구들이 한 축이며, 기존에 개발된 지수를 정책적으로 활용해 활용성을 높이고자 했던 연구들이 나머지 한 축을 맡고 있다. 본 장은 두 갈래로 진행된 국내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개발 연구 현황과 정책 및 교육 현장에 대한 적용 실태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다양한 정책 및 공공기관 등에서 수행된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개발 및 조사 연구의 연구 내용 및 정책적 활용방식 등을 분석적으로 검토한다.

미디어리터러시 관련 정책 수립 및 관리를 담당하는 국내 정책 및 공공기관은 다양하다. 이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부처로서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개발 정책 기획 및 사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기관인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개발은 물론 관련 사업 및 운용을 담당하는 대표적 기관이다. 그밖에 미디어 교육 관련 정책 기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있으며, 연구 및 교육 담당 기관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각 시도교육청 등이 존재한다.

본 장은 앞서 언급한 각 기관들이 중심이 돼 수행한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관련 두 갈래의 연구 경향을 지수 개발 측면과 정책적 활용 측면으로 나뉘어 평가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분석적으로 다뤄질 대표적인 연구 성과물은 다음과 같다.

2017년 시청자권익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방송통신위원회의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개발 및 지역별 격차 측정 조사”와 2009년 한국언론재단에서 기획 진행된 “미디어교육 효과측정 모델 :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개발” 연구는 대표적인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개발을 목표로 수행된 연구다.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 지원 사업 일환으로 수행된 “지식 정보 역량 개발 지원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지수 개발 연구” 역시 지식 정보 창출이라는 다소 협소한 목표로 수행된 과제이지만 큰 틀에서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개발과 방향성을 공유한다.

2021년 방통융합정책연구로서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한 미디어리터러시 역량 측정 연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수행한 2022년의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미디어리터러시 역량 측정 연구”, 그리고 2016년 시청자 권익보호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방송통신위원회의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효과성 연구”는 공히 교육 지원 및 정책 개발이라는 구체적인 목표

를 두고 수행된 과제다. 정책 활용의 관점 차원에서 앞선 지수 개발 및 검증을 목표로 수행된 세 건의 연구와는 차별화된다.

본 장은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개발을 목표로 수행된 세 건의 연구와 교육 현장 검증 및 정책 적용을 목표로 하는 세 건의 연구를 중심으로, 조사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지수 구성 및 타당성 검토 차원을 통합적으로 살펴본다. 방법론 차원에서 해석적 메타분석을 준용한다. 이는 해석 중심의 연구를 체계화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론으로서, 이론적 차원의 통합적 논의를 수행하기 적절한 접근이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개발에 활용된 연구들의 주제와 연구물 검토, 그리고 결과에 대한 체계적 추출 및 분석을 통해 그 관계성을 파악하고 개념 간 상호 변형의 가능성을 진단한다. 주요 분석 유목으로서 조사의 배경과 목적, 지수 구성의 근거, 타당성 및 검증에 대한 판단, 그리고 결과 및 적용을 중심으로 살핀다. 이를 통해 지수 개발에 있어 주안점들을 판별하고, 정책적 적용에 대한 맥락을 읽음으로써 국가승인통계 추진의 근거를 밝히고자 한다.

제1절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개발 연구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개발은 정책적 요구에서 비롯됐던 것으로 판단된다. 미디어리터러시의 사회적 맥락과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회 환경이 고조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정책당국은 전 국민의 미디어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와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의 미디어리터러시 수준을 올곧게 평가할만한 표준화된 판단지표는 존재하지 않았다. 정책당국은 이를 타개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정책의 집행을 위해 타당성 높고 객관화된 지표를 개발하고자 했다.

본 절은 2017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청자권익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한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개발 및 지역별 격차 측정 조사”, 2009년 한국언론재단에 의해 수행된 “미디어교육 효과측정 모델 :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개발” 연구,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주관한 “지식 정보 역량 개발 지원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지수 개발 연구” 등 세 건의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개발 연구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각 연구를 조사 목표 및 특성, 지수 구성 및 정교화, 그리고 결과의 함의와 한계를 유목 별로 구분하여 해석적 메타분석의 관점에서 분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진은 제시된 연구 가운데 상대적으로 최근 연구인 2017년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개발 및 지역별 격차 측정 조사”를 가장 먼저 분석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지수 개발 및 구성에 있어 본 연구 과제와 유기적 연계가 가장 높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과거에 이루어진 2006년, 2009년 연구의 경우, 각각 디지털 정보화 시대의 ‘기술적’ 차원에 집중(2006), ‘미디어 평생 교육’ 적 차원에 주목(2009)라는 역사적 맥락과 상황이 중첩되어 있다. 따라서 본 절은 지수 개발의 의의와 목적을 본 연구와 공유하는 논의로서 2017년 연구를 우선 살피고, 이어서 나머지 두 연구를 아우르는 형태로 서술할 것이다.

1. 조사 목표 및 특성

정책 전문가 및 학계 연구자들은 현재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미디어리터러시 수준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체계 자체가 명확하게 정립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구체적인 평가 지표가 부재하므로 장단기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어렵고, 교육이 체계성을 상실한 채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디어리터러시의 핵심 역량 중 하나인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비판적 이해 능력을 향상하게 만드는 대신 기술적 활용과 제작에 중점을 둔 교육 프로그램이 우세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미디어리터러시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 부족으로 인한 결과라는 점이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각 연구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화된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도입 및 적용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합의된 미디어리터러시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하위 구성 요인을 고려한 타당한 지표를 설정하고 표준화된 미디어리터러시 지수를 개발해야 함을 역설한다. 미디어리터러시 지수가 올바르게 개발된다면, 이를 활용하여 국민들의 미디어리터러시 수준을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다양한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일관되게 평가함으로써 교육 대상자에게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요컨대 각 연구들은 국민의 미디어리터러시 능력과 수준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및 정책의 효과를 장기적으로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는 표준화된 지표와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하는 목표로 수행되었다.

이에 2017년의 연구는 미디어리터러시 영역과 지표들을 검토하여 보완, 재구성하고, 그에 따라 지수 적합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했다. 콘텐츠 판별 역량, 비판적 사고와 의사소통 역량, 생애 주기별 역량 강화 교육 세 가지 연구 목표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보다 구체적으로, 첫째, 범람하는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판별 역량 측정 및 함양을 목표로 삼았다. 두 번째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중심을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이해 능력으로 전환하고자 했다. 이는 현대 미디어 환경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잘못된 정보, 가짜뉴스, 혹은 혼란스러운 콘텐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미디어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세 번째 목표로 이러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은 국민들이 자신의 미디어 사용 습관과 정보 선택 과정을 개선하고 사회적인 판단을 올바르게 내리는 데 도움을 주는 부분을 주안점으로 삼았다.

2017년 연구가 변화하는 미디어 시대에 가짜뉴스의 등장과 확산 속 올바른 정보의 판별에 초점을 맞췄다면, 2009년의 연구는 미디어 교육 차원에 주목하고 있다. 국내 미디어 교육은 1970년대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약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초기에는 사회 단체의 '미디어 감시' 운동에서 시작되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학교 교육 수준에서 미디어 교육이 논의되었다. 주로 텔레비전 교육에서 출발한 미디어 교육은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동시에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에서 촉발되었다. 텍스트로 구성된 책 및 신

문과 달리 영상 미디어는 현실을 직접 묘사하는 매체로써,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폭력성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에 따라 기성세대의 주목을 '텔레비전으로부터의 보호' 관점으로 연결시켰다.

나아가 디지털 미디어의 등장은 영상 미디어에 중점을 둔 미디어 교육을 변화시켰다. 디지털 미디어는 텍스트, 영상, 기호, 그림 등 다양한 표현 양식을 통합하여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러한 디지털 미디어의 특성은 미디어 교육 개념을 '리터러시' 및 '미디어 능력'과 같은 일반적인 용어로 정의하게 했으며, 미디어 교육 역시 '리터러시' 개념을 도입(김양은, 2005)하여 다양한 미디어를 포함한 개념으로 확장시켰다. 디지털 미디어의 도입은 미디어 교육의 목표를 '비판적 이해와 분석'에서 '창의적 생산과 소통'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미디어 교육의 확장은 영상 중심의 미디어 교육에서 문자, 영상, 디지털 미디어를 포함한 다양한 미디어를 교육에 통합시키는 방향으로 진전되었다. '미디어리터러시' 및 '미디어 능력'을 강조하는 미디어 교육 학자들은 대부분이 미디어 교육에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미디어를 생성하는 능력을 함께 강조했다(김양은, 2005, 2007; 문혜성, 2005; 안정임·전경란, 2006; Buckingham, 2002/2003; The New London Group, 1996).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교육 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연구(강진숙, 2007; 김양은, 2005; 안정임, 2002)들은 초기의 텔레비전 중심 미디어 교육과는 다른 개념과 방식을 미디어 교육에 도입해야 함을 강조한다(Masterman, 1985).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미디어 교육은 '멀티 리터러시(multiple literacy)'로, 다양한 언어 및 미디어 능력 함양을 목표로 한다(김양은, 2007; Meyrowitz, 1998; The New London Group, 1996).

영국 미디어 규제 기관인 Ofcom (Office of Communication)은 초기 미디어리터러시를 '다양한 매체적인 맥락 안에서 미디어에 접근(Access)하고, 미디어를 이해(Understand)하며, 창의적인 제작(Create)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했다.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개인 이용자의 '생산(제작)'이 가능해진 특성이 강조된 정의로, 이는 곧 미디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었다. 이전의 미디어 교육은 주로 '미디어에 대한 교육(education about media)'을 중심으로 하여 미디어 이해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디지털 미디어의 등장으로 인해 미디어 교육은 개인의 미디어 생산에 중점을 두게 된 것이다. 유럽연합이 발표한 미디어 교육 정의에서도 미디어리터러시를 '접근(Access), 분석(Analyze), 평가(Evaluation), 창의적 제작(Creative Production)'으로 정의한 바 있다(EC, 2007). 2009년의 연구는 위의 미디어 교육 정의에 따라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판단하고 적합한 제언에 주안점을 두었다.

2006년에 수행된 연구는 2000년대 초반 정보화 사회라는 이름 아래 등장한 21세기에 요구되는 기본 기술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술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s, 2002)과 관련된 논의에 주목한다.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술은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 사고와 문제해결 기술, 그리고 대인관계와 자기관리 기술을 포함하며,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에 있어 정보통신 기술, 즉 ICT에 대한 역량이 요구된다.

이러한 정보통신 기술은 단순히 기술 습득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식 창출은 내면화 과정과 외면화 과정을 통해 발생한다. 내면화 과정은 개인이 외부에서 얻은 정보를 개인의 인지 과정을 통해 처리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외면화 과정은 사회 및 문화적 맥락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이 구성되는 과정이다(Kang & Byun, 2001; Nonaka, Toyama, & Byosière, 2001; Scribner, 1997). 다시 말해, 지식 창출은 정보 수집, 정보 처리 및 상호작용을 통해 복합적으로 발생하며, 이러한 활동은 매체와 기술을 활용하는 역량, 즉 디지털 리터러시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 요컨대 디지털 매체와 디지털 기술의 등장 및 발전은 인간이 지식을 창출하는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그에 따라 IT 강국으로 부상하는 한국 사회에서 그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ICT 기술 인프라 구축, 소프트웨어 증진과 동시에 이용자들의 건강한 ICT 활용 및 리터러시 수준 향상을 주문했다.

그에 따라 2006년 연구는 단순히 ICT 리터러시 측정뿐만 아니라 디지털 리터러시 측정이 더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유효한 시각으로, 미래 사회에서는 디지털 매체와 기술이 우리의 생활과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전망을 밝혔다. 따라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와는 다른 디지털 매체와 기술에 대한 리터러시를 측정하고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디지털 리터러시”로 명명하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2. 지수 구성 및 정교화

2017년 연구에서는 기 수행된 미디어리터러시 연구들에서 제시된 지수 체계를 세분화하여 구성했다. 각 단계로 첫째, 지수체계 확립을 위한 초기 모델 선정, 둘째, 지수의 수정 보완을 위한 연구진 검토, 셋째, 지수 구성 체계 초안 도출, 넷째, 델파이 조사를 통한 의견 수렴, 다섯째, 확립된 지수 구성 체계와 측정 문항 확정, 여섯째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을 수행했다.

첫째, 지수 체계 확립 과정에서 미디어리터러시 지수의 복잡성과 혼란에 대한 우려를 넘어서 고자, 2011년 발표된 유럽시청자권익위원회(EAVI)의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하여 지수의 유효성과 신뢰성을 강화했다. 유럽의 지수체계를 국내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수정함으로써 국내 미디어리터러시의 특수성을 반영하고자 했다.

둘째, 연구진의 지수 개발 및 수정 작업에서의 분석적 검토를 통해 더 나은 미디어리터러시 측정 도구를 검토했다. 수정 및 보완 작업을 통해 개발된 새로운 지수는 국내 미디어 환경과 국민의 미디어 이용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연구진의 노력이 담겨 있다.

셋째, 지수 구성 체계를 측정 용이성, 범용성, 적용 가능성, 그리고 확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재구성했다. 이어서 델파이 기법을 통해 연구진의 주제 매물에 따른 객관적 판단 결여를 넘어서고자 했다. 전문가의 관점을 반영하고, 항목의 가중치를 확인하고, 지수 타당성을 높이는 데 활용했다.

도출된 1차 지수 모형을 구체화하고 각 하위영역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측정 가능한 변수들로 세분화했다. 이 작업은 미디어리터러시 지수의 구체적인 구성요소와 항목을 정의내리는 주요 과정이다. 연구진이 구성한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받아 설문 문항의 적절성을 보장하고자 했다. 또한,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은 연구의 결과물을 검증하고 지수 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단계다. 연구 결과의 신뢰성과 유효성을 확보하며, 연구가 효과적으로 설계되었음을 입증하고자 했다.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모형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인하고 수정 및 보완을 위해 전문 리서치 회사를 활용해 온라인 서베이를 수행, 표본 추출 및 도출된 데이터를 해석했다. 위 연구가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구성 체계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설정한 주요 요소와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개인적 역량과 환경적 요소다. 미디어리터러시는 더이상 개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이슈로 여겨지며, 개인 역량과 환경적 요소를 복합적으로 반영하는 지표체계를 설계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둘째, 다양성 및 일관성 요소다. 미디어리터러시라는 추상적인 개념의 다양성으로 인해, 각 지수체계가 모든 개념을 수용하거나 모든 지수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다양한 지수체계로부터 계승된 공통 요소를 최대한 흡수하면서 지수체계의 다양성을 한정하고 논의 및 연구의 일관성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셋째, 사회적 지표로의 활용이다. 다양한 국가에서 미디어리터러시를 21세기 민주 사회의 필수 역량으로 인식하고, 시민성을 함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연구는 개발 중인 미디어리터러시 지수가 사회의 한 단면을 진단할 수 있는 범용적인 지표로 기능하도록 설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디어리터러시를 사회적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위 연구에서 제안한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구성 체계는 환경적 측면과 개인적 역량을 중심으로 두어 미디어리터러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려는 노력을 반영하였다. 이러한 구성은 미디어리터러시를 개인 역량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과 사회적 맥락과도 고려한 접근이다.

환경적 측면은 이용자가 어떻게 다양한 미디어 형태와 콘텐츠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것은 전통적인 미디어 가용성뿐만 아니라 최신 미디어 기술과 플랫폼에 대한 접근성도 고려된다. 이러한 평가는 미디어 환경의 다양성과 접근 가능성을 고려하는 데 중요하다.

개인적 역량 영역은 개인이 미디어리터러시를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기술적 역량, 비판적 사고, 미디어 활용 능력, 사회적 소통 능력 등을 포괄한다. 이러한 역량은 개인이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안전하게 활용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반영한다.

연구진이 제안한 모형은 아직 제안 단계에 머물러 있으므로, 실증적 검증과정을 거치고 완전한 지수 체계를 확립된다. 델파이 기법과 타당성 분석을 활용하여 유효성을 분석, 미디어리터러시 지수를 측정하고 개선했다.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조사를 통해 지수구성 체계를 수정 및 보완한 결과, 초기 초안의 4개 영역(접근, 비판적 이해, 창의적 활용, 책임과 권리)는 유지되었지만, 세부 구성요소의 수는 14개에서 12개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수정과 보완은 전문가들의 의견과 인식을 반영한 결과로, 지수체계의 정확성과 적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이러한 조정은 지수의 명칭과 각 요소의 정의에도 영향을 미쳤다. 수정된 지수 구성 체계는 미디어리터러시의 핵심 측면을 반영하고, 전문가들의 관점과 인식을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조정됐다.

측정 문항의 개발과 데이터 수집 결과는 미디어리터러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책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에 활용되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현대적인 미디어 환경에서 더 잘 대응하고, 미디어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연구는 최종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 구성된 지수 설문 문항과 내용을 실제 적용했다.

2009년 연구에서는 포괄성, 종합성, 비교가능성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지수 개발을 수행했다. 첫째, 포괄성은 지수가 현실의 미디어리터러시를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미디어리터러시 지수는 실제 미디어 환경과 미디어리터러시 현실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종합성은 지수가 미디어리터러시를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측정하고자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미디어리터러시는 다양한 영역과 측면을 포함하며, 이러한 다양성을 고려하여 미디어리터러시 지수가 설계되어야 한다. 셋째, 비교가능성은 미디어리터러시 지수는 비교 가능한 틀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미디어리터러시 지수의 항목을 요인별로 구분하고, 이를 통해 대상 간의 비교 및 미디어리터러시 능력 간의 비교가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개발은 미디어 교육을 평가하기 위한 모형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미디어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제작교육 현장 등에서 기술 교육 중심의 문제점을 짚고, 미디어리터러시의 균형적 능력 향상 수업을 구상하고 제언했다.

미디어리터러시 지수는 네 가지 주요 차원인 미디어 접근능력, 미디어의 비판적 이해능력, 창의적 표현능력, 그리고 소통능력에서의 지표화 작업을 통해 구성되었다. 이러한 차원은 미디어 교육을 통해 개인이 개발해야 할 미디어리터러시 능력을 나타낸다.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네 가지 차원을 검토하고 확정하였으며, 미디어리터러시의 핵심 요소로 확정되었다.

각 차원은 미디어리터러시의 다양한 측면을 나타내며, 각각의 영역은 미디어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개발해야 할 능력과 기술을 반영한다. 우선 미디어 접근능력(Access) 영역은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미디어의 특성을 이해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미디어 접근능력은 미디어 교육의 핵심 영역 중 하나로, 디지털 미디어 등의 등장으로 인해 더욱 중요해지는 부분이다. 미디어의 비판적 이해능력(Critical Understanding) 영역은 미디어 메시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나타낸다. 이 영역은 미디어 교육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이며, 미디어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관점에 집중한다. 창의적 표현능력(Create) 영역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이 영역은 미디어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기술적 사용능력, 메시지 구성능력, 전달능력 등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둔다. 소통 능력(Communication) 영역은 미디어를 통해 사회 참여를 실현하거나 필요한 능력을 나타낸다.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참여를 통해 사회적 규범에 기반한 생활 방식을 익히는 등의 능력을 개발하는 차원에 초점을 맞춘다.

2006년 수행된 디지털 리터러시 지수 측정을 위해 제시된 일곱가지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 및 행동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정의한다. 이 단계에서 어떤 요소를 평가할 것인지 결정된다. 다음으로 검사의 목적을 구체화한다. 어떤 측면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측정하려는지 및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정의한다. 이어서 검사 도구의 청사진을 작성한다. 이 청사진에는 이원분류표, 검사 소요 시간, 문항 수, 문항 유형, 난이도 수준, 지시 사항, 시행 절차, 채점 방법, 문항 제작, 예비 검사 문항 검토, 검사 문항 편집 및 수정, 본 검사 도구 제작이 포함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테스트함으로써 정확한 결과를 얻고 테스트 대상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을 정량화할 수 있다. 이러한 도구를 통해 교육 시스템과 학습자의 요구에 대한 정보를 얻고 교육 프로그램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준다.

2006년의 연구는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지수를 개발하는 일환으로 수행되었으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초등학교부터 대학 수준까지 모든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교육행정가, 교사, 예비 교사 및 학습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여, 교육기관과 개인 수준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평가하는 지수와 지표를 개발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를 정의하고 영역 및 수준을 설정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또한, 각 영역에 대한 지표와 하위 스킬을 개발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었다. 이러한 작업은 파일럿 연구로 진행되었지만, 향후 전국적 수준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지수의 개발과 활용을 위한 기초가 될 것으로 보였다.

3. 연구 결과 및 적용

2017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양한 인구 특성에 따른 미디어리터러시 수준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고 고려하는 것은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및 정책 개발에 있어 주안점으로 삼을 지점이 된다.

연구 결과 첫째, 성별에 따라 미디어리터러시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남성은 컴퓨터 이용 능력, 미디어 산업 및 규제에 대한 이해, 자기표현, 참여 및 협업 능력에서 여성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여성은 미디어 재현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이용자 권리 보호 행동에서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둘째, 지역에 따라 미디어리터러시 수준에 차이가 나타났다. 도시 거주자들은 모든 기술적 이용 능력, 비판적 이해 능력, 자기 표현, 참여 및 협업 능력, 책임 있는 이용 및 이용자 권리 보호 행동에서 읍면 지역 거주자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셋째, 학력 수준에 따라 미디어리터러시 수준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대졸(대학 재학) 학력을 가진 이용자들은 미디어리터러시 수준이 고졸 학력을 가진 이용자들보다 높았다. 넷째, 소득 수준에 따라 미디어리터러시 수준의 차이가 있었다. 소득이 높은 집단은 인터넷 및 컴퓨터 이용 능력, 비판적 이해 능력, 관심사 확장을 위한 창의적 활용 능력, 책임 있는 이용 및 이용자 권리 보호 행동에서 소득이 낮은 집단보다 더 높은 미디어리터러시 수준을 보였다. 다섯째, 연령대에 따라 미디어리터러시 수준의 차이가 나타났다. 10-20대는 30-40대 및 50대 대비 미디어리터러시 수준이 더 높았으며, 특히 디지털 미디어에 익숙한 젊은 세대가 미디어리터러시에서 우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는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및 정책 개발이 다양한 인구 그룹을 고려하여 사용자들에게 미디어리터러시 스킬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지역, 학력, 소득, 연령대 등과 관련하여 개별화된 접근 방식을 고려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개발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7년의 연구는 정교화된 미디어리터러시 지수체계를 통해 사회적 지표로서 한국인의 미디어리터러시 수준 판단과 성별, 지역별 차이 등을 읽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지수를 활용한 경험적 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미디어리터러시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소외 계층 등 집단별 쟁점 도출 및 정책 제안에 활용될 수 있음을 피력했다. 특히 미디어 교육 정책에의 반영에 있어 객관적 데이터가 되는 근거 자료를 만드는 일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2009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디어리터러시 지수는 네 가지 항목 중에서 “미디어 접근능력”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창의적 표현능력”이 가장 낮았다. 미디어 접근 능력과 미디어의 비판적 이해 능력은 일반적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소통 능력의 경우 고등학생이 다른 학년의 학생들보다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이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의 학년별 조정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단서가 된다.

나아가 미디어리터러시 지수의 하위 항목과 학습 성향, 비판적 사고, 학습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 및 부모 규제 간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디어 교육이 학생들의 학습 성향 및 미디어리터러시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다. 또한, 미디어리터러시 지수의 하위 항목과 학업성적평가 및 미디어 교육 수업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미디어 교육이 학업 성취와 학생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 미디어리터러시 하위 항목 중에서 “소통 능력“이 학습 성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미디어 교육이 학생들의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디어리터러시와 학습 성향 간의 회귀 분석 결과에 따르면 “비판적 사고“가 미디어리터러시 하위 항목에 가장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면 미디어리터러시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009년 연구는 궁극적으로 미디어 교육 및 미디어리터러시 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교육 기관과 교육자는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미디어리터러시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에서 제시된 미디어리터러시 지수는 미디어 교육의 효과를 측정하고 모델링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이 지수는 미디어리터러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세부 요소들을 개념화하고, 미디어 교육의 효과를 평가하고 분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척도를 제공한다. 이는 미디어 교육의 효과를 연구하고 미디어리터러시를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이 미디어리터러시 지수를 통해 국내 및 국제적 수준에서 미디어리터러시 능력을 비교하고,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정부, 교육 기관 및 교육자들은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미디어리터러시 지수를 사용하면 교육자들은 학생들의 미디어리터러시 능력을 개별적으로 파악하고 학생별로 개별화된 교육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을 밝힌다.

2009년 연구는 보다 직접적으로 다음과 같은 지수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미디어리터러시 지수를 통해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교육 이전과 이후에 학생들의 미디어리터러시 능력을 평가하여 교육 효과를 판단하는 것이다. 또한, 학교 또는 교육 프로그램을 받지 않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미디어리터러시 능력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도 미디어리터러시 지수를 확장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자나 교육기관은 미디어리터러시 지수를 활용하여 교육 목표와 내용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어떤 영역 또는 능력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결정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다.

나아가 다양한 대상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미디어리터러시 지

수를 활용하여 대상마다 다른 교육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초, 중, 고등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각각 다른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미디어리터러시 지수의 하위 항목을 통해 학생들의 개별 미디어리터러시 레벨을 파악하고 이를 고려한 교육이 가능한 것이다. 끝으로 다양한 미디어 교육 계획 및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역시 미디어리터러시 지수를 사용하여 어떤 미디어리터러시 능력이 필요한지 이해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표준화된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활용은, 무엇보다도 미디어 교육 효과성을 위한 국가승인통계와 같은 정례적인 조사의 당위성이 된다. 다시 말해 국가승인통계로서 미디어리터러시 지수는 국민의 미디어리터러시 역량과 교육 요구를 파악하는 지표가 된다.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 및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표준화된 지수 운용을 통해 국민의 미디어리터러시 역량과 요구를 고려하여 현실적이고 유용한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국가승인통계로서 미디어리터러시 조사는 정부의 미디어 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의 근거로 활용 가능하다. 정례적인 역량조사를 통해 정부는 어떤 측면에서 미디어 교육 정책을 강화하거나 수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수준과 상황에 맞는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2006년의 연구는 앞으로의 디지털 리터러시 지수 개발과 활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부분을 제안으로 제시했다. 우선 연구 도구를 보완하고 개선하여 미래의 측정 작업에 더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교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문항 풀을 확장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측정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양한 디지털 리터러시 영역과 스킬 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 평가를 위해 문제해결형 측정 도구를 개발하여 실제 상황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을 측정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끝으로 개별 평가 대상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개별 학습자와 교사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디지털 리터러시 정책에 대한 제안도 이루어졌다.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관리하고 측정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을 모색하고 교육체계와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음을 짚었다. 우선 국가 차원에서 전국민 대상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측정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표 및 지수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는 앞서 언급한 표준화된 미디어리

터러시 지수의 필요성에 대한 공통의 고민이자 결론이기도 하다.

디지털 리터러시를 측정하는 표준화된 검사 도구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국내외에 표준화된 검사 도구를 개발하여 국가 간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을 비교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디지털 리터러시 측정 도구의 결과가 실제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를 통해 더 정확한 측정 도구를 개발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교육적 차원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소양을 교육과정에 통합하여 학생들이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 보았다. 무엇보다도 연구 결과가 기존 정책과 연계할 방안을 개발하고,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개발을 위한 교과목 통합 교육 안내서를 개발하여 교육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끝으로 초등학생, 중학생, 교사 및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표준화된 디지털 리터러시 측정 도구를 개발하여 국민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을 평가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데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언을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의 측정과 관리, 교육과정과의 통합, 정책 개발 및 교사 교육에 관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를 실현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향상시키고 관련 교육 및 정책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제2절 미디어리터러시 지수를 활용한 정책 연구

전 국민적인 미디어리터러시 조사 및 평가는 국내 미디어 교육의 진전과 국민의 미디어리터러시 능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살펴야 할 필수 단계다. 우선 정기적인 미디어리터러시 조사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미디어 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 미디어 교육 기관들은 과학적인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국민의 미디어리터러시 역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연령, 지역 및 대상에 맞는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국민의 미디어리터러시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고려하여 국민의 실생활에서 필요한 미디어 교육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기적인 미디어리터러시 조사는 정부가 수립한 미디어 교육 정책과 개인의 미디어 교육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는 데도 필수적이다. 지속적인 지표를 통해 누적된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미디어 교육 정책의 진단과 방향 설정뿐만 아니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국민 개개인에게 자신의 수준과 상황에 맞는 미디어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미디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미디어리터러시 지수를 활용한 정책 추진이 중요한 이유이다.

2016년에 수행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효과성 연구>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및 간헐적 평가도구 개발을 넘어선 교육 효과성에 접합된 실질적인 평가로 그 연구 범위와 목적을 분명히 한다. 다시 말해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효과성 연구를 통해 미디어리터러시 측정을 정교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21년 수행된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한 미디어리터러시 역량 측정 연구>와 2022년의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미디어리터러시 역량 측정 연구>는 모두 지속적인 미디어리터러시 조사를 통한 역량 측정과 교육 정책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된 연구다. 두 연구 모두 방송통신위원회(2020)에서 개발한 '미디어리터러시 지수'를 보완하고 타당성을 확보하여, 이를 기반으로 전 국민 미디어리터러시 역량 평가와 함께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인식 실태를 조사하고자 했다. 조사 및 연구 결과는 학문적, 사회적, 정책적 측면에서 지속성을 갖는 지수로서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더불어, 현재 국민의 미디어리터러시 수준과 인식, 그리고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국내 미디어 교육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절은 2016년의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효과성 연구>, 2021년 수행된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한 미디어리터러시 역량 측정 연구>, 2022년의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미디어리터러시 역량 측정 연구> 등 세 건의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개발 연구를 분석대상으로 삼아, 앞선 결과 같이 개별 연구들의 조사 목표 및 특성, 지수 개발 및 적용, 그리고 연구 결과와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개별 유목들의 의미와 맥락들을 일별하여 분석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조사 목표 및 특성

2016년의 연구는 시청자미디어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의 성과와 효과를 측정하고,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성 및 효과를 확인하고 교육 계획 및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기초 자료들을 제공했다. 교육 훈련프로그램의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사업의 가치와 필요성 입증에 활용할 수 있으며, 향후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게 된다.

연구는 교육기관과 교육 관련 정책 결정자에게 중요한 정보와 통찰력을 제공하여 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한다. 미디어 교육 사업의 목표 달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신뢰성과 타당성 있는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교육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효과성 조사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연구진은 선순환적인 평가 모델을 구축하여 평가 결과를 다시 지원 부문에 적용함으로써 전체 교육 시스템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았다.

이를 위해 미디어 교육의 목표와 효과를 측정하는 신뢰성과 타당성 있는 평가 도구의 개발에 주력했다. 궁극적으로 교육 품질을 향상시키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했다. 그에 따라 기존에 개발된 미디어리터러시 평가 지수들로부터 항목을 추출해, 교육프로그램의 실질적 수혜자를 대상으로 질적 인터뷰를 수행하는 복합적인 방법을 따랐다. 이를 통해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수행하는 교육 사업에 적합한 내용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았다.

미디어리터러시 측정 도구는 다양한 하위 속성을 포함하여 미디어리터러시를 평가할 수 있도록 일반화되어 설계되었다. 이러한 도구는 학문적 수준에서 미디어리터러시의 다양한 측면을 평가하려는 목적에서 개발되었으며, 따라서 일반적이고 다양한 상황에 적용 가능한 특성을 가

진다. 그러나 특정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거나 특정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도구로는 이러한 일반적인 도구가 항상 적합하지는 않을 수 있음을 연구에서는 주지했다. 따라서 연구진은 해당 프로그램에 특화된 도구를 개발하거나 도구를 수정하여 목표에 맞게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요컨대 위 연구는 시청자미디어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미디어리터러시를 특화된 방식으로 측정하고, 해당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할 것이다.

2021년의 연구는 시청자미디어센터의 미디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교육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운영하는 10개의 지역 센터에서는 국민들의 미디어 이용 권익 증진과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미디어 교육을 수행 중이다. 맞춤형 미디어 교육, 실생활 미디어 참여 지원, 장애인 등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권 보장, 방송제작 장비, 시설의 이용지원,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 등을 폭넓게 실시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디지털 미디어 시대 소통 역량 강화와 미디어 이용자 권익 보호 및 향상, 이를 통한 미디어의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기관의 목표로 삼고 운영하고 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방송법」 제90조 2항의 “시청자의 방송 참여와 권익 증진”에 근거, 미디어에 관한 교육, 체험 및 홍보,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지원, 각종 방송 제작 설비의 이용 지원, 시청자의 방송 참여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 사회, 상설, 소외 계층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학교 교육은 미디어 제작과 인재 양성을 중심으로, 사회 교육은 미디어에 대한 이해력 향상과 미디어 참여 기회 제공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또한 상설 프로그램으로 미디어 제작과 미디어 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외 계층을 위한 미디어 제작과 활용 교육에도 주력하고 있다.

미디어 교육의 체계적 운영과 효과적인 프로그램 구축을 위해,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이용자의 미디어리터러시 역량 파악 및 니즈 파악을 연구 목표로 삼고 관련 논의를 이어왔다. 특히 2021년 수행된 조사는 국민들의 미디어리터러시 역량과 실태 파악에 집중했다. 시청자미디어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들의 교육 전 미디어리터러시 역량과 실태 조사를 우선 수행하고, 국민의 미디어리터러시 역량 전반에 대한 이해와 시청자미디어센터 참여자의 미디어리터러시 역량에 대한 실태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교육의 효과성을 측정하고 있다. 사전, 사후 효과에 대한 측정과 이를 통한 성과 지표 도출을 통해 미디어리터러시 정책 수립 및 집행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2022년의 연구는 2020년 수행된 <디지털사회의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개발> 연구의 지수 개발 과정과 도출 지수에 대한 검토를 위한 논의의 일환으로 수행됐다. 이에 따라 세 가지 주요 목표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첫째, 이용자 관점을 반영하는 지수 개발이다.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개발에 있어서 일반인 대상 인터뷰를 실시하여 이용자의 관점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미디어 사용자의 경험과 의견을 수집하여 미디어리터러시 지수의 설계와 질문 항목을 미디어 사용자에게 더욱 적합하게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둘째, 전 국민 대상 조사를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미디어리터러시를 평가하려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았다. 이것은 미디어리터러시의 지역, 연령, 성별, 사회적 배경 등 다양한 변수에 따른 변화를 이해하고 세분화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근거가 된다.

셋째, 질문 항목 설계에 있어서의 용이성에 집중했다. 질문 항목을 사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에 주목하여, 너무 복잡하거나 중의적인 질문 항목은 정확한 결과를 얻는 데 방해가 될 수 있기에 이를 배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파일럿 조사를 통해 문항 타당도와 적합도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과정도 거쳤다. 이를 통해 미디어리터러시 지수의 신뢰성과 유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주지했다. 요컨대 미디어리터러시 지수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하며, 이러한 연구와 지수 개발은 미디어리터러시를 증진하고 정보를 더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무엇보다도 연구의 핵심 지점은 미디어리터러시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는 점에 있다.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사회의 미디어리터러시란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시민으로서 윤리와 규범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critical thinking & understanding), 미디어 이용(use & affordance), 생산과 표현(production & expression) 및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참여하면서(communication & participation) 자신의 미디어 이용에 대해 성찰하며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이다.

미디어리터러시의 6가지 핵심 역량으로 구성된 접근 방식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고 미디어리터러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맥락으로 강조된다. 이러한 구성은 미디어 환경에서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미디어를 사용하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다. 우선,

윤리와 규범은 미디어 사용, 제작 및 소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가치 및 원칙에 대한 이해와 적용은 미디어리터러시의 핵심 부분이며, 미디어 사용자가 미디어 환경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미디어에 대한 물리적 접근과 접근 기회는 중요한 측면이지만,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아 독립적인 역량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접근성 문제는 미디어 환경의 공정성을 높이는 정책과 인프라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아울러 미디어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는 미디어 사용자의 관점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끝으로 온라인 위협과 폭력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능력은 디지털 시대에서 중요하며, 그에 대한 자기보호 차원을 역량으로 살폈다. 이러한 역량은 개인의 미디어 경험과 안전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핵심 역량은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개발 및 평가에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며, 현대 미디어 환경에서의 적응과 참여에 도움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미디어리터러시의 다양한 측면을 강조하는 접근 방식을 통해 미디어 교육 및 정책 개발에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2022년에서 다룬, 미디어 이용자 조사와 전문가 대상 심층 인터뷰의 논의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일반인, 특히 학부모와 청소년들의 인터뷰는 미디어리터러시 개념과 역량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파악하고 교육 현장을 인식하여,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데 밑거름이 된다. 이러한 인터뷰는 전문가 의견과 달리 미디어 사용자의 실제 경험과 이해에 중점을 두며, 미디어리터러시의 실제 측면을 더 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학부모들은 자녀의 미디어리터러시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고 미디어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미디어 교육은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강조하는 데 중요하며, 미디어 사용에 대한 조절 능력과 자기보호 역량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주지시켰다. 청소년들은 미디어를 주로 즐거움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며, 온라인 환경을 오프라인 관계의 확장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들의 낮은 미디어리터러시 이해도는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지점이 된다. 부모와 청소년들은 비판적 사고 능력, 미디어 이용 조절, 자기보호, 미디어의 적절한 사용 및 태도 형성 등을 미디어리터러시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역량은 미디어 환경에서 성공적인 참여와 안전한 미디어 사용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맥락으로 작용한다.

아울러 전문가 인터뷰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미디어리터러시 지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지수가 미디어리터러시 방향과 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보았다.

전문가들이 지수 개발에 필요한 요소로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비판적 이해, 창의적 표현, 참여 및 사회적 소통 역량, 자기통제, 윤리 및 규범을 제안한 것은 미디어리터러시의 핵심 역량을 반영하는 중요한 차원이다. 이러한 역량은 미디어 환경에서의 적응과 성공적인 미디어 사용을 지원하는데 필수적이다.

요컨대 전문가들의 지수 개발과 활용에 대한 관점은 정부와 교육 기관이 미디어리터러시 지수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미디어 교육을 개선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지수를 통해 미디어리터러시 역량의 평가 및 추적을 실시하고, 국민에게 미디어 교육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데도 보탬이 된다. 즉, 세 건의 연구는 모두 미디어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미디어리터러시 맥락에 주목하여,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측정하여 교육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를 분석적으로 접근했다 할 것이다.

2. 지수 구성 및 정교화

2016년 연구는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제공하는 미디어 교육의 교육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목표로 한정하여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개념을 전용했다. 시청자미디어센터의 교육 목표와 부합하는 미디어리터러시 측정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미디어리터러시의 하위 요인 및 해당 요인에 속하는 측정 항목을 도출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또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교육 프로그램 수혜자를 대상으로 질적 조사를 실시하여 미디어리터러시를 측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기존 문헌 연구를 토대로, 시청자미디어센터의 교육과 사업 목표에 부합하는 미디어리터러시 측정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미디어리터러시의 하위요인과 해당 요인의 측정 항목을 도출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시청자미디어센터의 교육 프로그램 수혜자에게 질적 조사를 수행하여, 미디어리터러시를 측정하기 위해 첫 번째 단계에서 도출한 하위 요인에 대해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미디어리터러시를 교육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특화된 도구로 발전시키는 데 주목했다.

연구는 문헌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미디어리터러시의 하위 구성 요인을 접근성, 기능, 비판적 이해, 행위 측면으로 나누었다. 접근성 측면의 미디어리터러시는 다양한 종류의 미디어별 개별 이용 시간을 측정하는 문항을 포함하였으며, 총 10가지 미디어별 이용 시간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기능 측면의 미디어리터러시는 이용 기술, 미디어 이용 통제, 미디어의 도구적 활용 등의

하위 요소를 포함하며, 각 요소에 대해 7, 7, 9개의 측정 문항이 도출되었다. 비판적 이해 측면의 미디어리터러시는 매스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시민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다. 매스미디어의 영향력, 산업적 동기, 현실구성 등에 대한 이해와 미디어와 시청자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는 각각 11개와 12개의 측정 문항이 도출되었다. 행위 측면의 미디어리터러시는 개인 창작과 방송 창작이라는 두 가지 하위 요소를 포함하고, 각각 4개와 5개의 측정 문항이 추출되었다. 이러한 하위 구성 요인과 측정 문항들은 시청자미디어센터의 교육 프로그램 목표와 부합하여 미디어리터러시 지수의 구성에 반영되었다.

2021년의 연구는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수행된 <디지털 사회에서의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개발 연구>를 통해 도출된 지수를 활용했다. 미디어리터러시의 여섯 가지 역량으로서 비판적 사고, 미디어 이용, 생산과 표현, 사회적 소통, 태도, 자기보호를 선정했으며, 이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 영역 및 관련 문항이 설문에 포함되었다. 하위 역량으로 의도 파악, 정확성 검증, 비교 이해를 포함하는 비판적 사고역량과 이용 역량으로서 일상과 전문정보 이용, 필요서비스 접속과 정보 이용이 있다. 그리고 생산과 표현 역량의 항목으로서 자기 생각을 원하는 방식으로 제작하고 공유하는 차원, 또 타인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윤리적으로 소통하는 사회적 소통 역량, 미디어의 기능을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태도 역량, 끝으로 미디어 이용에서의 자기 보호 역량을 포괄한다.

도출된 문항은 각각 비판적 사고 역량 12문항, 이용 역량 9문항, 생산과 표현 역량 8문항, 사회적 소통 역량 15문항, 자기보호 역량 3문항, 태도 역량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연구에서는 재구성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중점적으로 수행 중인 미디어리터러시 역량의 개념을 적용해 그 교육 성과를 측정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미디어리터러시 영향력 지수는 접근 역량, 이해 역량, 참여 역량으로 구분한다. 세부 영역은 다양한 양한 미디어에 대한 접근 및 기술적 이용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이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의 기능 이해 능력, 개인 정보 노출 등 미디어 이용의 위험요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책임 있는 미디어 이용 능력, 미디어를 활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능력, 미디어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는 자기표현 능력, 미디어를 통해 자신과 타인의 생각, 의견, 콘텐츠 등을 서로 나누고 공유하는 공유네트워크 능력, 정치와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참여 능력 9가지로 구성했다.

2022년 연구에서 미디어리터러시 지수를 개발하기 위해 측정 항목을 수집하고 구성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주요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째, 문항 수집 단계로 기존 국내외의 미디어리터러시 측정 항목을 수집했다. 이 과정에서 최신 연구논문과 연구보고서를 주로 참고하여 다양한 문항을 추렸다. 이 문항들은 미디어리터러시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도록 선택되었다. 둘째, 프레임워크 모델링 단계에서는 “사회적 미디어리터러시 맵핑: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주 모델로 삼아, 다양한 측정 변인을 고려하여 지수의 구성을 설계했다. 이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지수를 구성하는 초안을 도출했다. 셋째, 문항 수정과 보완 단계에서는 초안을 기반으로 다수의 의견 교환을 통해 지수의 구성을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이 과정에서 6가지 역량에 해당하는 문항을 수정, 보완하거나 필요에 따라 삭제하였다. 넷째, 전문가와 일반인 의견 수렴 단계에서는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중요도 및 이해도를 확인하였다. 중요도는 측정 문항으로서 중요한 정도를 파악하고, 이해도는 문항 내용의 이해를 측정하도록 구성되었다. 다섯째, 문항 축소 단계에서는 주요 원칙을 세워, 중요하게 생각되는 문항을 측정 항목으로 선택하였다. 이때 중요도 차이가 적은 항목 및 상위 랭크를 받은 항목을 우선 선택하고 나머지를 참고하였다. 여섯째, 독이성 향상 단계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장을 수정하여 문항의 이해도를 높이도록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명확하고 중첩되지 않는 의미를 전달하는 문항을 정리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디어리터러시 지수의 구성이 확립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디어리터러시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지수를 구성했다.

나아가 두 차례의 파일럿 조사를 통해 지수를 보완했다. 첫 번째 파일럿 조사를 통해서 미디어리터러시의 측정 항목을 구성하고 이에 대한 요인적재치를 분석하여 측정 항목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우선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신뢰도 분석을 통해 측정 항목들의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문항 제거 시 척도 및 신뢰도 분석을 수행하여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였다. 이어서 미디어리터러시 측정 문항으로 개발된 총 52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미디어리터러시 지수의 하위차원을 탐색하고 확인하였으며, 측정 항목의 정교화를 시도하였다. 개발된 미디어리터러시 지수의 모형 검증을 위해 확증적 인자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모델을 검정하고 미디어리터러시를 측정하기 위한 지수를 확정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했다.

결과적으로 미디어리터러시 역량은 6개의 상위 개념과 9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52개의 문항이 도출되었다. 또한, 인구학적 변인과 미디어 이용행태 및 미디어리터러시 인식을 포함하는 추가 항목을 개발하였다.

2차 파일럿 조사에서는 미디어리터러시를 측정하는 측정 변수의 요인 적재치를 분석하여 측정 항목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8가지 요인이 도출되었으나, 연구진이 고려한 6개의 주요 개념으로 모델이 구성되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역량을 구성하는 설문 문항의 신뢰도를 추가로 분석하여 각 문항이 해당 역량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6개 상위 개념과 8개 하위 개념으로 구성된 모형을 확증적 인자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모든 항목에서 표준화 계수와 분산 추정치의 기준을 충족하고, 1차 파일럿 조사와 비교하여 더 높은 모델 적합성을 보였음을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디지털 미디어리터러시 역량을 비판적 사고 역량, 이용 역량, 생산과 표현 역량, 사회적 소통 역량, 자기보호 역량, 태도 역량 6개의 상위 개념으로 확정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비판적 사고 역량 12문항, 이용 역량 9문항, 생산과 표현 역량 8문항, 사회적 소통 역량 15문항, 자기보호 역량 3문항, 태도 역량 5문항 총 52문항을 구성했다.

3. 조사 결과의 정책적 활용

2016년 연구 결과,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제공하는 미디어 교육이 접근성, 기능, 비판적 이해 및 행위의 모든 하위 구성요인 측면에서 미디어리터러시를 뚜렷하게 향상시켰다. 이 효과는 학교 미디어 교육 및 사회 미디어 교육 모두에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성, 기술, 비판적 이해, 행위 등 모든 측면에서 미디어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높은 미디어리터러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술 측면의 미디어리터러시와 행위 측면의 미디어리터러시에 있어서 차이가 두드러졌다. 접근성 측면에서 역시 비수혜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기능성 측면에서도 미디어교육 이수 여부가 미디어리터러시 수준을 높였다. 아울러 비판적 이해 측면은 물론 개인 창작활동 등 행위에 있어서도 현저하게 높은 이해력과 성취를 보였다.

이는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제공하는 미디어 교육이 기존의 미디어리터러시 교육과는 다른 특성과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했다. 미디어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기술만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이 미디어를 직접 제작하고 제작한 콘텐츠를 방송하는 방법을 통해 시청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대안적인 시민미디어를 지원하며, 미디어 제작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전 영역에서의 미디어리터러시 향상을 지원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결과다.

2016년에 수행된 연구의 결과는 시청자미디어재단 및 다른 관련 부처에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넘어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에 관련된 연구에도 유용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연구는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평가를 위한 효율적인 평가 체계를 제공하고, 미디어 교육 사업의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선행연구임을 분명히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학교 교육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효과를 효율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정부가 지원하는 미디어 교육 사업에 대한 엄밀한 평가가 가능해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16년의 연구를 포함해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수행하는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정책 및 효과성 분석을 통해 미디어센터 및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과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품질 향상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확인,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요컨대 연구에서 개발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효과성 평가 도구는 첫째, 시청자미디어센터의 미디어 교육 사업의 필요성과 가치를 입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둘째, 시청자미디어센터 교육 효과를 넘어 '미디어리터러시'를 평가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미디어 교육의 효과성을 정량화하고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셋째, 미디어리터러시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별로 이 도구를 사용하여 각기 다른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할 수 있다. 넷째, 교육 대상별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내용을 구성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다.

2021년의 미디어리터러시 실태 조사의 결과는 다음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3대 미디어리터러시 역량(접근 역량, 이해 역량, 참여 역량)에 대한 다양한 항목 결과 제시에 앞서, 전체 항목의 평균 미디어리터러시 역량 점수는 3.77이었으며, 표준편차는 0.085였다. 이는 평균 미디어리터러시 역량이 중간 수준 정도임을 나타낸다.

이어서 접근 역량은 미디어를 활용하기 위한 능력을 측정하는데, 평균 점수는 4.25였다. 이 중에서 "도구적 활용 능력"이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 이는 응답자 대다수가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고 기술적 이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해 역량은 미디어의 기능 이해, 정보 판별 능력, 책임있는 미디어 이용 보호 능력 등을 평가하는데, 평균 점수는 3.68이었다. 이 중에서 "미디어의 기능 이해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 점수를 기록했으며, 미디어 이용 보호 능력과 정보 판별 능력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참여 역량은 미디어를 활용하여 창작, 소통, 시민적 참여를 측정하는데, 평균 점수는 3.62였다. “공유·네트워크 능력“이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가졌으며, 응답자 중 상당수가 소통 및 네트워크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계속해서 용어와 교육 차원의 인식 조사로, 우선 미디어리터러시 용어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은 미디어리터러시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은 23.4%,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76.6%로 나타났다. 이는 미디어리터러시 용어가 국민들에게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47.4%로, 긍정적 응답 비율은 59.0%, 부정 응답 비율은 4.0%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필요로 하며, 교육 정보를 주로 인터넷 및 대중매체를 통해 습득했다.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대상에 대한 응답에서 중고등학생이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으며, 이어 전 국민, 성인, 노인 등 고령층, 영유아와 어린이 순으로 나타났다.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이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에서는 부정적 평가가 50.6%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인 평가는 6%에 머물렀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전 국민 대상의 미디어리터러시 역량 및 실태 조사와,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역량 및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국민의 미디어리터러시 역량과 관련된 강점과 약점, 교육 필요성, 교육 타겟, 교육 정보 습득 경로 등을 파악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정보는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및 활동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데 핵심적인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무엇보다도 시청자미디어센터의 교육 전후 비교 연구 등을 통해, 미디어교육 발전에 대한 제안과 제언을 주목했다. 시민 역량 중심의 교육 제공 및 성과 모니터링, 교육 정책 공유, 교육 환경 세분화, 교육 시스템 효율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생애 주기별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제공이나,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영향력 강화 등을 주문하는 제언은 정책의 현실성이나 시의성에 있어서 가치가 있다.

2022년의 연구 결과로, 우선 인구통계학적 결과와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인식 및 반응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비판적 사고 역량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이용, 생산과 표현, 사회적 소통, 태도 역량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모든 역량에서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 특히 10대와 20대의 미디어리터러시 역량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학생일수록 미디어리터러시 역량이 높았으며, 생산적의 경우 모든 역량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모든 역량의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비판적 사고, 이용, 사회적 소통 역량에서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졌다. 서울지역 거주자가 서울 외 지역 거주자에 비해 비판적 사고, 이용, 생산과 표현 역량이 높았다. 중고등학생과 대학(원)생의 미디어리터러시 역량이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고졸이하의 경우 모든 역량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 연령, 직업, 가구소득, 거주 지역 및 학력과 미디어리터러시 역량 간의 다양한 관계를 보여준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해 미디어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시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미디어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할 수 있게 된다.

교육실태조사에서도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점들이 발견되었다. 우선 전체 응답자 중 76.8%가 지금까지 미디어리터러시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연령, 학력, 직업, 거주 지역에 따라 이 경험에 차이가 있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대학(원)생 및 전문직일수록, 서울지역 거주자일수록 미디어리터러시 용어를 들어본 경험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응답자의 67.3%가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했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4.2%에 불과했다. 이 결과는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큰 필요성을 시사한다. 응답자의 92.3%가 미디어리터러시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다.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유경험자 중 가장 많이 교육을 받은 곳은 학교(초중고, 대학교)이었다. 응답자의 미디어리터러시 관련 정보를 가장 많이 얻는 경로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 검색이었다. 이는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온라인 리소스 및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응답자의 대다수가 중고등학생(33.2%)을 주된 교육 대상으로 지목했으며, 일부 응답자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32.8%)을 표명했다.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평가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보다 높았다.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품질 향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응답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분야는 콘텐츠(정보)의 정확성 이해, 온라인 윤리 및 예절, 공공서비스, 금융거래(전자상거래), 일상정보 및 전문정보 이용, 콘텐츠(정보) 비교 검증 등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과 교육의 방향을 고려할 때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향후 교육 프로그램 및 정책 개발 시 미디어리터러시 인식에 관련한 결과 및 교육 대상에 대한 판단을 고려하여 미디어리터러시를 증진시키고 국민들이 미디어를 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발굴할 수 있다.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그간 국내에서 논의된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동향을 살피고, 그것을 정책적으로 활용한 사례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1절에서는 지수 개발에 주안점을 둔 연구를 중심으로 살폈다.

우선 미디어리터러시 수준 평가 및 측정을 위한 체계의 미비와 일관된 논의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학계와 정책 당국에서 이어져 왔다. 측정 지표의 확립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일관된 정책 목표 설정의 한계와 국가적 대응의 어려움이 지속됐다. 특히, 파편화된 조사와 논의로 말미암아 미디어리터러시의 핵심 역량으로 꼽히는 콘텐츠에 대한 비판적 이해 능력 향상에 대한 상대적 약화와 기술적 차원에서의 미디어 콘텐츠 제작과 활용에 초점을 맞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집중 등 균형 잡힌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실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민의 미디어리터러시 역량에 대한 일관된 측정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올바른 지수 개발을 통한 측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미디어리터러시에 대한 국민적 인식 개선과 장기적인 교육 및 정책적 지원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목표 의식은 일찍이 미디어 정책의 주무 기관이라 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개발되어 왔다. 2017년 수행된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개발 연구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그간 논의된 미디어리터러시 영역과 지표들을 검토하여 재구성하고, 그 지수 적합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고자 한 본격적인 출발점이라 할 것이다. 특히 미디어리터러시 역량 조사를 통해 성취될 수 있는 콘텐츠 판별 역량, 비판적 사고와 의사소통 역량, 생애주기별 역량 강화 교육을 연구 목표로 삼아, 일관된 정책 수립의 기틀이 되는 지수 운용을 분석했다.

특히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정보의 판별이 어려워진 맥락들을 중심으로, 콘텐츠에 대한 판별 역량을 측정하고 그 능력을 함양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는 부분은 본 연구의 맥락과 사회적 의미 차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그에 앞서 수행된 2009년의 연구는 미디어 교육 차원에 보다 주목하고 있다. 미디어 감시 운동에서 출발하여 기실 40년의 역사를 가진 미디어 판별 역량에 대한 논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 속에서 비판적 이해와 분석, 그리고 창의적 생산과 소통이라는 개념 확장을 통해 발전되어 왔다.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개발에 있어서도 미디어 환경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대한 다양한 지점들을 수용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연구의 의의 역사적 가치는 지대하다.

마찬가지로 2006년에 수행된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개발의 연구 역시, 정보화 사회라는 시대 사적 요구에 부응하여 미디어를 통한 학습 도구 개발 및 운용에 대한 역량 측정에 집중했다.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대인관계 역량, 자기 관리 기술 등을 포괄하는 미디어리터러시 역량은, 작금의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개발의 당위성과 방향성에도 상당한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각각의 연구들에서는 선행 조사 혹은 해외의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개발에서 출발하여 제시된 지수 체계를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정교화를 수행했다. 2017년 연구는 유럽시청자권익위원회(EAVI)의 2011년 자료를 바탕으로 유럽의 지수체계를 국내 상황에 맞게 수용하여 특수성을 반영한 지수로 발전시켰다. 아울러 연구진의 분석적 접근과 델파이 기법을 통한 지수 구성의 정교화, 구체화를 통해 지수 적합성을 검증했다. 지수 구성 체계에 있어서 개인적 역량과 환경적 요소의 통합적 고려, 다양성 및 일관성 요소의 수용, 그리고 사회적 지표로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2009년 연구는 개발된 미디어리터러시가 갖추어야 할 원칙으로 포괄성, 종합성, 비교가능성을 제시했다. 현실의 미디어리터러시가 지수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 다양성 측면에서의 종합적 측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그리고 해당 지수가 비교 가능한 틀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지수 개발을 통해 미디어교육 평가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 현장의 효과성 측정 및 능력 향상에 있어서의 균형성을 담보하는 교육 정책 마련에 집중했다. 특히 접근 능력, 비판적 이해능력, 창의적 표현 능력, 소통 능력이라는 네 가지 요건은 미디어리터러시의 표준화된 분류로 지금까지도 활용되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리터러시 역량을 측정하고자 논의된 2006년의 지수 개발 및 정교화에서도 각각의 판별 요소에 대한 구분 및 검사 목적 구체화, 도구 개발 및 테스트, 그리고 실제 활용이라는 목표를 강조했다. 특히 생애주기별 교육 실현을 위해 초등학교부터 대학 수준에 이르는 모든 교육기관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실현에 대한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지수의 활용에 대한 논의까지 개진되었다.

조사된 미디어리터러시 역량은 인구 특성에 따라 수준 차이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예컨대 2017년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 지역에 따른 차이, 학력 수준에 따른 차이,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 그리고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외 계층 등 집단별 정책 마련과 국가적 대응에 대한 근거 자료로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국가통계의 필요성에 주목하는 제언으로 귀결된다. 2009년의 연구에서는 교육 성과에 대한 측정 주목에 따라,

미디어 접근 능력의 높은 수준, 창의적 표현 능력의 낮은 수준을 짚어냈다. 아울러 미디어 교육과 학습 성향, 자기 효능감 등에서의 상관관계를 밝힘으로써, 교육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2006년 연구 역시 다양한 상황에서의 측정을 위한 기준 마련을 강조했으며, 정책적 제언으로서 국가 차원의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지표 및 지수 마련을 역설했다.

2절에서는 지수 개발을 통한 정책적 활용에 주목한 연구들을 살폈다. 비교적 최근에 수행된 세 건의 연구들은, 앞선 지수 개발을 목표로 수행된 논의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도출된 지수를 검토하고 이를 정책, 특히 미디어 교육 현장에서의 측정과 활용에 집중했다.

2016년의 연구는 ‘교육 효과성 연구’ 라는 이름 대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하는 맥락에 주목했다. 지수 개발 및 정교화에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미디어 교육 현장의 맥락과 논의들, 그리고 교육 정책의 실효성과 개선안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1절에서 논의한 지수 개발 중심의 연구와 차별화된다.

2021년 연구에서는 시청자미디어센터의 미디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교육 효과 측정에 집중하여, 국민의 미디어리터러시 역량을 파악하고 교육에 대한 니즈를 확인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그에 따라 시청자미디어센터의 교육에 참여한 이들의 교육 전 후 미디어리터러시 역량과 실태를 파악하고, 일반화된 연구를 확장적으로 수행하여 국민의 미디어리터러시 역량 전반을 이해하고 비교해봄으로써 교육 효과성을 측정하고자 했다.

2022년 수행된 연구는 2020년의 지수 개발 연구의 검토 목적에서 출발하여, 이용자 관점을 반영하고, 전 국민 대상 조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또한, 질문 항목 설계의 용이성을 고려해 보편적인 조사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했다. 지수 신뢰성과 유효성 향상을 위해 문항 타당도와 적합도를 평가했으며, 미디어리터러시에 대한 ‘비판적 이해’, ‘미디어 이용’, ‘생산과 표현’, ‘소통과 참여’, ‘성찰과 자기 보호’ 라는 몇 가지 정의들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구성된 6가지 핵심 역량은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개발 및 평가의 틀이 되었으며, 교육 및 정책 개발의 지침이 되고자 했다.

위 연구들은 모두 지수 개발 연구와 동일하게, 기존의 국내외 미디어리터러시 측정 항목들을 수집해 미디어리터러시 측정 과정에서 다양한 측면들을 반영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2016년 연구는 일반적인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개발과 운용이 아닌, 시청자미디어센터의 미디어 교육 효과성 측정에만 국한하여 지수 개념을 전용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그에 따라서 구성요인을 접근성, 기능, 비판적 이해, 행위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누고, 총 64개의 측정 문항으로 구성했

다. 이러한 미디어리터러시 측정 구성은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2021년 수행된 연구는 2020년의 지수 개발 연구 결과에 따라 6가지 역량을 선정하고, 세부 항목으로서 같은 수준의 문항을 구성했다. 2022년 연구는 연구진 및 전문가, 일반인 의견을 통해 정교화를 수행했으며, 문항을 적절히 제시하기 위한 축소 및 독이성 높이기 등도 수행했다. 그에 따라 구성된 6개의 상위 개념과 9개의 하위 요인, 이를 측정하는 52개의 문항을 구성했다.

2016년 연구를 통해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제공되는 교육을 통해 접근성, 기능, 비판적 이해, 행위 모든 구성요소들이 향상되는 결과를 확인했으며, 학교 미디어 교육, 사회 미디어 교육을 통해서도 성취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2021년 연구에서는 평균 미디어리터러시 역량 수준이 중간 정도라는 점에서 출발하여, 3대 미디어리터러시 역량으로서 접근, 이해, 참여 역량의 활용 능력 측정과 결과를 제시했다. 도구적 활용 능력, 미디어 기능 이해 능력, 공유 네트워크 능력 등이 높은 평균 점수로 드러났다는 점을 제시함으로써 미디어 활용 능력의 가능성과 기능 이해, 그리고 공유 정도 등을 가늠하게 했다. 한편 용어 인식의 저조함을 강조하고, 교육 필요성에 대한 의의를 찾는 맥락들을 밝혀냈다.

2022년의 연구 역시 인구통계학적 결과로서 성별, 연령대, 교육수준, 지역, 가구소득 등에 따라 다양한 관계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연구는 지수를 활용한 정책적 활용이라는 목표에 부합하게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고려한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을 강조했다.

또한, 교육 실태에 대한 조사 역시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미디어리터러시 용어의 생소함과, 교육 대상의 특정화, 그에 따른 교육 필요성 및 방향 설정의 중요한 지표들을 발굴해냈다. 국민적 미디어리터러시 인식 개선과 전 생애에 걸친 교육 정책 수립 및 집행에 걸맞은 미디어리터러시 분석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2022년의 연구의 의의가 두드러진다.

요컨대 앞서 살펴본 국내의 미디어리터러시 관련 조사들은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개발 및 정교화의 당위성을 넘어, 일관된 정책 마련과 범 국민적 미디어리터러시 역량 증진을 위한 제도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결과로 귀결된다. 기 수행된 파편화된 연구들이 제시한 개별 집단의 미디어리터러시 역량 수준과, 교육에 따른 개선 정도를 파악하는 정도를 넘어서, 미디어리터러시 일반 차원에서 국민적 수준을 파악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일반화되고 보편화된 국가 통계가 필요함을 방증하는 것이다.

<표 3-1> 미디어리터러시 연구 개요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개발 연구			미디어리터러시 지수를 활용한 정책 연구		
	2017년	2009년	2006년	2016년	2021년	2022년
연구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구성원 미디어 리터러시 파악, 증진 영역 확인 - 사회 지표로서 지속 가능한 지수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 교육 역사 속 개념 확장 - 미디어 비판적 이해 생산 능력 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현장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요구 - 학습자 수준 파악 정보화 교육 효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 교육 효과 평가 체계적 분석 - 시청자미디어재단 교육 수혜자 효과성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미디어 시대 시민 윤리규범 인식 - 미디어 교육 발전 전 국민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자미디어센터 국민 미디어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효과 측정
지수 항목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 접근과 조절 - 비판적 이해 - 창의적 활용 - 책임과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능력 - 미디어의 비판적 이해능력 - 창의적 표현 - 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환경 리터러시 - 정보·지식 리터러시 - 사회·문화 리터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성 - 기능 - 비판적 이해 -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판적 사고 역량 - 이용 역량 - 생산과 표현 역량 - 사회적 소통 역량 - 자기보호 역량 - 태도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 역량 - 이해 역량 - 참여 역량
연구 합의 및 정책적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적 데이터 지표 교육 정책 수립 - 교육 프로그램 체계화, 교육 효과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효과 검증 지수화 모델 구축 - 표준화된 평가 검사 도구 개발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 정규 통합 교육 정책 수립 - 대학/전 국민 교육 체계적 지표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자미디어재단 및 타 정부 부처 교육 평가 활용 - 정부 주도 미디어 교육 평가 틀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정책 개선방안 - 이용자 요구 맞는 맞춤형 교육 제공 - 미디어교육 중장기 정책 방향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 교육 운영 정책적 대안 제시 - 역량 수준별 교육 - 교육 정책 공유 - 교육 환경 세분화

제 4 장 국가 승인통계 현황 및 체계

제 1 절 국가 승인통계 현황

1. 법적 근거

국가승인통계는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되는 공식통계이며, 「통계법」 제3조 제1항 제1조에서는 공식통계를 “정부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국가통계는 정부나 사회의 의사 결정에 기초 자료로 사용되는 사회공공재이며, 이는 신뢰성이 중요하다. 국가통계는 다른 용어로 승인통계라고도 하며,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을 승인한 통계이다. 통계의 중복방지, 응답자 부담 경감을 줄여야 하며 국가통계 제도의 유형은 크게 집중형과 분산형 등 두 가지로 구분된다.

집중형 통계 제도는 한나라의 통계 활동이 하나의 전문화된 기관에 집중되어 각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통계를 전문화된 기관이 모두 작성·공급하는 형태이며, 분산형 통계 제도는 통계 활동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각 기관이 필요한 통계를 직접 작성하는 형태로 <표4-1>과 같이 정의한다.

<표 4-1> 국가통계의 유형

구분	집중형	분산형
주요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본통계를 단일화된 통계전문기관에서 작성 - 부처 간 통계연락기구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별로 필요한 통계를 개별적 작성 - 통계조정기관 설치
해당 국가	캐나다,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호주, 인도네시아 등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대만 등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의 균형적 개발과 유기적 체계 확보 - 통계의 객관성 및 신뢰도 제고 - 통계전문인력의 집중적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전문지식을 관련 통계 개발에 활용 가능 - 통계수요에 신속히 대응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행정분야별 전문지식 활용 미흡 - 통계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복작성 등으로 인력과 예산의 낭비 초래 - 체계적 통계 개발의 제약 - 통계전문인력의 집중적 활용 어려움

국내 통계법은 통계를 당해 통계의 중요성, 활용도, 조사 규모 등을 기준으로 하여 지정통계와 일반통계로도 구분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기준에 관해서는 통계청장이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지정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하는 통계 가운데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를 의미하며, 일반통계는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하는 통계 가운데 지정통계 이외의 통계를 의미한다. 지정통계는 한국의 국가통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통계들로 이루어져 있다.

조사 방법에 따라 통계는 조사 통계와 보고 통계로 구분될 수 있다. 조사 통계란 조사 대상에 대한 실지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통계를 의미하는데, 이는 다시 조사 대상 집단의 모두를 조사하는 전수조사와 조사 대상 집단의 일부만을 조사하고도 전부 조사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표본조사로 나누어진다. 보고통계는 업무통계라고도 하는데, 국가기관이 법령에 따라 행하고 있는 행정업무에 수반되어 수집된 자료로부터 작성된 통계를 의미한다. 이는 개인·단체의 신고, 신청, 인·허가 등과 같은 업무로부터 얻어진다. 보고통계는 표본의 편의, 보고 과정의 왜곡 등과 같은 문제가 개제될 가능성도 적지 않으므로, 국가통계의 중추를 이루는 지정 통계의 대부분은 조사 통계에 의해 작성되고 있다.

또한, 통계는 작성 방법에 따라 1차 통계와 2차 통계로 분류될 수 있다. 1차 통계는 일정 집단에 속하는 개체의 수나 특성을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통계로서 일반적으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서 직접 얻어진 통계를 의미한다. 2차 통계는 가공통계라고도 하는데, 1차 통계를 통하여 얻어진 정보를 이용하여 새로 만들어지는 통계를 의미하며, 1차 통계에 비하여 해석적 특성이 있는 통계가 많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국민소득통계를 들 수 있다. 1차 통계는 대체로 범용성을 갖는 데 비하여, 2차 통계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작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의 지정통계는 대부분 1차 통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통계는 각각의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법률적 기준, 조사 방법, 작성 방법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

통계 유형의 구분 방식 유형의 구분 방식 가운데 통계청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증한 통계를 국가통계(national statistics) 또는 공식통계(official statistics)라고 한다. 즉, 법률적 분류에 따라 볼 때,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한 승인통계가 국가통계에 해당되고, 기타통계는 국가통계에 해당되지 않는다.

〈표 4-2〉 통계의 종류

법률적 분류	승인 통계	지정 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하는 통계 가운데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일반 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하는 통계 가운데 지정통계 이외의 통계
	기타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작성기관이 아닌 곳에서 작성하는 통계로서 「통계법」상의 통계에 포함되지 않음 	
조사방법에 의한 분류	조사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의 작성을 주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얻어진 통계로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로 구분 	
	보고통계 (업무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에 의한 개인, 단체의 신고, 보고, 신청, 인·허가 등과 같이 국가기관의 행정업무에 수반되어 수집된 자료로 작성된 통계 	
작성방법에 의한 분류	1차 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서 직접 얻어진 통계 	
	2차 통계 (가공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통계를 가공하여 얻어진 자료 등에 일정한 연산을 가하여 작성된 통계로서 1차 통계에 비하여 해석적 특성이 있는 통계 	
생산주체에 의한 분류	국가 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기관이 생산하는 통계 	
	민간 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기관이 조사·생산하는 통계 	

* 출처: 2014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국가 통계시스템 구축(2014)

2. 국가승인통계 현황

통계작성기관은 현행 통계법은 통계 생산의 주체를 통계작성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통계작성기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통계법 제1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정의된다. 통계법의 규율 대상인 통계는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하는 통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계작성기관이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국가통계임을 의미한다. 통계법의 통계종사자도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제3조 정의). 통계법의 대부분의 내용은 제2장 통계의 작성 보급 및 이용 기반 구축, 제3장 통계작성지정기관 및 지정통계의 지정 등, 제4장 통계의 작성 보급 및 이용 등 국가통계 생산 주체인 통계작성기관의 행위와 책무 등에 관한 기술로 구성되어 있다.

〈표 4-3〉 통계법의 통계작성기관 관련 조항

구분	관련 조항
통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 제7조(통계작성기관의 인력 및 예산 확보) • 제15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 제16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 • 제25조(자료제출요구 등)
통계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조(통계책임관의 지정) • 제16조(통계의 작성 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등의 이행) • 제18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요건) • 제19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 • 제19조의2(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직권 지정) • 제20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 • 제21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유예)

통계작성지정기관 제도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기관중에서 주요 통계를 생산하는 기관을 국가통계 생산기관으로 포괄하기 위한 제도이다. 통계법 제15조는 통계청장이 통계의 작성 보급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정책의 수립 평가 또는 경제 사회현상의 연구 분석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거나 작성하고자 하는 기관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 등을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계법 시행령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요건을 통계작성 조직 및 예산 통계작성계획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 통계의 작성과 보급에 필요한 조직,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가지고 있거나 구체적인 확보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3. 구체적이고 실현할 수 있는 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국가승인통계 현황은 대표적으로 국가통계포털(KOSIS,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로 국내·국제·북한의 주요 통계를 한 곳에 모아 이용자가 원하는 통계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도록 통계청이 제공하는 One-Stop 통계서비스이다. 현재 400여 개 기관이 작성하는 경제·사회·환경에 관한 모든 국가승인통계를 수록하고 있으며, 국제금융·경제에 관한 IMF, Worldbank, OECD 등의 최신 통계도 제공되고 있다. 쉽고 편리한 검색기능,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및 통계설명자료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가 원하는 통계자료를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볼 수 있다.

가. 통계 작성기관 현황 정보

국가승인통계 현황 정보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통계법 제15조에 의하여 지정된 통계작성지정기관에서 작성한 승인통계에 대해서 현재 일자를 기준으로 각종 현황 및 정보를 조회 및 확인 가능하다. 국내의 통계시스템은 중앙통계기관인 통계청이 통계조정기능의 수행과 아울러 중요 기본 통계를 생산하고 있으며, 그 외 중앙 및 지방정부와 민간통계작성기관이 각각 본연의 업무와 관련한 통계생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통계법에서는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정부가 그 작성을 승인한 통계를 “승인통계”라 지칭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식통계” 혹은 “국가통계”에 해당하는 것이다. 승인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을 “통계작성기관”이라 칭한다. 2014년 8월 기준 정부와 민간을 합하여 모두 388개 기관이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승인통계는 모두 932종인데, 그중 764개가 정부기관에서 작성되고 있으며, 나머지 168종은 민간기관에 의해 작성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정책연구소, 공기업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순수 민간기관은 그 수가 매우 적다.

통계청은 전체 승인통계 수의 5%를 약간 상회하는 58종의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통계청이

작성하는 통계는 숫자상으로는 많지 않지만 인구센서스, 경제센서스, 전국사업체 조사 등과 같이 국가의 기초통계에 해당하는 대규모 통계조사를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통계청 다음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통계작성기관은 한국은행이다. 한국은행은 국민계정, 투입산출표, 자금순환표 등 중요한 거시 경제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나. 국내 승인통계현황

1) 기관구분별 현황

기관구분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초지자체(시·군·구))로 작성 기관 수, 작성 통계 수, 통계 종류, 작성 방법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4> 승인통계현황 (단위 : 기관, 종)

구분	작성기관수	작성통계수	종류별		작성방법별		
			지정	일반	조사	보고	가공
계	434	1315	92	1223	585	481	249
정부기관	309	1107	75	1032	468	417	222
지정기관	125	208	17	191	117	64	27

2) 각 통계부문별 현황

통계 부문별 현황으로 인구, 고용 등 총 22개 부문에 대한 작성 통계 수, 통계 종류, 작성 방법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작성 주기별 현황은 기관 구분별 / 통계 부문별로 작성 주기별(월 이하, 분기, 반기, 연간, 1년 이상) 현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작성 기관별 현황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통계작성지정 기관별 작성 통계 수, 통계 종류, 작성 방법별 현황이 있다.

<표 4-5> 각 통계부문별 현황 (단위 : 종, %)

통계 부문별 구분	작성 통계 수		종류별		작성 방법		
	통계수	구성비	지정	일반	조사	보고	가공
계	1315	100.0	92	1,223	585	481	249
인구	11	0.8	3	8	3	4	4
⋮	661	50.2	72	589	353	213	95
지역통계	643	48.9	17	626	229	264	150
기관 구분별 현황 구분	작성통계수	작성 주기별					
		월이하	분기	반기	연간	1년이상	
계	1315	118	35	20	813	329	
정부기관	1107	75	25	12	689	306	
지정기관	208	43	10	8	124	23	
중앙행정기관 구분	작성통계수	종류별		작성 방법별			
		지정	일반	조사	보고	가공	
계	448	58	390	239	153	56	
통계청	67(1)	37	30(1)	39	2	26(1)	
⋮	380	21	359	199	151	2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0	1	1	0	0	

다. 국가통계 검색 및 승인(합의) 절차

국가통계를 이용하려는 통계수요자는 통계작성기관이 어디든 해당 포털에 접속함으로써 원하는 통계를 검색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KOSIS는 또한 뛰어난 검색, 편집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수요자들이 원하는 형태로 통계정보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정책 및 학술 연구에서 마이크로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시스템(MDSS: Micro Data Service System)을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한 통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통계지리정보시스템(SGIS: Statistical Geographic Information Service), e-나라지표, e-지방지표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통계공표 사전예고제를 도입하고 있다. 국가정책, 기업활동 및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통계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 공표 날짜를 연초에 예고하여, 예고된 시기에 정확히 맞추어 통계를 공표하는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는 정부,

기업, 국민을 포함하는 모든 국가 구성원이 정해진 시간에 차별 없이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공평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통계에 대한 정치적 영향, 행정부의 간섭을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통계기관 및 통계의 중립성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국내의 여러 기관에서 통계자료를 생산, 공표하고 있으며 통계청은 그 핵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때 사용된 용어들에 대한 표준 정의를 통해 통계 정보의 이용 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표준용어(Standard definition)의 사용은 유사, 중복통계에 의한 통계생산의 비효율성과 통계이용상의 오해를 줄이게 된다. 유엔통계처(UNSD: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는 표준통계용어와 개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국내 표준통계용어, 개념, 분류와 국제표준의 비교가능성을 총괄하는 부서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각기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여러 용어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용어의 정의를 내려야 하고 이러한 표준용어의 사용은 같은 주제에 대한 다른 통계의 비교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통계청은 1994년 처음으로 『통계용어정의집』을 편찬하여 통계조사에 직접 사용된 용어들과 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있는 각종 통계표에 나타난 용어들의 정의 및 해설을 수록하였다. 여기서는 한국의 90여 개 통계작성기관에서 생산하고 있는 350여 종의 통계에서 사용된 약 3,500개 용어에 대한 정의를 수록하였다.

2006년에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 『통계용어사용사례집』을 발간하였다. 여기서는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하는 정부승인통계 약 500여 종 6,300여 개의 통계용어에 대한 사용사례를 수록하여 통계이용자들이 통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통계용어 및 지표에 대한 통계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계청은 『통계용어·지표의 이해』(2012)를 발간하였는데, 이는 언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통계학 개념, 통계용어 및 통계청 공표 주요 통계지표 등을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는 국민들이 통계를 쉽게 이해하고 통계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기본통계지식, 산업활동통계, 물가통계 등 8개 부문 74개 용어를 수록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통계청은 인터넷을 통하여 통계이용자들이 통계용어를 신속하게 검색·조회할 수 있도록 『통계용어 검색서비스』(<http://meta.narastat.kr>)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는 국가승인통계에 나타나 있는 약 11,000개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조회할 수 있다.

통계 접근성의 핵심은 이용자가 통계자료에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도를 말하며, 명확성은 통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정보제공 수준을 말한다. 통계자료의 DB

화, 간행물 및 보도자료 홈페이지 게시, SMS로 속보 전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기능을 추가하는 것 등이 통계의 접근성을 높이는 활동이 된다.

한국의 통계보급은 전통적인 전달수단인 인쇄물과 정보통신기술에 기반을 둔 전자매체로 크게 구분된다. 전자매체로는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시스템과 전자책, CD-ROM 등과 같은 오프라인 매체가 있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통계포털(KOSIS)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보급수단이 되고 있으며, 이 외에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통계보급시스템으로는 e-나라지표, SGIS, 국가주요지표 등 다양한 시스템이 있다.

<표 4-6> 국내의 통계보급시스템

인쇄물		각종 종합통계책자, 주제별 통계 인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들어 발행종류 및 부수 급감. 점차 전자매체로 전환
전자매체	인터넷기반	국가통계포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가 통계정보를 종합적으로 직·관리·제공하는 웹사이트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한 조건과 비용부담 하에서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통계지리정보시스템 (SG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IS를 이용한 통계제공 서비스
		e-나라지표 국가주요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상황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 및 각 정책부문별로 필요한 통계정보 제공
		국민 삶의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생활의 질과 관련한 통계지표
		녹색성장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녹색산업에 관한 통계지표
	각 통계작성기관의 통계포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기관 관할 통계에 대한 통계서비스 	
기타	전자책, CD-R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형태의 전자장치를 이용한 통계제공 	

통계작성 승인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정책에 이용되는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 통계작성지정기관(한국은행) 등이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통계표, 서식, 조사사항의 성별 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통계법 제18조 통계작성의 승인)

통계작성 시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미리 통계청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새로운 통계의 작성 승인이나 변경 승인 관련 법조문에서는 통계의 형태(조사, 보고, 가공 등)와 관련 없이 모든 통계를 동일한 관리 방식으로 규정함에 따라 예산과 인력의 낭비 요인이 발생하여 관리의 효율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표 4-7> 통계법의 통계 승인 관련 조항

구분	관련 조항
통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 제19조(통계작성 승인의 취소) • 제20조(통계작성의 협의) • 제21조(통계작성의 권고), • 제21조의2(통계작성의 요청) • 제23조(통계작성에 관한 협조) •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 제25조(자료제출요구 등) • 제26조(실지조사 등)
통계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8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요건) • 제19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 • 제19조의2(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직권 지정) • 제20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 • 제21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유예) • 제24조(통계작성의 승인의 신청 및 승인) • 제25조(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 제26조(통계작성의 변경·중지 승인의 신청 및 처리 등) • 제27조(통계작성 승인의 취소)

3. 정기통계품질진단 보고서

가. 통계품질의 개요 및 제고 필요성

통계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현재의 통계작성실태를 검토하여야 한다. 통계작성 담당자가 통계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또 이를 반영하여 통계작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변

화되는 통계작성 환경을 반영하여 끊임없이 품질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통계품질진단은 통계자료가 정확성, 시의성, 유용성, 접근성, 활용성 등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통계작성의 각 과정을 진단하는 업무이다.

통계청은 국내의 국가 통계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2000년대 초반부터 통계품질진단사업의 추진을 준비하였다. 2006년부터 정기통계품질진단 5개년 계획(2006-2010)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585종의 국가 통계에 대해 품질진단사업을 완료하였다. 이어 정기통계품질진단 2차 5개년계획(2011-2015)을 수립하고 주요통계 위주의 정밀진단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정책 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로 이용되는 국가통계에 대한 전반적 품질상태 점검 필요로 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 4차 5개년 계획(2020-2024)하에 매년 품질진단을 실시한다. 이에 품질진단 결과 각 통계별 개선과제 발굴·통보, 개선이행 점검 및 개선이행 지원하였다. 이는 국가통계기반 강화를 통해 고품질의 통계생산하여 국가통계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한 것이다.

국내의 통계품질진단 제도에는 통계작성 제반 과정에 대해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정기통계 품질진단, 통계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통계를 대상으로 진단하는 수시 통계품질진단 및 통계작성기관이 소관통계에 대해 자체적으로 매년 실시하는 자체통계 품질진단이 있다. 통계품질진단 실시방법으로는 정기 및 수시통계품질진단의 경우 진단 대상통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단팀을 구성하여 실시하고, 자체통계품질진단의 경우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통계정책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성기관 스스로 진단한다. 품질진단결과 도출된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작성기관 자체계획에 의해 개선토록 하고, 통계청에서는 개선과제 이행실태 점검 등 진단 사후관리를 통해 진단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통계작성 기반이 취약하여 통계품질 개선이 지연되거나 기타 시급성과 중요도가 높은 과제를 대상으로 통계청 주관으로 품질개선컨설팅을 수행함으로써 조기 품질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표 4-8〉 통계품질진단제도

종류	진단추진주체
정기통계품질진단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진단팀
수시통계품질진단	외부 진단팀과 통계청 수시품질진단팀
자체통계품질진단	각 통계작성기관

* 출처 : 통계청.

통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수량적 정보를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그리고 적시에 제공하는 일이다. 한 나라의 국가 통계의 수준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지만, 크게 관련성(relevance), 정확성(accuracy), 신뢰성(credibility), 시의성(timeliness), 접근성/이용편의성(accessability),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통계생산의 효율성(efficiency) 등의 측면에서 접근될 수 있다. 국내 통계청에서는 관련성, 정확성, 시의성/정시성, 비교성, 일관성, 접근성/ 명확성의 6가지 차원에서 통계의 품질수준을 정의하고 있다.

한편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통계품질 평가기준으로는 UN 통계위원회에서 권고한 『공식통계 10대 기본원칙』이 있다. 『공식통계 10대 기본원칙』은 공정성, 과학적 원칙 적용, 이용자의 수요에 대응한 통계제공, 통계오차의 제시, 응답자 부담경감, 개인정보 및 비밀보호, 통계작성의 법률근거 마련, 일관성 유지, 국제기준 적용, 국제협력 강화로 이루어져 있다. 유럽공동체의 중앙통계기관인 EUROSTAT에서는 ‘통계품질의 5대 요소’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성(relevance), 정확성(accuracy), 시의성/정시성(timeliness and punctuality), 이용 편의성/명확성(accessability/clarity), 일관성/비교가능성(coherence and comparability)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4-9> 공식통계 10가지 기본원칙

-
1. 공식 통계기관이 편제한 경제·인구·사회·환경에 관한 공공데이터
 2. 과학적 원칙, 직업윤리를 포함한 전문 표준
 3. 과학적 근거가 있는 통계 방법 및 절차
 4. 잘못된 통계 해석 및 오용 공시
 5. 통계품질, 적시성, 비용, 응답자 부담을 감안
 6.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 및 보안유지
 7. 통계시스템 운영 내용의 공표
 8. 통계시스템의 일관성 및 효율성 달성을 위한 국가 내 통계 기관 간 조정
 9. 공공데이터의 일관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국제표준의 개념 및 분류, 방법
 10. 공식 통계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다자간 협력
-

* 출처: UN(2014),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29 January 2014.

OECD에서는 통계품질관리체계(Statistical Quality Framework)를 개발하여 이를 모든 통계에 대해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7가지 통계품질기준은 관련성(relevance), 정확성(accuracy), 신뢰성(credibility), 시의성(timeliness), 접근용이성(accessability), 해석용이성(interpretability), 일관성(coherence)이다.

IMF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경제위기가 부실한 통계에서 기인된 바가 크다고 판단하여 국가 통계의 품질을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통계품질의 선결요건** : 통계편제 관련 법률적·제도적 명확성, 통계자원의 적정성, 통계업무과 정에서 품질에 관한 인식도
- **직무충실성** : 중립성, 전문성, 투명성, 윤리기준 준수
- **편제방법의 적합성** : 개념, 정의, 평가기준의 적합성
- **정확·신뢰성** : 기초통계의 적절성, 통계기법 및 절차, 평가
- **유용성** : 정보제공의 적절성, 일관성, 수정절차의 공개
- **접근가능성** : 통계이용의 편의성 및 통계정보의 제공

통계청은 국가통계의 품질 측면에서 개선할 사항이 많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분산형통계 제도를 택하고 있는 현실에서 통계자원은 대부분 중앙통계기관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여타 통계작성기관은 통계작성을 위한 예산적·조직적·인적 자원이 취약하여 품질 높은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은 통계품질 진단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나. 정기통계품질진단의 대상과 절차

통계품질관리(Quality Management for Statistics)는 1985년 캐나다의 ‘통계품질 가이드라인’ 발간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통계품질관리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1999년 통계청에 품질평가계가 설치되면서 품질진단의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2002년 품질평가팀으로 개편되면서 품질진단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2006년에 국가승인통계 107종에 대한 품질진단이 진행되었으며, 2007년에 180종, 2008년에 170종, 2009년에 58종의 통계자료에 대한 품질진단을 실시하였다. 통계품질진단의 6가지 차원으로 관련성(relevance), 정확성(accuracy), 시의성/정시성(timeliness/punctuality), 비교성(comparability), 일관성(coherence), 접근성/명확성(accessibility/clarity)을 제시하였다.

통계품질진단에서는 통계품질의 평가를 위해 관련성, 정확성, 시의성/정시성, 비교성, 일관성, 접근성/명확성의 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들이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① **관련성(relevance)**: 통계자료의 포괄범위와 개념, 내용 등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정도를 말한다.(통계 이용자에게 얼마나 의미 있고 유용한 통계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는가와 관련된 개념)

② **정확성(accuracy)**: 측정하고자 하는 모집단의 특성이나 크기를 근사하게 측정한 정도를 말한다.(미지의참값과 추정된 값과의 근접성에 관한 개념)

③ **시의성/정시성(timeliness/punctuality)**: 시의성은 작성기준시점과 결과발표 시점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통계의 현실 반영도와 관련된 개념이며, 정시성은 예고된 공표시기를 정확히 준수하는가에 대한 개념이다.

④ **비교성(comparability)**: 시간 또는 공간이 달라도 통계자료가 동일한 개념, 분류, 측정도구, 측정과정 및 기초자료 등을 기준으로 집계하여 서로 비교가 가능한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⑤ **일관성(coherence)**: 동일한 경제·사회현상에 대해 서로 다른 기초 자료나 작성 방법에 의해 작성된 통계자료들이 얼마나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⑥ **접근성/명확성(accessibility/clarity)**: 접근성은 이용자가 통계자료에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 개념이며, 명확성은 통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정보제공 수준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국내에서는 정부정책 수립·평가의 기초자료로 이용되는 국가 통계의 전반적인 품질상태를 진단하여 국가 통계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5년 주기로 품질진단을 실시하는데, 이를 정기통계 품질진단이라 하며, 정기품질진단 대상통계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정부정책에 있어서 통계는 중요한 기본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통계에 바탕을 둔 정확하고 객관적인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적절하고 과학적인 정책의 수립이 가능하며, 또 통계를 통해 정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부정책에 통계가 활용될수록 더 좋은 정책이 수립·집행될 수 있는데, 국내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정책에 통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취지는 통계와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① **국가정책수립 기초자료로서의 유용성:** 정책수립·평가의 기초자료로서 전국을 대상으로 작성되는 통계, 기관별 주요 정책 자료로써 활용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에 통계작성을 강행규정으로 명시한 통계,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수립·평가를 위한 통계 제외가 있다.

② **국제비교성:** 국가별 지표 비교를 위해 주요 국제기구에 제출되는 통계. 단, 정기적 제공 통계에 한정하고 1회성 제공은 제외한다. 보고서 배포 등 참고자료 성격의 제공 역시 제외한다.

③ **모집단 자료로서의 중요성:**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성이 높은 전수 통계. 단, 일부 산업, 지역 등 특정된 분야에 한정하여 모집단 제공이 가능한 통계나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현실적인 제공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정기통계품질진단은 매년 대상통계 선정 등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통계분야별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진단팀이 이를 수행한다. 외부진단팀은 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통계 전문가들 그룹으로 구성되는데, 진단팀별로 5종 정도의 통계를 진단한다. 통계청은 내부적으로 TF 형태의 진단팀을 운영하는데, 그 주된 기능은 연차별 진단사업을 종합적으로 지도·감독하며, 외부 진단팀을 관리하는 것이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진단팀은 위탁연구 형태로 진단작업을 추진한다. 품질진단 결과는 국가 통계위원회에 보고한 후 해당 작성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진단결과 도출된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품질진단팀은 『국가 통계품질관리 매뉴얼』에 제시된 진단방법 및 진단양식을 활용하여 품질관리기반,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 세부 작성절차별 체계, 수집자료의 정확성, 통계자료서비스의 충실성 등 5개 부문에 대한 품질진단을 실시한다. 각 진단 부문은 순차적으로 진행할

필요는 없으며, 품질관리기반 진단을 완료한 후에는 상황에 맞게 각 부문별 진단을 실시한다. 통계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통계작성 환경이다. 통계작성에서 리더십과 인적자원 관리, 예산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통계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기본 인프라(infrastructure)라 할 수 있다. 통계작성 조직의 리더십이 약하고 인력 및 예산이 부족하여 작성 환경이 열악하면 그 조직에서 생산된 통계의 품질은 낮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품질진단에 앞서 통계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 전략과 방침, 인적자원 관리 및 예산규모, 통계작성 환경 등을 파악하여 품질관리기반을 진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첫째로 품질관리기반은 먼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품질관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지를 평가한다. 기관장이 비전을 제시하면 관련 전략, 방침, 계획, 목표, 세부목표 등이 수립되어야 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직과 필요한 인적자원을 계획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품질관리기반 진단 업무의 흐름은 우선 세부 진단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통계 담당자에게 품질관리기반 현황표 작성을 의뢰한 후, 면담을 통해 조사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작성환경을 진단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둘째로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 진단이다. 통계이용자는 이용하는 통계로부터 기대하는 정보를 충분히 얻기를 원한다. 품질이 우수한 통계는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많이 가진 통계이다. 따라서 통계이용자가 통계자료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조사하여 품질진단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통계작성기관은 통계의 전문이용자, 일반이용자를 구분하여 리스트를 확보하고 수시로 이용자가 해당 통계를 만족스럽게 이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부문의 진단에서는 통계이용자의 통계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사항의 반영정도를 측정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해당 통계의 관련 전문 또는 일반이용자로 구성된 표적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s)과 정책수립 및 평가, 학술연구 등에 직접 활용한 경험이 있는 주요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실시한다. 해당 통계에 대한 태도, 인식, 의견 등을 가장 잘 대변해줄 수 있는 전문이용자(정책고객, 교수, 연구원 등)를 대상으로 하는 FGI에서는 해당 통계의 문제점과 개선 아이디어를 폭넓게 추출할 수 있다.

세번째로 세부 작성절차별 체계 진단이다. 세부 작성절차별 체계 진단은 통계작성 과정이 통계작성의 본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세부 작성절차별 점검표를 이용하여 진단하는 것이다. 점검표는 통계 작성과정 중 통계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들로 구성된 진단도구로서 통계작성형태에 따라 조사통계용, 보고통계용, 가공통계용의 3가지

로 구분된다. 진단팀은 통계작성기관에서 제출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통계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점검표를 작성한다. 대상 통계의 작성절차에 대해 개선할 사항을 중심으로 품질개선 의견서도 함께 제출한다.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표본전문가는 진단통계 중 조사통계의 표본설계부문을 정밀진단한 후 그 결과보고서를 진단연구진에게 제출한다. 통계청 TF 진단팀은 진단 연구진이 작성한 세부 작성절차별 점검표와 표본설계부문 진단결과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후 품질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해당 통계의 담당자에게 환류(feedback)한다.

통계의 품질을 평가하려면 이를 위한 척도가 있어야 하는데, 통계품질지표가 이러한 척도에 해당한다. 통계품질지표는 통계를 작성하는 절차마다 통계품질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선정하여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통계작성절차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측정에 무리가 없는 지표, 향후 품질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지표 등이 우선적으로 선정된다. 품질지표는 반드시 측정가능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품질지표들이 사실에 근거하여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각 품질지표에는 별도의 세부 품질요소가 규정되어 있다. 품질점검표에는 품질요소 항목들의 이행여부를 표기토록 함으로써 통계작성기관이 기본적인 통계작성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네 번째로 수집자료의 정확성 진단이다. 통계자료가 얼마나 정확한가는 수집된 자료가 얼마나 정확한가에 달려 있으며, 이는 조사나 보고 등 자료가 수집되는 시스템의 효율성에 의해 좌우된다. 자료가 정확히 수집되었는지, 절차적 오류는 없는지 등에 대한 점검 과정은 통계품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조사통계와 보고통계의 경우는 자료수집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료수집 오류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한다. 가공통계의 경우에는 통계작성을 위해 투입되는 자료의 선정 및 중간처리 과정에서 오류 가능성을 점검하여 발생 또는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조사통계에서는 자료수집이 현장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수집자료의 정확성 진단은 현장조사의 정확성 점검으로 고쳐 부를 수 있다. 이 진단의 주요 목적은 현장조사의 오류(비표본오차) 유형과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통계품질 개선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조사통계의 경우 조사의 숙련 정도, 성실도, 태도, 자료수집 방법 등 현장조사 각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기획자, 관리자, 조사원 및 필요시 응답자 등과 면담하는 방식으로 현장조사 실태를 직접 확인 점검한다.

가공통계의 경우 자료수집과정은 통계작성을 위해 투입되는 자료의 최초 선정 과정, 수집에서 입력, 중간결과의 산출 및 최종 통계의 산출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가공통계의 유형이 다양하여 진단업무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하나의 처리단계가 결국 최종 통계작성결과에의 정확성으로 나타나고 통계의 신뢰성에 직결되므로 유의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로 통계자료서비스의 충실성 진단이다. 작성과정에서는 오류가 없는 통계일지라도 공표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다면 통계품질 정도에 관계없이 잘못된 통계가 된다. 국내에서는 매년 수많은 통계자료들이 통계간행물, 조사보고서, 각종 백서 및 통계 DB 등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통계자료서비스의 충실성을 진단하는 목적은 두 가지로써, 첫째는 주로 발생하는 오류의 유형과 발생 원인을 파악하여 이러한 오류의 재발 방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며, 둘째, 이용자에게 필요한 기본정보가 통계간행물에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미흡한 점을 보완하도록 함으로써 통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통계자료서비스의 충실성 진단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 간행물 자료와 통계DB에 수록된 내용을 비교하여 수치를 점검
- 표 형식 및 내용, 용어, 단위, 주석, 출처, 도표 및 그림, 항목명, 영문표기, 수치와 그래프와의 일치 여부 등도 체크
- 다른 기관이나 외국의 통계자료를 수록한 경우에 출처 자료의 원본과 비교

이용자 편의사항 점검은 이용자가 통계간행물(통계메타DB 포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통계정보를 수록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록내용이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통계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현재의 통계작성실태를 검토하여야 한다. 통계작성 담당자가 통계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또 이를 반영하여 통계작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변화되는 통계작성 환경을 반영하여 끊임없이 품질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통계품질진단은 통계자료가 정확성, 시의성, 유용성, 접근성, 활용성 등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통계작성 각 과정을 진단하는 업무이다.

통계청에서 2007년에 시범적으로 주요 월간 통계에 대한 품질보고서를 통계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이후, 품질보고서가 추가적으로 공개되고 있지 않아 2010년 8월 현재 공개율이 1.55%에 불과하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품질진단 결과 작성된 품질보고서를 통계작성기관 또는 통계청의 홈페이지에 공개 및 갱신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통계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통계품질진단의 방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각 통계작성단계에 따른 차별적인 품질진단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0> 통계작성단계에 따른 품질진단방법

통계작성단계	품질진단방법
품질관리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장의 관심, 전략과 방침, 인력자원관리 및 예산규모, 통계작성 환경을 파악하여 품질관리 기반 진단
이용자 만족도 및 요구사항 반영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이용자가 통계자료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 조사, 통계이용자에 대한 리스트를 확보하고 수시로 이용자가 해당통계를 만족스럽게 이용하는지 확인
세부작성절차별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작성절차별 진단서를 이용하여 통계작성 과정을 진단, 내부진단과 외부진단 실시
수집자료의 정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나 보고 등 자료가 수집되는 시스템의 효율성에 의해 좌우. 수집자료의 정확성과 절차적 오류는 없는지 진단
통계자료서비스의 충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과정에 오류가 없더라도 공표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다면 잘못된 통계이며, 이에 대한 공표과정을 진단

다음에서는 우리나라 통계청의 통계품질관리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표 4-11> 통계청의 통계품질관리 현황

주제별 유형			
고용분야 (14개 기관, 24종)	복지분야 (6개 기관, 24종)	보건분야 (7개 기관, 24종)	부동산분야 (4개 기관, 17종)
고용구조 (9종, 15종)	가족(4종), 복지시설(3종) 장애인(5종), 청소년/ 아동/노인(12종)	건강예방(14종), 치료관리(10종)	부동산(6종), 주택(11종)
통계 품질 관리 유형 및 방식			
1) 정기통계품질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진단팀 선정 • 정기통계품질진단핸드북을 공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계작성 및 공표 전 과정에 관한 품질관리기반, 이용자 만족도 및 요구사항 반영실태, 세부차별 체계, 수집자료의 정확성, 통계자료 서비스 등의 부문으로 나누어 진단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 및 원인을 파악하고 품질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2) 자체통계품질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통계에 관하여 매년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게 되며, 통계작성기관에 통계작성방법에 의해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위한 진단서와 매뉴얼 공개, 배부하여 시스템 접속을 통한 이들의 자체품질진단을 실시 • 이를 위하여 통계작성방법별 매뉴얼 및 품질진단서, 자체통계품질진단시스템 이용방법 등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함 		
3) 수시통계품질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승인계에 대한 언론 및 국회 등 통계품질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을 경우, 해당통계에 대한 수시품질진단 수행 • 진단내용 및 방법은 정기통계품질진단 방법 준용함 		

통계품질진단의 절차가 종료되면 도출된 개선과제를 차질 없이 개선 및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통계청에서는 개선과제를 해당 통계작성기관에 통보하여 이행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계획에 따른 이행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국가통계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통계작성기관은 통계품질진단사업의 결과에 따라 통계개선 요구를 받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품질진단 절차가 끝나면, 진단과정에서 도출된 개선과제를 특성 및 유형별로 분류한 후 이를 각 진단 통계 작성기관에 개선권고한다. 통계작성기관에서는 중점관리과제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진단년도 이듬해 1월말까지 통계청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통계청

에서는 통계작성기관의 개선이행 일정계획에 따라 이행완료 시점이 도래하면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및 근거자료를 작성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검토·확인한다.

수시통계품질진단은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품질이 저하되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통계에 대하여 행하는 품질진단이다. 통계청은 중앙통계기관으로서 국가승인 통계의 현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및 점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상시 모니터링은 통계청의 수시품질 진단팀이 담당하는데, 여기서는 먼저 문제가 된 통계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하며, 이와 유사한 특징을 갖는 관련 통계와의 정합성 및 추이분석을 시도한다. 그 정리된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청 내의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통계에 대한 수시통계품질진단 여부를 결정한다. 수시통계품질진단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통계청장은 수시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진단실시 5일 전까지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계획서에는 수시통계품질진단의 대상, 수시통계품질진단의 사유, 수시통계품질진단의 시기와 방법, 그 밖에 수시통계품질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통계법 제10조 및 통계법 시행령 제13조).

수시통계품질진단은 해당 통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의 심각성에 따라 통계청 내부 진단, 외부 전문가 진단, 통계청 및 외부전문가 병행 진단으로 구분되어 실시된다. 수시통계품질진단의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진단대상통계의 문제점 파악(통계청 수시품질진단팀)
- 2) 문제점에 따른 진단방법 구분(외부전문가 진단, 통계청 내부위원 진단, 외부전문가 및 통계청 내부위원 병행 진단)
- 3) 작성기관에 수시통계품질진단 실시 통보
- 4) 작성기관 및 관련 기관 방문 및 진단 부문별 점검 실시
- 5) 진단결과 종합 및 최종보고서 작성
- 6) 개선방안 권고
- 7) 이행점검 실시(반기별)

수시통계품질진단의 방법과 내용은 정기통계품질진단과 유사한데, 특히 문제점이 발견된 부문에 대해서는 정밀 진단을 실시한다. 또한 원자료를 작성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내용확인 절

차의 적절성·추정절차의 적합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단을 실시한다. 진단결과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선방안과 함께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작성기관이 제출한 이행계획에 따라 반기별로 이행점검을 실시하여 즉각적인 품질개선을 도모한다. 국가 통계에 대한 품질관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모든 승인통계에 대한 총체적인 품질진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자신이 작성하고 있는 통계에 대하여 매년 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를 “자체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 자체통계품질진단은 국가 통계의 품질에 대한 통계작성기관의 인식제고 및 통계작성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이를 통해 통계작성기관은 소관통계에 대하여 스스로 품질을 진단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이행함으로써 품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다만 정기통계품질진단 또는 수시통계품질진단을 받은 때에는 그 해의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한 해의 연말까지 그 결과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통계법 제11조).

통계법에 의해 모든 국가승인통계는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매년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담당자는 통계정책관리시스템을 통해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는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통계작성담당자는 통계법 등의 규정에 따라 자체통계품질진단 추진 계획 및 개선과제 이행계획을 3월 31일까지 시스템에 입력, 통계청장에게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체통계품질진단의 진단서 입력이 완료되면 시스템의 결과표에서 진도표와 진단결과, 품질차원별 점수, 품질보고서 등을 출력할 수 있다.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한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체통계품질진단 단계별 점검표는 통계품질지표들을 모아 질문 형식으로 구성한 것이다. 점검표에는 선정된 품질지표들이 통계작성 절차별로 배치되어 있으며 통계종류에 따라 조사통계용, 보고 통계용 및 가공통계용의 3종류가 있다. 자체통계품질진단 단계는 통계작성 기획, 통계설계, 자료수집, 자료 입력 및 처리, 자료 분석 및 품질평가, 문서화 및 자료제공, 사후관리 등 7개 단계별로 구분한다. 또한, 통계품질지표마다 각 지표에 해당하는 품질차원(관련성, 정확성, 시의성/정시성, 비교성, 일관성)이 정의되어 있고 5개 품질차원별 품질수준 측정에 활용한다. 통계품질 지표의 질문에 대한 응답은 5점 척도로 평가된다. 통계청 품질관리과는 통계작성기관이 제출한 자체통계품질진단서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통계청 장에게 보고한다. 그리고 작성기관에서 제출한 개선과제에 대한 통계청의 개선의견을 통계정책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 통계작성기관의 담당자가 다음해 추진계획 수립 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통계와 정책의 연계 강화 현황

가.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

1)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의 도입

지식정보사회로의 진전과 함께 모든 사회주체들의 의사결정에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과 그에 따른 통계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각 부처의 통계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필요한 통계가 취약한 것으로 지적되며, 이는 정책 비효율과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2007년 1월부터 통계청 주도하에 ‘통계적 정책 생애주기 관리제도’의 도입이 결정되었으며, 분산형 통계시스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중앙통계기관인 통계청이 정책에 필요한 통계지표의 개선 및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정책부처를 지원하는 통계컨설팅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의 도입에 따라, 일차적으로 법령 제·개정 부처가 관련 정책의 집행·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필요시 통계 개발 및 개선 계획 등을 검토한 평가요청서를 작성하여 통계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통계청은 평가요청서의 타당성을 검토·조정하되 부처와 통계청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의 국무회의 상정 시 통계청 의견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2) 평가대상 및 평가체계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에 따른 평가대상으로 37개 중앙행정기관이 평가 대상기관이 해당되며, 2008년 3월 기준으로 통계기반 정책관리의 대상 법령 수는 1,895개에 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소관법령은 총 대상법령 4,038개 중 9.5%인 383개에 달하고 있다. 평가체계와 관련해, 예비평가는 제·개정되는 법령에 통계기반 정책관리가 필요한 정책과 제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 **실질평가 면제법령:** 전체적으로는 통계적 기반이 필요하나 개정되는 법령에 한해 통계적 기반이 필요 없는 경우
- **평가 제외법령:** 법령 자체가 절차, 조직, 서식이나 효력만을 규정하고 있어 통계적 기반이 필요 없는 경우

- **실질평가 대상:** 새롭게 도입, 변경되는 정책과 제도가 통계에 기반을 둔 정책관리를 할 필요성
- **향후 시행령 입안시 평가법령:** 통계는 필요하지만 법률이 아직 구체적이지 않아 검토가 곤란한 경우

실질평가는 실질평가를 요청한 법령 및 예비평가에서 실질평가 대상 법령으로 분류된 법령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리게 된다.

- **평가요청 제외 법령:** 통계청 평가결과 통계가 필요치 않은 경우
- **원안동의:** 제시된 통계지표 및 통계개발·개선계획에 대해 통계청의 이견이 없는 경우
- **사용권고:** 제시된 통계지표보다 더 적합한 통계지표의 존재로 이의 사용을 권고한 경우
- **개발·개선권고:** 제시된 통계지표에 대해 수정·보완을 요청했으나 합의되지 않은 경우, 국무회의에 법령 상정시 통계청 의견 첨부

3) 평가절차 및 평가방식

제.개정 법령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시 또는 입법예고 후 즉시 평가를 요청하며, 평가요청서 법령 전문 및 제.개정 내용, 신규조문 대비표, 제개정 설명자료 등을 제출하게 된다. 중앙행정기관은 통계청의 예비평가나 실질평가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 때 통계청은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하거나 통계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각 평가단계에 따른 평가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예비)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도입·변경되는 정책·제도는 무엇인가?
- (예비) 각 정책·제도의 집행·평가가 통계에 기반할 필요성이 있는가?
- (실질) 통계지표로 수치성, 객관성, 일반성, 비교가능성의 기본요건과 정책 및 제도와 관련해 포괄성, 정책관련성, 신뢰성 등의 요건 검토
- (실질) 정책·제도별로 통계지표가 모두 제시되었는가?
- (실질) 제시된 통계지표만으로 정책·제도의 집행·평가가 충분한가?

(실질) 통계지표가 부적절한 경우, 대체할만한 다른 통계지표는 있는가?

(실질) 제시된 통계지표가 기존 통계조사 또는 행정보고를 통해 작성 가능한가?

(실질) 통계지표가 행정보고를 통해 작성되는 경우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게 작성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가?

(실질) 통계개발·개선계획의 검토 :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항목, 공표일정 및 주기의 타당성 검토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개발개선권고 법령에 대해 각 부처는 의견 접수 후 30일 이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있다. 또한 통계 개발개선계획 가운데 국가승인통계로 포함되는 것이 타당한 계획은 중기국가통계발전계획상 각 기관별 개발개선계획에 반영하여 반기별로 점검을 실시한다.

나. 행정통계의 전반적인 관리 체계

행정통계 선진화의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다.

- (1) **수요자 중심의 행정통계:** 행정통계의 수요자로서 일반국민에 대한 대응성의 강화
- (2) **정책현안과 행정통계의 연계 강화:** 현안 정책수요에 따른 행정통계의 제공 가능성이 확대되어야 하며, 행정안전부의 정책 활동 전반에 대한 통계적 지원 강화
- (3) **효율적인 행정통계관리:** 행정안전부가 기존에 작성하여 발간하고 있는 통계자료들에 대한 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통계관리를 수행
- (4) **행정통계 품질관리의 과학성 제고:** 통계관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과학적 행정통계 품질관리 활동 강화를 주문하며, 통계관리를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의 고려

행정통계 관리방식의 요구와 한계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정책참여 확대와 그에 따른 정확한 사실 판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시의 적절한 통계자료 요구가 확대되고 있으나, 단편적이고 나열적인 행정통계의 의미 없는 생산, 공급자 위주의 행정통계 관리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통계와 정책연계를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2007년 통계 관련

정책에 대한 생애주기적 접근의 도입 등 통계와 정책연계에 대한 강화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통계품질관리에 대한 요구 및 제도적 의무화가 강화되고 있으며, 과학적 엄밀성/정확성과 신속성 등을 기준으로 하는 통계품질관리의 요구가 확대된다. 이용자 차원에서 필요한 통계를 용이한 방식으로 작성·제공하고자 하는 고객 관점에서 새로운 통계품질관리의 요구가 추가되고 있으며, 통계품질관리의 중요한 기준으로서 이용자 적합성이 강조되고 있다. 수준 높은 행정통계관리를 위한 통계담당 조직의 양적·질적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으나, 통계청을 제외한 일반 중앙부처 통계인력의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2009년 통계청의 국가승인 통계 정비 결과, 행정안전부의 승인통계는 15종에서 12종으로 축소되었다. 이는 활용도가 낮아 승인통계에서 제외된 단순보고통계로 행정부 국가공무원정원현황(1년), 정부기구추이(1년), 전자민원서비스이용 민원처리현황(반기)이다. 기계적으로 통계자료를 작성하고는 있으나, 정책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 심층적 분석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통계의 경우 승인통계에서 배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1) 유사중복 여부

통계자료 간의 유사중복 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따른 정비방안을 모색한다. 유사중복 여부의 확인을 위해 다음의 질문을 고려할 수 있다. 발간통계자료에 포함된 개별 통계항목들의 내용이 다른 발간통계자료의 통계항목들과 유사하거나 중복적인 내용이 존재 여부, 행정안전부의 업무영역을 고려할 때 각종 발간통계자료들이 대표성을 갖고 있으며 분산여부, 혹은 특정 영역을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지 않은가? 개별 발간통계자료의 명칭이 다른 발간통계자료와 확연한 구별 여부 등이 있겠다.

행정안전부 통계자료의 유사중복 여부 확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비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상당규모의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복수의 발간통계자료에 대해 하나의 발간통계자료로 통·폐합, 일정영역에 한정하여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개별 통계항목의 이동을 통한 복수의 발간통계자료 정비, 동일한 업무영역에 속하는 다수의 발간통계자료들의 경우, 대표성 있는 하나의 발간통계자료로 통합, 개별 발간통계자료의 명칭의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형태로 명칭 변경이 있겠다.

2) 발간통계자료로서 적합성 여부

행정안전부 25종의 통계자료들은 통계간행물로서 관리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고려하여 통계자료의 정비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통계법 제3조 제1항에서는 통계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계자료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통계법 제3조 1항)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 측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임 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다만, 통계작성기관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적 정보는 제외한다.

발간통계자료로서 적합성 여부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포함할 수 있다.

- 전체적인 행정안전부의 발간통계체계를 고려할 때, 발간통계자료로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할 정도로 적합성이 확인되는가?
- 통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계 개념 정의를 고려할 때, 해당 발간통계가 통계 관리의 대상으로 적합한가?
- 전체 발간통계자료의 구성내용 가운데 통계자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통계발간물로서의 관리가 적절한가?

행정안전부 통계자료의 발간통계자료의 적합성 확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비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발간통계자료로 적합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행정안전부 발간통계체계에서 제외하여 일반간행물로 관리
- 발간통계자료로 적합성이 떨어지는 일부 부분이 포함될 경우, 일반간행물로 분류되어야 할 부분과 발간통계자료로 관리되어야 할 부분을 분리

제2절 국가 승인통계 추진 요건 및 체계

1. 국가 승인 통계 요건

가. 형식 요건

국가통계의 생산과정과 관련해, 외형적 절차 및 요건은 조사의 기획과 설계, 자료수집, 자료처리, 자료의 정리 및 공급의 네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1) 조사의 기획과 설계

조사목적 및 제약조건을 명확화, 조사범위 및 조사 단위의 설정, 조사사항의 선택, 분류의 검토, 조사 방법, 조사 기간의 선택이 있으며, 모집단 및 추출틀, 표본 규모 결정, 추정식의 효율성 제고한다.

2) 자료수집(조사)

조사 표준화 및 조사원 관리와 모집단 변동에 따라 모집단을 관리한다.

3) 자료처리(분석 및 가공)

자료처리계획, 자료처리작업, 집계 및 작성된 통계의 가치 제고하며, 조사된 통계를 단순 집계하는 수준,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한다.

4) 자료정리 및 공급

자료정리의 기본사항, 통계표의 자료제공, 통계도표 이용, 자료의 공급하며, 자료공표의 중복에 따른 이용자의 혼란과 통계 신뢰도 저하, 세부 자료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나. 내용 요건

국가통계는 통계법의 대상이 되는 통계로서 사회·경제적 변화를 진단하고 과학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공재이다. 이에, 국가통계작성기관 및 그 종사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통계의 기본적인 내용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중립성 보장

국가통계는 공익적 가치를 가진 공공재로서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계작성 및 공표와 관련하여 통계작성기관은 정책기관, 이익단체 등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그리고 통계작성기관은 통계의 작성 방법 및 절차, 공표의 내용 및 일정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신뢰성 제고

국가통계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계작성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과학적인 작성기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조사기획, 자료수집에서 공표에 이르는 적절한 통계작성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통계의 품질을 관리하고, 이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품질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미리 예정된 결과를 상정하고 통계를 작성하지 않도록 한다.

3) 효율성 제고

국가통계 작성에 있어서는 비용, 응답 및 조사부담 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기적인 계획 수립, 통계작성기법의 적용,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작성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공유하여 통계의 중복작성을 방지하고 조사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이용 가능한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응답부담을 경감하여야 한다.

4) 비교 가능성

국가통계는 다른 통계와 비교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비교 가능한 개념, 분류, 방법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계는 국·내외 기준 등을 고려한 표준화된 방법을 적용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체계 또는 자료수집·분류 방법 등이 변경된 경우 신규 통계 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른 통계와의 비교를 위하여 개념, 정의, 모집단 구성, 표본추출방법, 분류기준, 통계작성방법 등을 기술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통계의 가치증진을 위하여 국내는 물론 국가 간,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원 및 기술습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비밀 보호

통계작성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목적외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엄격히 보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계작성과정에서 알게 된 개별정보를 통계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하며, 통계작성과정에서 수집된 개별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자료 제공시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6) 인프라 확충

국가통계 작성시 필요한 인력, 예산, 전산장비 및 프로그램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계를 전담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표본설계, 자료수집, 분석 등에 대한 연구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전문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이용자들의 수요에 부응한 통계개발 및 개선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7) 이용자 참여

국가통계의 실용성을 향상시키고,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용자들을 효과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계자료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과 긴밀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발전시켜야 하며, 전문가회의, 이용자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소관 통계에 대한 개발·개선 요구, 기타 수요에 대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 서비스 향상

국가통계는 모든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이용자들이 동일한 시간에 동등한 권한으로 공표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이용자들이 통계의 공표 일정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예고하고 그 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통계자료는 기준시점과 발표 시점의 시차를 최소화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언론보도, 보고서 발간,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계 결과물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통계자료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기타 추가 요건

1) 조사항목

▶ 조사 항목 선정 및 조사표 설계

유사통계 조사 항목 자료와 정책자료·연구자료를 검토 여부로 국내외 유사한 통계 조사의 조사 항목 및 조사내용, 정책자료, 연구발표자료, 통계이용자의 요구사항 등 자료를 수집한다. 이에 해당 분야의 최근 동향, 전문가와 자료 이용자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다. 또한 개념, 용어, 기준 등의 분류체계 및 표준의 확인 여부로 개념, 용어, 기준 등이 분류체계나 법, 관할기관에 의해 또는 학술적으로 정해진 기준이나 표준이 있는지 확인한다.

▶ 자료수집 방법 및 설계

·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지침서 작성 여부** - 조사지침서는 조사원이 수행할 업무내용이나 조사표 기입 요령 등을 설명한 책자로 통계청 「지침서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표 4-12> 조사지침서 표준화 가이드라인

<p>I. 조사개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사목적 2. 법적근거 3. 조사연혁 4. 조사기간 5. 조사주기 6. 모집단 및 표본설계 7. 조사대상 8. 조사항목 9. 조사방법 10. 결과공표 11. 조사체계 12. 조사업무흐름도 <p>II. 현장조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사직원의기본자세 2. 사업체/가구관리요령 3. 현장조사요령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면접조사요령 나. 전자조사요령 다. 조사불응, 장기부재 등에 대한 대응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라. 재난재해 발생 시 대응방법 마. 현장조사 안전 수칙 <p>4. 조사표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조사표 작성 시 유의사항 나. 조사 관련 기본개념 및 설명 다. 조사 항목별 작성요령 <p>III. 내용검토 및 입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용검토 2. 입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입력에 관한 일반 사항 나. 직원용 입력 프로그램 다. 응답자용 입력 프로그램 <p><부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사지침서주요개정내용 2. 주요사례별처리방법 3. 조사용어해설 4. 조사표(건본) 5. 통계청작성통계현황 6. 통계법주요조항
--	---

* 출처 : 통계청 지침서 표준화 가이드라인

- **조사자료 수집 방법의 적절 여부** - 자료처리를 고려하여 조사 수행 체계를 결정한다.

구분	입력방법	장점	단점
PAPI (Paper And Pencil Interviewing)	- 종이조사표 - 컴퓨터를 활용해 입력	- 자료입력 또는 내검에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중앙통제 용이	- 시간 과다 소요 - 현장 내검 곤란
CAPI (Computer-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 조사현장에서 휴대용 소형컴퓨터(PDA)를 이용하여 입력	- 조사현장에서 오류수정 가능	- 초기 장비 구입 비용 과다 - 면접 조사에만 이용 가능
CASI (Computer-Assisted Self Interviewing)	- 인터넷 이용 - 응답자가 직접 입력	- 조사 기간 중 응답자가 원하는시간에 입력 가능 - 시간 단축, 비용 절감 가능	- 표본의 제한 - 낮은 응답률, 응답자 대표성 문제 - 네트워크 보안문제
CATI (Computer-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	- 전화 이용 - 전화로 질문을 읽어주 고 응답자의 답을 컴 퓨터에 실시간 입력	- 응답자 중심의 맞춤형 조사기법 적용 가능 - 시간 단축, 비용 절감 가능	- 상호 신뢰감 형성 및 동기 유발 어려움 - 면접환경 통제 및 표준화 불가능

• **조사 항목 선정 시 주의사항의 확인 여부** - 양질의 자료 수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조사표 설계가 가장 중요하므로 조사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응답의 용이성 등 주의사항을 고려하여 조사표를 설계한다. 비슷하거나 미세한 차이가 나는 질문을 반복해서 물을 경우, 응답자에게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조사표는 서로 배타적인 조사 항목으로 구성한다.

• **조사 항목 문구 작성 시 고려사항 확인 여부** - 조사 항목의 용어나 문구는 보통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단어와 문장으로 작성한다. 조사표만으로 조사 항목의 의미를 완전히 알 수 있도록 완결하며, 단순 명료하게 작성한다.

• **조사 항목 길이의 적정 여부** - 조사 항목 수가 많으면 응답자나 조사원의 부담이 커지며, 집계·분석 기간이 늘어나 비표본 오차와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조사 항목 수와 질문의 길이를 적절하게 결정한다. 응답 소요 시간은 면접 방식의 경우, 양 30분 전후, 전화 면접은 5~10분, 자기기입식의 경우 15분 전후가 되도록 설계한다.

• **조사 항목 배열의 적정 여부** - 조사 항목의 용어나 문구는 보통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단어와 문장으로 작성한다. 조사표만으로 조사 항목의 의미를 완전히 알 수 있도록 완결하며, 단순 명료하게 작성한다.

• **조사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의 포함 여부** - 조사표 서두에 조사의 제목 또는 주제, 조사 목적, 응답자 협조 요청, 조사기관, 비밀보호 정책, 응답 소요 예상시간 등에 관한 정보들을 제시한다.

• **결과표를 고려한 조사표 설계 여부** - 결과표를 얻기 편리하도록 설계되었는지 검증한다.

• **조사표 사전테스트를 통해 타당성에 대한 검토 여부** - 조사표 사전테스트는 본조사 실시를 위하여 본조사와 동일한 조건 하에서 구체적 자료를 수집하는 소규모 조사이다. 조사표 사전테스트의 표본 규모가 클 필요는 없지만 가능한 실제 조사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다. 응답자가 모든 질문을 조사표 작성의 의도대로 이해하는지, 애매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질문은 없는지, 응답자들이 힘들어하거나 응답이 오래 걸리지는 않는지 등을 검토한다. 응답자 면접이 끝난 후 응답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질문이나 느꼈던 반응, 소감 등을 부가적으로 수집하기도 한다. 조사표 사전테스트 결과 얻어진 개선 사항을 수정·반영한다.

2) 모집단 및 표본 설계

조사설계 단계에서 조사표 접수, 조사표 입력방식 및 기간, 내용검토 기간 및 체계, 자료처리 일정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결측치 처리, 가중치 적용기법 등 자료 집계 및 자료분석을 위한 세부절차를 작성한다. 집계 및 분석 방법 설계, 추정·추계 방법 설계 등을 포함한다.

자료처리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1. 자료처리 계획 및 일정의 적절성(조사표 접수, 조사표 입력 방식 및 기간, 내용검토 기간 및 체계, 자료처리 내검요원 모집, 자료처리 일정 등)
2. 입력 및 자료 내용검토 방법에 대한 교육 여부
3.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검증하기 위한 체크리스트의 충실성
4. 조사자료 입력방법 및 입력오류 최소화 방안의 적절성
5. 단위무응답 및 항목무응답 처리방법의 적절성
6. 모수 추정 및 자료 분석 등 자료처리 방법의 적절성

3) 통계생산 체계 설계

통계생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서로는 예산 배정, 조사 일정, 조사 인력 운영, 홍보, 현장조사 실시, 내용검토 등 통계작성 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 계획 및 추진 일정을 작성한다. 시행 지침은 상세하게 세우되, 조사 진행 과정에서 조율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긴다.

<표 4-13> 실시계획 주요 내용

<p>I. 조사배경</p> <p>II. 조사개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사목적 2. 법적근거 3. 조사대상 및 조사주기 4. 조사기간 5. 조사방법 및 입력 6. 소요예산 7. 조사체계 <p>III. 세부추진 계획</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합실시 계획 수립 2. 조사항목검토 및 조사표 설계 3. 조사지침서 작성 4. 표본설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입력프로그램 개발 6. 시험조사 실시 7. 통계작성 승인신청 8. 조사표류 등유인물 인쇄 9. 조사원모집및교육 10. 홍보 실시 11. 조사 실시 12. 조사표 입력 및 내검 13. 자료처리 및 결과 분석 14. 결과공표 15. 보고서발간 <p>IV. 소요 예산</p> <p>V. 추진 일정표</p>
---	--

통계조정과와 사전 협의 후 통계작성 승인 신청을 추진한다. 새로이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가 통계법 적용대상의 통계인지 확인한다.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를 자체 판단하거나 판단의뢰 한다.(행정자료 우선활용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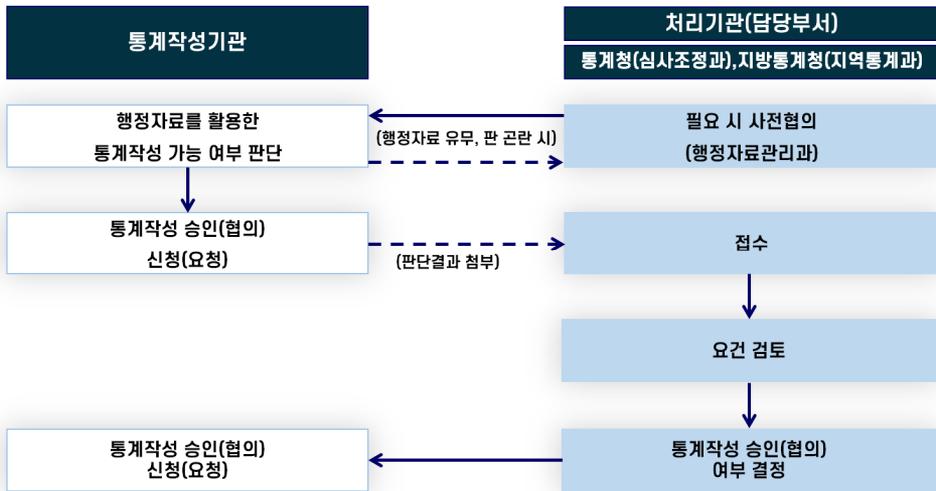
통계작성 승인 신청서와 통계법 시행규칙이 규정하는 첨부 서류(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 통계 결과표 등)를 구비하여 통계작성 승인을 신청한다.

〈표 4-14〉 통계작성 승인서 및 첨부 서류 등

1. 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 (성별구분 여부를 포함하여 작성)
2. 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서 또는 요령서
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 (필요한경우성별구분란표시)
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5. 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6. 표본설계의 명세(표본조사의 경우에만 첨부)
7.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결과
8.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 준수 여부 검토자료(기준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

*출처: 통계법 시행규칙 제12조

통계작성 승인 신청서와 통계법 시행규칙이 규정하는 첨부 서류(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 통계 결과표 등)를 구비하여 통계작성 승인을 신청한다.



[그림 4-1] 통계작성 승인(협의) 절차

자료 수집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국가통계 승인(변경 승인) 가능 사전 여부는 통계조정과와 협의하여 국가통계 승인 가능 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통계의 기술적 측면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제거한다.

〈표 4-15〉 통계작성 승인사항

-
1. 통계의 명칭 및 목적
 2. 작성 목적
 3. 통계작성의 사항(다만, 작성대상이 자연인이면 성별 구분을 포함하되, 통계청장과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성별 구분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음)
 4. 통계작성의 대상(다만, 작성의 대상이 자연인이면 성별 구분 포함하되, 통계청장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통계방법상의 한계로 성별 구분이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성별 구분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음)
 5. 통계작성의 기준시점·기간 및 주기 (다만, 조사통계의 경우 통계 조사 기간을 적음)
 6. 통계작성의 방법
 7. 자료수집 체계
 8. 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법 제22조에 따른 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통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함)
 9. 조사표, 보고 서식 및 통계표 등 통계의 작성이나 공표와 관련된 서식
 10.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 준수 여부(기준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

* 출처: 통계법 시행령 제25조

4)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정부가 특정의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을 개발·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실태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저소득층의 수나 소득수준, 생활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통계는 이러한 사회현상에 대한 계량적 정보를 제공하며, 따라서 정책과 관련한 통계의 준비는 정책개발과 집행의 과학화에 기여하고, 정책효과를 제고하며, 정책효과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 정책의 개선·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이 정책과 통계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지식정보사회로의 진전과 함께 정부·기업·가정 등 모든 사회주체들의 의사결정에 정확한 통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에 따라 각계각층에서 통계수요가 크게 증

가하고 있다.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정부도 주요 정책의 도입 및 개선 시 이에 필요한 통계를 작성 또는 개선하려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정부는 통계청을 중심으로 하여 정부 주요부처가 정책과 통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였는데, 이를 통해 「통계적 정책 전 생애 관리제도 (Statistical Policy Life-Cycle Assessment)」의 도입이 결정되었다. 이 제도는 [정책의 개발 → 정책의 집행 → 정책효과의 평가 → 정책의 개선·발전]으로 이어지는 정책의 흐름을 통계라는 계량적 정보의 토대위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지의 구체적 수단으로서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는 정부 각 부처가 새로운 정책의 시행을 위해 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 그 정책에 필요한 통계를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구비하도록 의무화하고, 통계청이 해당 정책의 집행·평가에 필요한 통계지표의 구비여부 및 통계개발·개선계획의 타당성을 평가·조정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는 통계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에 있어서는 일차적으로 법령 제·개정 부처가 관련 정책의 집행·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여부, 필요 시 통계개발·개선 계획 등을 검토한 평가요청서를 작성하여 통계청에 제출한다. 통계청은 이를 토대로 통계개발·개선계획의 타당성을 검토·조정하되 관련 부처와 이견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때 통계청의 의견을 함께 제출토록 하였다. 통계기반 정책평가제도의 성격은 각 부처가 필요한 통계를 스스로 작성하는 분산형통계시스템의 골격은 유지하되, 중앙통계기관인 통계청이 정책에 필요한 통계지표의 개발·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정책부처를 지원하는 통계컨설팅 제도라 할 수 있다. 통계기반정책평가는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적용되며 대상법령은 원칙적으로 모든 제·개정법률 및 시행령(대통령령)이다. 다만 통계기반정책평가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된다. 2013년 9월 기준으로 43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해 통계기반정책평가가 적용되며, 실제로 평가대상으로서 심사대상이 되는 법령은 1,624개이다.

▶ 평가체계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일차적인 목표는 법령 제·개정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집행·평가에 있어서 통계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 통계가 미비할 경우 통계개발·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개정 법령마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만,

통계가 불필요한 법령개정에 대하여도 동일한 수준의 검토를 하는 것은 행정적 낭비이다. 그러므로 제·개정 법령이 통계적 뒷받침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는 사전평가 및 예비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평가」와 「예비평가」결과에 따라 통계가 필요한 법령으로 판단되면 통계의 필요성·구비여부·개발계획 등에 대한 「실질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사전평가」는 평가요청기관의 업무부담 경감과 신속한 입법절차를 위해 다음의 3가지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 제정 법률이 시행령을 입안하는 단계에서 통계의 필요성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 평가대상 제외법령’ 이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거나, 기존의 정책을 통계에 기반을 둔 필요성이 있는 정책으로 변경하는 경우
- 제·개정법령의 내용이 통계에 기반을 둔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

「예비평가」에서는 제·개정되는 법령에 통계기반정책평가가 필요한 정책과 제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평가결과 유형은 평가대상 제외법령, 실질평가 면제, 시행령 입안 시 평가, 통계지표 활용권고, 실질평가 대상으로 구분된다.

- 평가대상 제외법령 : 법령 전체가 절차, 조직, 서식이나 효력 등만을 규정하고 있어 통계적 기반이 필요 없는 경우
- 실질평가 면제 : 해당 법령에 있는 정책은 통계기반정책평가가 필요하지만 정책변경 내용이 통계기반정책평가를 할 사항이 아닌 경우
- 시행령 입안 시 평가 : 신속한 입법, 정책의 구체화 필요 등으로 시행령 입안단계에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통계는 필요하지만 법률이 아직 구체적이지 않아서 통계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우므로, 향후 그 내용이 구체화되는 시행령 제·개정 시점에서 검토하겠다는 의미
- 통계지표 활용권고 : 실질평가 대상이지만 필요 통계지표가 이미 모두 구비되어 있거나, 향후 구비될 것이 명백한 경우. 관련 통계지표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을 통보하고 평가 절차를 종료
- 실질평가 대상 : 제·개정되는 법령을 통해 도입·변경되는 정책이 통계에 기반을 둔 정

책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 경우 법령 소관기관은 다시 실질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실질평가」는 제·개정 법령이 통계가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예비평가 결과에 따라 실질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법령이 있으며, 각 부처가 예비평가 요청 없이 바로 실질평가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실질평가에서는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린다.

- 평가대상 제외법령: 예비평가에서와 같이 통계기반정책평가를 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평가가 필요 없는 경우
- 통계지표 활용권고: 필요 통계지표가 이미 모두 구비되어 있거나, 향후 구비될 것이 명백한 경우
- 통계개발·개선: 평가가 요청기관이 제시한 통계개발·개선에 대하여 이견이 없거나 이견이 있 었지만 평가과정에서 협의를 통해 합의가 된 경우
- 통계개발·개선 미합의: 통계개발·개선계획의 수립 여부 및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평가요청기관과 이견이 있는 경우. 이 경우 평가요청기관은 국무(차관)회의에 법령 제·개정안을 상정할 때 법령안과 함께 통계기반정책 최종평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평가 절차 및 방식

법령을 제·개정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은 예비평가 또는 실질평가요청서를 작성하여 통계청에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법령 제·개정 부서와 해당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가 다른 경우에는 예비평가 시에는 법령안 소관부서 또는 정책 추진 부서가 평가요청을 하여야 하며, 실질평가 시에는 정책 추진부서가 작성하여 평가요청을 한다. 평가요청을 할 때는 해당기관의 실무자인 통계책임관(CSO: Chief Statistical Officer)의 검토를 받아 평가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요청기관은 통계청의 예비평가나 실질평가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통계청은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하거나 국가 통계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표 4-16>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시행절차

절차단계	내용
① 사전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기관 협의 또는 입법예고 시 제·개정 법령안 전문과 내용을 검토하여 사전평가 후 결과 통보
② 예비평가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기관 협의와 동시에 예비평가요청서를 통계청에 제출 실질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예비평가를 생략하고 곧바로 실질평가요청
③ 예비평가 실시 및 결과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평가요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④ 이의제기 및 재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기기간: 예비평가결과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재평가기간: 이의제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⑤ 실질평가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출서류: 실질평가요청서, 통계개발·개선계획 등
⑥ 실질평가 실시 및 결과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처리기한: 입법예고기간 만료 시까지 필요한 사항은 통계청과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보완
⑦ 이의제기 및 재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기기간: 실질평가결과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요청기관과 합의가 안 될 경우, 국가 통계위원회 상정·심의
⑧ 평가결과 이행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기반정책평가 결과 반영 여부 파악을 위한 관련 자료제출 요청.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3월 말까지 통계청에 통계개발·개선 이행상황 통보서를 제출

▶ 평가내용

● 사전평가 및 예비평가

사전평가 및 예비평가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평가한다.

- 법령의 제·개정을 통하여 도입·변경되는 정책은 무엇인가?
- 각 정책의 집행·평가가 통계에 기반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상의 두 가지 내용을 검토하여 평가대상 제·개정 법령이 평가 제외법령, 실질평가 면제법령, 시행령 입안 시 평가 법령, 통계지표 활용권고 법령, 실질평가 대상법령의 5개 유형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사전평가에 따라 당해 법령이 ①, ②, ③의 유형에 해당할 경우 법령 소관기관의 평가요청이 없어도 평가결과를 법령 소관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 실질평가

실질평가에서는 통계지표와 통계개발·개선 계획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통계지표와 관련하여서는 6개의 사항을 검토하는데, 수치성, 객관성, 일반성, 비교가능성의 기본요건과 아울러 정책에 관련해서 포괄성, 정책관련성, 신뢰성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하와 같다.

- 정책별로 필요한 통계지표가 모두 제시되어 있는가?
- 제시된 필요 통계지표만으로 정책의 집행·평가가 충분한가?
- 제시된 필요 통계지표가 모두 구비되어 있는가?
- 필요 통계지표가 부적절한 경우, 대체할만한 다른 필요 통계지표는 있는가?
- 제시된 필요 통계지표가 기존 통계조사 또는 행정보고를 통해 작성이 가능한가?
- 필요 통계지표가 행정보고를 통해 작성되는 경우,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게 작성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가?

통계개발·개선계획에 있어서는 평가요청기관이 통계 개선·개발 계획을 제시하는 경우와 평가요청기관이 통계 개선·개발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각 경우마다 통계개발·개선 계획의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항목, 공표일정 및 주기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평가요청기관이 통계 개선·개발 계획을 제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토한다.

- 제시된 통계개발·개선계획을 통해 필요한 모든 통계지표의 작성이 가능한가?
- 제시된 통계개발·개선계획은 적절한가? 여기서는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체계, 주요 조사사항, 작성주기, 추진일정 등이 검토된다.
- 개발·개선이 필요한 통계지표 작성을 위한 추진일정은 적절한가?
- 개발·개선되는 통계가 기존의 다른 통계와 중복되지는 않는가?

- 통계개발·개선계획이 타 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해당 기관과 충분히 협의되었는가?

평가요청기관이 통계 개선·개발 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상의 평가기준을 토대로 통계청이 통계개발·개선계획을 마련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동 계획을 제출한다.

2. 추진 및 절차 요건

가. 통계작성승인 검토 요건 및 내용 서류

1. 유사·중복 통계 여부 검토(기승인된 통계 중 활용가능한 통계 사전 검토)
2. 새로이 생산하는 수량적 정보가 통계법 적용대상 통계인지 여부 판단
(통계법 제3조 관련, 자체판단이 곤란한 경우 통계조정과로 질의)
3. 통계작성의 승인 신청 대상인지 협의 대상인지 구분(통계법 제20조)
- 통계작성의 협의는 다른 법률에 따라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국가통계는 통계법의 대상이 되는 통계로서 사회·경제적 변화를 진단하고 과학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공재이다. 국가통계를 생산하는 통계작성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얻고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에, 국가통계작성기관 및 그 종사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통계의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통계작성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승인신청서 접수 - 문서 및 조정시스템
- ② 승인대상여부 심사 - 통계법 제2조에 의거 감사(해당 부서 의견수렴) 후 승인대상 아니면 반려
- ③ 신청서류 검토 및 보완 요구 - 조사표, 지침서, 표본설계내역, 결과표 등 신청서류 구비 및 주요사항 포함여부 검토
- ④ 통계청내 관련 부서 내용심사 - 표본관리과, 통계기준과, 통계작성부서 등에 내용심사 의뢰

- ⑤ 수정 및 보완 요구 - 조정담당자 및 관련부서 심사결과에 따라 미흡한 부분에 대해 수정 및 보완 요구
- ⑥ 통계조정과내 직원심사 - 통계조정과 조정업무담당 직원들에 의해 최종 심사
- ⑦ 검토의견서 작성 - 최종 검토의견서 작성
- ⑧ 보고 및 결재 -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결재권자(국장)까지 보고
- ⑨ 결과통보 및 조정시스템 처리 - 문서발송 및 조정시스템에 처리완료

작성승인 신청 시 내용 서류는 다음과 같다.

- 1) 통계작성승인(협의) 신청서
- 2) 통계법 시행규칙 제12조(통계작성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 ① 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
 - 통계작성 승인신청사항을 전반적으로 기술한 통계 개요 포함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서 또는 요령서
 - ③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
 - ④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 ⑤ 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 ⑥ 표본설계의 명세(표본조사의 경우에만 첨부)
 - 표본설계 요약서 첨부
 - 표본설계 내용 및 검토기준을 기술한 세부내역서(명세) 첨부 (예 : 표본설계 용역보고서, 표본설계 최종보고서 등)
 - ⑦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결과
 - 통계청장에게 판단의뢰를 한 경우 제출 불필요
 - ⑧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 준수 여부 검토자료(기준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

신청서류 접수·처리, 심사 및 흠결사항 보완, 신청서류 심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접수 및 처리

승인신청서를 받으면 조사 및 가공통계 10일, 보고통계 7일, (표준분류와 다른 분류기준의 사용 동의 7일 추가)이내에 승인신청을 처리하여야 하며, 공휴일, 신청 서류의 보완 및 수정 기간은 제외되며, 처리 내용이 둘 이상 중복될 경우 처리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통계법 시행규칙 제13조(통계작성 승인신청의 처리기간 등) ① 통계청장은 제1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 승인신청서를 받으면 별표 1에서 정하는 기간에 통계작성 승인신청을 처리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적용에 동의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고,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심사 및 흠결사항 보완

제출 받은 신청 서류에 모자람이 있거나, 승인심사를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 요청을 하며, 수정보완은 문서, 구술,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다. 필요시 통계청 내 관련 부서, 통계조정소위원회 또는 통계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다. 통계법 시행규칙 제12조(통계작성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③ 통계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류의 수정·보완이나 관계 자료의 추가제출이 필요하면,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구술·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신청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청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3) 신청서류 심사

- 이미 승인을 받은 다른 통계와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목적 및 방법 등 그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표본규모가 지나치게 작거나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 또는 목적 등이 특정 이익집단 또는 특정부문에 편중되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작성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통계작성의 승인은 새로운 국가통계가 생겨나는 것이므로 공익성·연속성·절차성 및 활용성을 중심으로 심사

- 통계작성승인 심사는 조사통계, 보고통계 및 가공통계별로 특성을 감안하여 심사내용 및 기준을 달리하여 적용

- 조사통계는 대부분 표본조사이고 조사결과를 추정하므로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표본 설계내역에 대해 중점 심사

- 보고통계는 통계법상 통계의 정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중점 심사

- 가공통계는 기초 자료의 신뢰성 여부 및 가공기법 등을 심사

- 주요 심사내용 : ‘통계작성 승인 심사표’

- 통계법(제3조)에서 규정한 통계의 정의 및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기존 승인통계와 유사·중복이 아닌지 여부
-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한 표준분류를 사용하는지 여부
- 통계의 신뢰성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 응답부담 감소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

통계명칭 및 유사중복 여부는 기존 승인통계와 명칭이 달라야 하며, 기존 승인통계와 작성목적, 포괄범위, 분류기준, 작성주기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한다. 별도 응답 부담이 수반되지 않는 보고통계, 가공통계는 기존통계와 일부 항목이 유사하더라도 기존 통계를 보완(세분화, 주기 단축 등)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통계적 유용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유사통계 허용으로 인한 혼란 가능성과 통계 유용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기존 통계에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통계명칭이 유사한 통계가 있는 경우 유사중복 여부 심사 및 통계의 명칭은 이해하기 쉽고 통계내용을 잘 반영하여야 한다. 통계의

작성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특정한 이익 집단에 편중되거나 개인적인 학술연구 목적이 아니어야 하며, 작성된 통계는 법에서 정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한 공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통계이용자가 이해관계자 일부로 한정되어서는 안된다. 통계작성의 사항은 통계작성 목적에 맞게 항목이 구성되어야하며 내부이익을 위한 항목은 없어야 하며, 주관적 인식·의식 등의 항목이 지나치게 많아서는 안된다.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성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나 성별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과 협의하여 성별 구분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통계작성의 대상 경우, 모집단이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하며, 통계적 기법을 사용한 표본설계, 표본추출방법, 표본오차, 신뢰수준 등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통계작성의 기준시점, 기간 및 주기로 통계작성 기준시점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자료수집기간과 기준시점 및 대상기간의 시차가 적정하여야 한다. 또한, 일정한 작성주기를 가지고 규칙적으로 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통계작성방법의 조사통계는 검증된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타당성을 충족하여야 한다. 표준화된 조사표, 조사방법의 적정성, 무응답에 대한 보정방법 등이 있으며, 내부적 사용 목적이거나 현황 및 업무실적 등 단순 집계하는 보고 자료는 통계가 아닌 수량적 정보에 해당한다. 가공통계는 수집한 한 종류 이상의 투입자료(관련 통계 및 외부자료)를 분류, 집계, 편집, 단계별 가공 등의 통계작성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투입자료를 단순 분류하거나 수집 자료를 종합 수록하는 것은 가공통계로 볼 수 없다. 가공통계의 경우 인용한 자료원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수집 체계는 작성기관이 자료수집 시 자체조직 및 인력의 부실 여부 판단 및 위탁 시 위탁 받은 기관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타 기관의 통계조사 및 작성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 승인신청의 주체는 대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해당 통계에 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기관이 신청하여야 한다.

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으로는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한 한국표준분류를 사용하여야 하며, 특수분류를 사용할 경우 표준분류와 연계표를 작성하고 마이크로데이터는 특수분류 및 표준분류로 병행 관리하여야 한다. 표준분류가 아닌 경우 사전에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표준분류와 연계표를 작성하고 마이크로데이터는 자체분류 및 표준분류로 병행 관리하여야 한다. 조사표, 보고서식 및 통계표 등 관련 서식은 조사표, 보도자료 표지 좌측 윗부분, 간행물 표지에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 표시 및 표본설계 시 고려된 항목/분류와 조사항목에 근거하여 결과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사원 및 응답자를 위해 항목별 작성지침(조사기준

및 방법) 작성·제공한다. 응답부담 감소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와 모집단 및 표본에 관한 보완 및 정비여부를 판단한다. 조사가 포함된 통계를 대상으로 검토결과를 기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사의견을 작성한다. 공동작성통계(근거: 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 제8조)는 하나의 통계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관이 역할을 분담하여 통계작성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 공동작성통계로 승인한다.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역할 분담사항(‘기획, 인력, 예산, 자료수집, 자료처리, 결과분석, 공표, 공동작성근거, 기타통계작성을 위한 협력사항’) 중 자료수집과 결과분석은 모든 참여기관이 공동 참여하여야 한다. 여기서 자료수집 및 결과분석 참여 방식은 다양한 형태로 운영 가능하다. 다만, 예산만 지원하거나, 기획, 결과분석, 공표 단계만 참여하는 등 역할 분담이 미미하여 다른 한 기관이 독자적으로 작성 가능한 경우는 공동작성통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공동작성통계 승인 신청으로는 공동작성통계로 승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주기관이 통계법 시행규칙의 통계작성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각각 별지 제7호, 제8호 서식)와 더불어 ‘공동작성통계 기관간 역할분담 기술서’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공동작성통계 관리 사전 협의는 공동작성통계의 주기관과 부기관은 공동작성 역할 분담, 통계결과 공표관리 및 미공표승인, 자료 제공 범위 결정, 사전 제공 여부 및 제공 대상결정 등 통계 관리 전반의 의사 결정 시 반드시 상호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행정적인 신청절차가 필요한 경우 주기관을 통하여 실시한다. 자료 수집 등 외부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문 발송 시 공동 명의로 발송하는 등 긴밀히 협업한다.

공동작성 필요성 재평가 경우에는 필요시 승인기준 적합여부 등 공동작성 필요성을 재평가하여 실질적으로 통계작성에 기여하지 않거나 사전협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단일작성기관 통계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공동작성기관 간 협의를 되지않거나 주요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통계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승인신청에 대한 결과통보 및 고시 중 승인 처리기간 내 승인여부 결정과 문서에 의한 통보 및 고시한다. 고시는 매주 1회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정책정보-법령자료-고시)]에 게재된다.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④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한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등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계법 시행령 제24조(통계작성의 승인의 신청 및 승인) ④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를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통

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법 제18조 제4항에 따른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계의 명칭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3. 통계작성승인번호
4. 통계작성의 목적
5. 통계작성의 대상
6. 통계작성의 주기
7. 통계작성의 방법

나. 통계작성승인 추가 요건

기승인된 통계와 유사·중복 통계가 아니어야 하고, 작성하려고 하는 통계가 통계법 시행령 제2조 (법 적용 대상이 아닌 수량적 정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 통계법 시행령 제2조 (법 적용 대상이 아닌 수량적 정보)

통계작성기관이 대외적인 공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업무 추진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를 원활하게 작성하기 위한 사전 준비 또는 사후 확인과정에서 통계작성대상이나 절차 또는 방법 등의 적합성 및 타당성, 오차의 발생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통계작성기관에 소속된 직원이 개인적인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연구 논문이나 보고서 등에 수록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통계작성기관이 일상적인 업무수행의 추진 및 관리·감독을 위하여 하부조직, 소속기관, 산하기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보고받거나 제출받은 현황, 실적 등의 자료를 집계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통계작성기관이 그 소속 직원이나 회원, 이해관계자, 서비스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업무 추진성이나 계획에 관한 만족도 등 주관적인 인식이나 의식 또는 의견을 조사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그 밖에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나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 사회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수량적 정보

1) 통계작성 승인제도의 취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통계작성의 효율성, 신뢰성, 공공성을 확보한다.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통계표 서식, 조사사항의 성별 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통계작성 승인 및 취소 요건

승인 요건으로 기승인 통계와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고, 통계의 신뢰성이 확보되며, 공공의 이익을 목적인 요건으로 충족해야 한다.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③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미 승인을 받은 다른 통계와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목적 및 방법 등 그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표본규모가 지나치게 작거나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 또는 목적 등이 특정 이익집단 또는 특정부문에 편중되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작성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3) 승인대상과 협의대상 구분

승인은 새로운 통계(통계법 적용 대상 통계)를 작성하고자하는 경우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통계법 제18조 제1항), 협의는 다른 법률에 따라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통계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중 그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다른 법률에 통계작성을 강행규정으로 명시한 경우 협의통계이며, 임의규정(~할 수 있다)으로 되어있으면 협의통계가 아니며, 법률에 직접근거 없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에 통계작성 근거가 있는 통계는 통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승인을 받아야 한다.

통계법 제20조(통계작성의 협의)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중 그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항을 변경하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통계작성 승인(협의) 사항

명칭, 종류, 목적, 사항, 대상, 기준시점, 기간, 주기, 방법, 자료수집체계, 분류, 기준, 조사표, 보고서식, 공표서식, 국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협의사항으로는 통계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중 그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통계법 제20조제1항)을 볼 수 있다.

통계법 시행령 제25조(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법 제18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통계의 명칭 및 종류

통계의 작성 목적

통계작성의 사항. 다만, 작성의 사항이 자연인이면 성별 구분을 포함하되, 통계청장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성별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별구분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통계작성의 대상. 다만, 작성의 대상이 자연인이면 성별 구분을 포함하되, 통계청장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통계 방법상의 한계로 성별 구분이 곤란하거나 그 내용상 성별 구분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별 구분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통계작성의 기준시점·기간 및 주기. 다만, 조사통계의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간 대신 통계조사 기간을 적는다.

통계작성의 방법

자료수집 체계

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법 제22조에 따른 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

조사표, 보고서식 및 통계표 등 통계의 작성이나 공표와 관련된 서식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 준수 여부(기준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미디어리터러시에 대하여 국가승인통계로 연계되기 위한 절차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오늘날 미디어는 점점 더 우리 일상으로 빠르게 스며들고 있다. 다양한 미디어 매체 등으로 인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새로운 매체에 적용된 기기는 짧은 기간에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이용하고 있다. 특히, 유례가 없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미디어의 수용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짐에 따라 다양한 미디어는 우리 일상에서 여러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을 넘어 파격적인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흐름에 맞춰 통계적인 관점에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대전환기를 살아가며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혁신적인 변화는 한편으로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 이면에 세대의 차이, 빈부의 차이, 교육의 차이로 인한 리터러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세상에서 누구나 혜택을 맡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나, 반면에 누군가의 삶의 질은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이제는 더이상 디지털 리터러시의 격차 문제를 개인 차원이 아닌, 전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와 자료 및 정보 문해 능력 측정용 도구를 개발하는 등 국민의 정보 문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가승인 통계로 가기 위해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자체적으로 통계를 생산하고 해당 통계는 개방 차원에서 국가공식통계 포털인 공공데이터 포털에 제공하고 있다. 모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 혹은 민간이 활용하라는 차원이다. 반면에 「데이터기반행정법」은 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다른 기관에 어떻게 줄 것인지와 다른 기관의 데이터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를 정하고 있다. 각 기관끼리 데이터를 주고받고 공동활용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행정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본 절의 국가승인 통계를 통한 정책적 함의는 승인을 위한 사전 조건들을 탐색해본 데 있다. 데이터의 연계·결합 활용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포현한 데이터를 파악해야 한다. 이는 향후 데이터 기반의 시행 과정에서 데이터 및 관계도를 구성·관리하는데 있다. 또한, 연구자나 실무자들이 기본 통계를 데이터화 함으로써 활용 가능성과 연결성을 높일 것을 기대한다. 한편 데이터를 기초로 통계별 연계·결합 가능성을 검토 및 통계주기의

불일치, 세부자료의 부재, 활용 불가 등의 한계를 확인했다. 따라서 데이터 기반 시행에 따른 통계의 연계관리를 위해 추후 준비할 시기임은 분명하다.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우리나라와 개인의 미디어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 승인절차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향후 미디어리터러시 국가승인통계의 연계·활용을 위해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위해 각 통계자료의 포괄범위(일반정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표주기(년, 월, 일), 시계열 등은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는 다양한 통계정보의 연계·활용을 위해 국가승인통계의 세부 절차와 자료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통계정보 분석을 위해 전문가들 인터뷰의 선별 작업이 추가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통계청의 세부자료에 대한 공개 범위 및 제공 방법 등과 관련해 체계적인 연계가 필요할 것이다.

본 절은 우선 미디어 분석을 통계 검토와 연계를 통한 선별 및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기존 데이터가 갖는 연계·활용의 시사점을 점검하였다. 미디어 데이터 기반을 통한 국가승인통계가 되기 위한 극복 방안을 검토해야만 추후 결과 해석을 부여할 수 있겠다. 본 과제를 바탕으로 통계 관련 기관들이 데이터 기반에 대한 미디어리터러시의 활용 방향을 본격적으로 가늠해 보는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

2.3장을 토대로 그간 국내외적으로 논의된 미디어리터러시와 관련하여 수준 평가 및 측정에 대해 사용역량 및 확립의 개념 연계가 필수적이다. 또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국가승인통계로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정보격차 중 지수 이용능력 수준을 측정하여 이와 관련된 이용자들의 미디어 이용 행태 변화를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분석은 미디어 지수는 리터러시의 통계 승인 개선을 위하여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추후 승인통계 시 확연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주요한 시사점이라고 볼 수 있겠다.

제5장 실증 분석

본 장은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조사를 국가승인통계로 추진하기 위한 실증적 차원의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미디어 관련 통계 가운데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받은 사례를 선정해 분석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미디어패널조사,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미디어이용행태조사를 사례로 선정했다. 각각의 통계조사는 정책당국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읽는 통계를 개발하고 발전시킬 필요에 따라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조사를 체계화한 뒤, 국가통계로 승인받고 통계분석 결과를 활용해 정책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맥락을 공유하고 있다. 본 장은 이와 함께 논의의 깊이를 더하고 누수되는 영역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주제와 깊이 연관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구하는 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시사점과 함의 추출 역시 시도한다.

제1절에서 다루될 사례로 우선 한국미디어패널조사(이하 패널조사)는 2010년 9월 통계청의 승인 고시를 받은 조사통계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통계작성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패널조사는 방송 다매체화 속 미디어 기기 이용에 대한 통합적 고려에 대한 기초 정보를 획득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에 따라 개발되었다. 시장 통계조사 결과를 비롯한 다양한 분석 리포트를 제공함으로써 정책고객의 통계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설문 개선과 조사 방법 개선 등을 통해 응답 편의성을 높이는 변화를 적극 시도하고 있어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판단했다.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이하 격차실태조사)는 지능정보화기본법 제67조 및 관련 시행령에 의거 2006년 통계청의 승인 고시를 받았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통계작성기관이며, 정보격차 해소 정책 수립과 추진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책적 근거가 되는 국가승인통계이다. 특히 취약 계층 및 소외 계층의 정보화 수준을 연 단위로 계량화하여 측정, 평가함으로써 정책의 기초자료이자 효과적인 정책 추진 방향의 지표가 된다는 데 그 의의가 크다. 격차실태조사는 미디어 환경 변화를 추적하는 통계의 시대상 반영과, 조사 모집단 추출에서의 표본 구성 그리고 표집에 대한 함의를 시사점으로 발굴해 본 연구 목표의 효율화 과정에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이하 행태조사)는 다양한 매체 이용자들의 시청 행태와 인식 변화를 정기적으로 추적할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조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08년 통계청의

승인을 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사를 통해 도출된 분석결과는 정부 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방송 유관 기업체의 경영 계획 수립 등에도 보탬이 되고 있다. 2000년 TV 시청행태 연구를 시작으로 변화해 온 행태조사는 최근 OTT 플랫폼의 등장 등을 복합적으로 추적하고, 동시에 해외 유사 연구와 비교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이 있다.

제2절은 미디어리터러시 관련 연구자 및 정책 전문가를 비롯해, 국가승인통계 관련 정책 담당자와 통계 연구자, 정책 실무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수행한 결과를 다룬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디어리터러시 전문가와 통계 전문가 두 유형으로 대분류한 뒤, 학계 전문가와 업계 실무자로 구분해 질문 문항을 각기 다르게 구성하여 대면 및 서면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를 제시한다.

인터뷰 내용은 미디어리터러시 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조사 구성과 분석 개선에 대한 제언을 청취하고, 정책적 활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표준화된 통계 수립과 국가승인통계 추진의 당위성을 청취하는데 주로 할애 됐다. 분석 결과는 정책 추진의 한계, 국가 승인통계 추진의 당위성과 요건, 정책적 함의와 한계 등으로 구분지어 제시함으로써,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조사가 취할 수 있는 시사점과 함의를 구체화했다.

제1절 국가승인통계 운영 사례 분석

1. 한국미디어패널조사

가. 국가승인통계 추진 배경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 미디어 시장과 환경을 규정짓는 키워드는 다매체 다플랫폼이었다. 정책당국은 특정 시점의 미디어 이용행태 조사를 통한 정책 추진만은 당시의 현상을 규정짓고 시장과 정합성이 높은 정책을 펴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가구 및 개인의 미디어 이용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하고 계층, 지역별 미디어 이용행태의 차이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웠던 탓이다. 또한 방송과 인터넷, 통신이 융합되면서 상호연관성과 대체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종합적으로 미디어 이용행태를 살필 수 있는 자료 및 조사가 부재했던 것도 한 원인이었다. 정책당국은 이와 같은 변화된 환경을 고려해, 종단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미디어 이용행태를 살필 수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패널조사는 다매체화라는 미디어 시장의 전향적 환경 변화 속에서 신문, 방송, 인터넷, 휴대전화 등 다양한 미디어 기기의 이용 현황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시계열적 통계의 필요성에서 탄생했다. 따라서 패널조사는 다매체 시대의 함의 그리고 미디어 시장 동향과 작동 기제를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지표와 통계측정 틀을 제시하고자 했으며, 종단연구를 통해 미디어 보유, 이용, 방송통신부문 지출현황에 대한 보다 풍부하고 입체적인 자료를 축적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패널조사는 현재 방송 및 뉴미디어 사업자, 시장 통계조사 결과 및 분석 리포트를 정보제공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며,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통계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아울러 연구의 주요 기초자료로서, 방송 및 융합 서비스, 정보격차 등 다양한 연구에 활용되며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패널조사는 최근 단말기, 플랫폼, 콘텐츠 패키징 방식에 따라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이용이 가능한 방송통신 융합 및 다매체 환경이 가시화되면서 크로스-미디어 이용행태를 측정할 수 있는 통계지표 개발에 대한 필요까지 충족시키며 그 영역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나. 조사 수행 및 개선과정

패널조사는 2010년 9월 15일 통계청으로부터 국가승인통계로 승인 고시를 받았다. 2010년 승인 당시엔 서울·수도권을 포함한 6대 광역시(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부산)에 거주하는 총 3,085가구 및 만 6세 이상 가구원을 조사 대상으로 조사가 시작되었다. 이후, 2011년에는 조사 대상을 전국 16개 광역시도(제주까지 확대하여 5,109가구 및 해당 가구원의 만 6세 이상 가구원)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2012년부터는 2011년 구축된 전국의 5,109개 패널 가구와 해당 가구 내 만 6세 이상 가구원 1만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이와 동시에 기존 이탈패널에 대한 접촉을 병행하여 추적 조사가 시행되었다. 통계작성승인번호는 제40501호(2010년 9월 15일 기준)에서 405001호로 변경되었다.

패널조사는 패널조사의 특성상 통계의 개념, 설계, 표본 특성, 가중치 부여 방식 등에 대해 일관된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산업의 변화 및 미디어 이용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 매년 설문 내용을 개선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설문 항목을 개선함으로써 시대에 맞는 유의미한 조사 결과를 얻고자 하고 있으며, 이전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응답자의 응답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정확한 데이터 수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구 설문은 2015년(6차년도)까지 종이 설문지를 사용하여 진행되었다. 이후 가구설문 문항의 변화로 인한 시계열적 데이터 관리 용이성 및 응답자의 응답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5년 조사 중 일부 가구에 대해 컴퓨터를 활용한 조사방법(CAPI, Computer-Aided Personal Interview)을 도입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응답 편의성과 정확도가 상승한 결과를 확인한 뒤, 2016년부터는 가구조사에 대해 전면적으로 CAPI 조사방식을 채택하였다.

2017년에는 CAPI 프로그램의 인터넷 연결 안정성을 확보하고 조사 진행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온라인 방식의 CAPI 프로그램을 오프라인 기반의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였다. 동시에 응답자 중심의 CAPI 설문 화면을 구성하여 응답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응답자 중심의 CAPI 설문 화면을 통해 응답자의 스마트폰 연동 기기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다이어리 응답 방식의 경우, 2011년부터 B4 크기의 흑백 인쇄에서 A3 크기의 컬러 인쇄로 변경하여 부정확한 기재로 인한 오류를 감소시켰으며, 동시에 보기 카드와 다이어리 기입란을 양면에 제시하여 응답자가 응답 보기를 보면서 정확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지면 구성을 개편하였다. 2013년부터는 기존의 9가지 대분류 매체별로 행위 및 연결 코드를 입력하는 방식에서 시간

대별로 이용 매체와 행위, 연결코드의 세 가지를 한꺼번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주된 이용매체 및 동시에 이용하는 매체까지 응답받을 수 있는 형식으로 개선되었다. 이로써 시간대 별로 여러 가지 매체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미디어 수용자의 특징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불필요한 응답 지면이 축소되면서, 응답자의 응답 부담도 경감되었다. 이는 국가승인통계 승인 요건을 밝힌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변경을 협의하여 적용한 결과이며, 제21조의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통계 작성의 필요성을 일정부분 반영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통계청의 6가지 품질 진단 차원에서 관련성, 즉 이용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적절한 반영이 이루어진 변화다.

다. 정책적 활용 및 기여

패널조사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미디어 이용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가구 및 개인 단위로 추적하여, 중장기적인 추이를 파악하는 국내 유일한 기초 통계다. 2010년 국가승인통계 추진 당시, 다양한 미디어 기기의 이용에 대한 시공간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통계가 시대적으로 요구되었다. 특히 특정한 시점에서의 횡단면 미디어 이용행태 조사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용행태 변화를 추적하기 위한 동일가구/이용자 추적과 변화 분석을 통한 패널데이터 구축이 필요했다. 무엇보다도 국가통계로서 미디어 관련 조사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측정방법론 정립을 통해 그간 과소, 과대 측정되는 미디어 이용 현황을 파악하는 적절한 지표와 통계측정틀을 제시하는 종단적(longitudinal) 연구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이 조사가 취하고 있는 구조적 특징은 C-P-N-D (Contents - Platform - Network - Device)로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 생태계의 특성을 적극 고려하는 것이다. 변화된 환경 속에서 이용자들의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를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그 변화를 포괄적으로 살피면서 다양함 함의를 추출하고 있다. 이는 중장기적인 미디어 정책 수립의 근거이자 학술적 자료로서 적극 기여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미디어 관련 정책 기관들은 미디어 패널조사 결과를 정책 기획 및 입안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디어 이용자들의 행태 및 지출 변화를 계속해서 관찰하고 정책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패널조사는 주기적인 데이터 제공과 학술대회를 통해 학계의 미디어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의 내부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데도 활용되고 있다. 방송 및 미디어 환경이 관련 이용자 행태에 미치는 중장기적인 효과를 분석하여 한국 사회의 미래 연구에 기여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010년부터 구축된 패널조사의 연구 결과를 관련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그리고 정책당국에 제공하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패널조사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한국미디어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학술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원시자료에서 발견된 데이터 오류를 수정하며, 통계 이용에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설명과 분석 결과에 대한 설명 등과 같은 문의 사항을 접수, 처리하고 데이터 처리 과정의 오류를 광범위한 피드백을 통해 바로잡는 활동도 전개한다. 이 과정에서 조사결과 및 원시 데이터에 대한 관리 및 신뢰도는 크게 향상되고 있다. 이는 국가승인통계로서 패널조사가 취하고 있는 협력적 관계를 통해 통계조사가 적극 활용되도록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승인통계 유지관리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조사가 승인통계화 되는 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매우 유의미한 시사점이 될 수 있다.

2.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가. 국가승인통계 추진 배경

격차실태조사는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야기되는 디지털 격차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효과적인 정보격차 해소 정책 수립과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지능정보화기본법 제67조(연차보고 등) 및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54조(실태조사) 등에 의거 추진되고 있다. 격차지수 조사 역시 국가승인통계로서 통계법 제15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및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등에 따라 통계청으로부터 통계작성기관 승인을 받아 조사가 수행되고 있다.

격차실태조사는 정보 접근, 역량, 활용 부문별로 일반 국민과 취약계층 간의 상대적 정보격차 수준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 출발했다. 정보화의 속도가 가파르고, 이를 따르는 과정에서 계층간 격차가 심화돼 정보화에 따른 편익이 고루 확산되지 못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통계 조사가 부재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당초 통계조사는 2002년 취약계층 대상 정보격차 실태조사로부터 출발했다. 그 대상은 장애인, 저소득층, 고령층, 농어민이었으며, 제주를 제외한 전국 계층별 각 1,000명을 대상으로 대인면접 조사를 수행했다. 2003년에는 정보격차지수 개발되었으며, 2004년에는 정보격차 실태조사를 통해 정보격차지수

를 매년 산출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아울러 2004년을 기점으로 제주를 포함한 전국 계층별 각 1,000명과, 전체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병행했다.

격차실태조사는 현재 정보격차지수를 도출하는 데 집중한다. 무엇보다도 소외계층의 정보화 수준을 연간 단위로 계량적으로 측정, 평가함으로써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기초자료이자 효과적인 정책 추진 방향 도출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일반 국민과 소외계층 간 상대적 정보격차 수준을 비교하는 정보격차지수를 시계열적으로 산출함으로써 정책 목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정책지표로 활용된다. 정보격차지수는 「지능정보사회종합계획」의 성과지표로서 연간 단위로 산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연단위 조사로 이루어진다. 시계열적 조사·분석을 통해 디지털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연간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효과적인 정책 추진 방향 도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나. 조사수행 및 개선 과정

격차실태조사는 2006년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었다. 2007년에는 일반국민 및 4개 취약계층 대상의 조사를 매년 추진하였으며, 2008년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의 정보격차해소 부문 성과지표로 정보격차지수를 지정했다. 이를 통해 국가승인통계로서의 정책 활용의 근간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2011년에는 신정보소외계층(북한이탈주민 및 결혼이민자)을 조사대상에 추가하였으며, 2012년 모바일 격차지수 개발, 2013년 스마트 격차지수를 개발하는 등 지수화에도 주력했다.

개발된 지수는 2014년부터 스마트 격차지수(신 정보격차지수) 적용 및 시범 발표로 이어졌으며, 2018년에는 디지털정보격차지수(PC + 모바일)를 공식 산출하고 공표하며, 통계승인번호 변경 절차까지 진행되었다. 아울러 일반국민 및 정보취약계층별 표본 재설계도 이루어졌다. 2019년에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거 장노년층에서 고령층으로 명칭 변경을,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 문항을 추가하는 등 시대의 변화에 따른 용어와 문항 추가 등을 지속해왔다. 2021년에는 조사방법 TAPI(Tablet PC Aided Personal Interview)를 도입했으며, 2022년 디지털 대전환 관련 문항을 추가하는 등 변화하는 사회와 기술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 및 개선해 왔다.

한편 격차실태조사는 모바일 기반 유무선 융합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정보격차의 수준 및 특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부문별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다.

우선 디지털정보화 접근 수준은 ‘유무선 정보기기 보유 여부’와 ‘인터넷 상시 접속가능 여부’ 등 2개 항목으로 구성한다. 이어서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은 ‘PC 이용 능력’과 ‘모바일 기기 이용 능력’ 등 2개 항목으로 조사한다. 끝으로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은 ‘유선 및 모바일 인터넷 이용 여부’,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 ‘인터넷 심화 활용 정도’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그 가중치는 4:4:2로 설정돼 있다.

세 부문 가운데 디지털정보격차지수는 PC 기반의 유선인터넷 이용환경에서 모바일 기반의 유무선 융합 환경의 도래와 함께 새로운 정보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되었다. 해당 지수는 정보격차를 더 정확하게 측정하고 분석하기 위한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PC 기반의 정보화 수준을 측정하는 기존 정보격차지수는 유무선 융합 환경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스마트폰 등 무선 기기의 확산으로 인해, 정보화 수준을 더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수요와 새로운 도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과 PC를 통한 다양한 개인적·사회적 가치 창출 여부를 고려하여 지수를 설계했다. 단순한 인터넷 접속 및 이용 정도를 넘어, 유무선 초고속 인터넷 융합 환경에서의 다양한 개인 및 사회적 활용성을 측정하고 있다.

디지털정보격차지수는 일반 국민의 정보화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소외계층과 상대적 정보격차 수준을 지수화하고 있다. 이 지수는 0 ~ 100점의 범위를 가지며, 0점에 가까울수록 정보격차가 작은 것을 나타내며, 접근, 역량, 활용 등 3개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과 값은 일반국민 및 4개 소외계층(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고령층) 대상의 연간 단위 실태조사를 통해 산출된다. 정보격차에 대한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일반국민과 소외계층 간 격차를 연속적으로 추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격차실태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서, 계층별 목표 모집단과 조사 모집단 구성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우선 목표 모집단으로서 일반국민은 전국의 만 7세 이상 인구(만 55세 이상의 고령층 2,300표본 포함)를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은 전국의 만 7-69세 등록 장애인(지체·뇌병변·청각/언어·시각장애유형 기준), 저소득층은 전국의 만 7-74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목표로 한다. 농어민은 전국의 만 15세 이상 농어업 종사자(경제활동인구 연령층 기준), 북한이탈주민은 전국의 만 7세 이상 북한 출신 한국 국적 취득자(하나원 퇴소자 기준), 결혼이민자는 전국의 만 18세 이상의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혼인 적령 연령층 기준)을 대상으로 삼는다.

조사 모집단은 2022년 8월 1일 현재 전국의 가구 내 상주하는 만 7세 이상 가구원을 일반국

민으로 삼고, 2022년 8월 1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전국의 만 7~69세 장애인 (지체·뇌병변·청각/언어·시각장애유형 기준)과 2022년 8월 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등록된 전국의 만 7~74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저소득층, 2022년 8월 1일 현재 경제활동인구 기준에 부합하며, 전국의 농어기(전업·겸업)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농어업 종사자를 농어민, 2022년 8월 1일 현재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전국의 만 7세 이상 북한 출신 한국 국적 취득자를 북한이탈주민 조사 모집단으로 삼는다. 끝으로 결혼이민자는 2022년 8월 1일 현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국인과 혼인한 전국의 만 18세 이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 정책적 활용 및 기여

격차실태조사는 국가 디지털 정책의 기초자료이자 사회 변동의 지표로 활용되며, 학술적 용도로도 사용된다. 이는 격차실태조사의 국가승인통계 추진 배경과도 직결된다. 정보격차의 심화 속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연간추진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책통계가 사회적으로 요구되었으며, 그 결과로 격차실태조사가 국가통계로 추진, 승인된 것이다. 2002년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보격차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실태를 분석할 다차원적 개념의 계량지수를 개발한 결과 지금의 격차실태조사이며,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우선 정책 기초자료로서 정보기술의 고도화에 따라 변화하는 정보격차(Digital Divide) 현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수립을 위한 자료로 쓰인다. 또한, 사회지표로서 변동을 측정하는 데 쓰인다. 이를 통해 국가정보화기본계획(2009-2014년)의 정보격차해소 부문 연간 성과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지능정보사회종합계획(2021년)의 정보격차해소 부문 연간 성과지표로 활용된 바 있다. 학술 분야에선 정보 접근, 역량, 활용 부문별 일반국민과 취약계층 간 상대적 정보격차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 분석할 수 있는 다차원적 개념의 계량지표로 자리매김했다.

격차실태조사가 정책당국에 의해 활용되는 이밖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외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정책효과 측정에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의 정보격차 원인을 파악하고, 주로 사용하는 지능정보서비스를 분석하여 보조기기 보급, 디지털역량강화 방문 교육 등을 실시하는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도 긴요하게 쓰인다.

대학 및 연구소는 정보격차 연구를 국제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정책개념의 이론화 및 방법론 개발을 위한 연구 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석박사 학생들이 논문을 작성할 때 사용되며, 사회복지학, 행정학 교수 등 전문가가 장애인에 대한 정보격차실태 연구자료로 활용하여 관련 내용을 학계에서 보고하고 있다.

한편 일반국민과 소외계층 간 상대적 정보격차수준을 측정하는 정보격차지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산출하고 있는 선도지표다. 이로 인해 국제적으로 비교하거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유사 지표는 부재하다.

3.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가. 국가승인통계 추진 배경

행태조사는 TV와 라디오, PC, 스마트폰 등 다양한 시청취 매체에 대한 이용자의 시청행태와 인식의 변화를 정기적으로 분석하는 목적을 지닌다. 특히 스마트기기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활성화로 변화된 방송 매체 환경에서 해당 매체들이 이용자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인식되는지를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과거 조사 자료와 연계 분석을 통해 매체 이용행태 변화와 흐름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태조사는 여타의 미디어 관련 통계조사와 차별성을 지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행태 조사의 시작은 2000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TV 시청행태 연구』라는 명칭으로 제1회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서울 지역 13세 이상 1,000명의 표본을 조사했다. 이듬해인 2001년 7월 7대 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로 조사 지역을 확대했다. 13세 이상 69세 이하 1,000명의 표본을 조사했다. 2002년 8월에는 표본 규모를 확대하여 전국 7대 도시 13세 이상 69세 이하 1,200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후 표본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 2007년 표본 규모를 전국 13세 이상 69세 이하 3,000명의 표본으로 확대한 뒤 2008년 10월 제9회 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통계청의 국가통계 승인(2008. 10. 14)을 받았다. 추진배경은 앞서 언급한 필요성과 함께 정책적 활용을 위해 지속 조사를 통한 통계의 신뢰도 및 일관성 확보라는 정책 수요가 작용한 결과였다.

행태조사는 현재 모바일 시청과 VOD 이용의 확대에 의한 능동적, 선택적 시청행태의 변화와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이용에 대한 행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기도 하다. 궁극적으로 프로그램 시청방식의 다양화가 수용자의 방송매체 이용행태와 매체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 조사 수행 및 개선 과정

행태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서 승인된 후, 2009년 6월 첫 조사를 수행했다. 이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라는 명칭이 확립됐을 뿐만 아니라 전국 3,359가구 만 13세 이상 가구원 전원 조사 형태로 확장된 형태로 수행되었다. 2012년 5월 수행된 조사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를 기반으로 표본을 재설계하여, 전국 3,453가구 만 13세 이상 가구원 전원 조사를 수행했다. 이어서 2022년 6월 제 23회 전국 4,287가구 만 13세 이상 가구원 전원 조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조사를 수행해오고 있다. 행태조사는 매해 6월에서 8월 사이, 두 달여 간 제주를 포함한 전국 총 4천여 가구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6,7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조사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일대일 개별면접 조사방식을 따른다. 표본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기반한 조사구 선정 및 가중치 산출을 따른다.

설문은 가구 설문과 개인 설문지를 별도로 구성하여 진행되며, 매체 이용에 대한 행태조사인 만큼 보유한 매체, 이용하고 있는 방송서비스의 가입 현황을 파악하고, 가구원이 함께 쓰는 매체일 경우 대표 1인이 응답하는 식으로 질문과 구성을 정교화한다. 가구 설문에서는 그 특성상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매체 이용에 대한 질문도 포함된다.

개인 설문은 매체 이용빈도, 행태, 인식, 의향 등을 중심으로, 13세 이상 가구원 전원에게 질의한다. 개인 설문은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매체 이용 시간에 대한 미디어 다이어리(Media Diary) 분석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개인의 시간대별 매체 이용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미디어 다이어리는, 각 매체 이용 시간을 20분 간격으로, 집 안과 집 밖에서의 이용 현황을 스스로 기입하여 보고하는 형태이다.

매년 외부 전문가와 방송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계 품질을 개선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예컨대 2019년에 실시된 전문가 의견 수렴 현황에서는, OTT 문항 확대 변경 등 미디어 환

경의 변화에 맞추어 가구 설문 1개 및 개인 설문 6개 문항 개선을 제안했으며 이에 따라 문항의 기술방식, 추가 문항, 삭제 문항 등이 이루어졌다. 외부 전문가와 유관기관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 조사표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미디어 환경의 동향에 부응하도록 조사 내용이 조정된다.

이에 따라 미디어패널조사와 같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는 신규 문항들이 추가됐다. 매체 차원에서는 대표적으로 가구 설문에서 ‘빔프로젝터’ 보유 여부를 질문하거나, 유료 OTT 이용 의향을 개인에게 질문하는 부분이 있으며, 사회 환경 변화 차원에서는 코로나19 관련 매체별 수집 정보의 신뢰도 문항들을 2021년 추가된 사항을 빼는 등의 세부 사항 조정이 있었다. 이는 승인통계의 주요 요건인 관련성 차원과 함께 정확성, 시의성 등의 맥락에서도 유의미한 대응이라 할 것이다.

다. 정책적 활용 및 기여

행태조사는 방송매체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과 시청 행태의 변화를 추적하고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수용자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개별 방송사의 경영전략 수립 및 학계 및 연구소의 학술 연구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우선 정책당국의 정책 수립에 있어서,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 기관에서 방송매체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과 시청 행태 변화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방송 및 통신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해당 통계를 활용한다. 또한, 수용자의 선호도, 시청 패턴, 다양한 매체 이용에 대한 인식 등의 정보를 토대로 방송 관련 정책의 성과를 측정하고 필요한 정책 수정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행태조사 결과 중 1인 가구의 매체 보유 환경과 이용 특성 부분을 분석해, 매체 이용의 변화 트렌드를 탐색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1인 가구로서 능동적 미디어 이용자 특성에 대한 보고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의 연구자료 공유를 통해 관련 정책 수립과 환경 이해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학계 및 연구자들은 방송매체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과 시청 행태의 변화에 대한 분석 결과를 논문 작성이나 강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해당 자료를 통해 방송매체의 동향, 수용자 행태의 특성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며, 학문적인 이해와 지식 확장에 기여하고 있다.

끝으로 방송사업자, 언론사, 광고회사 등 산업 관계자들은 수용자의 인식과 시청 행태 변화에 대한 정보를 경영 및 전략 계획 수립에 활용한다. 통계조사는 매체 전략 수립, 광고 전략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시장 트렌드에 따라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데에 쓰인다.

기관, 학계, 업계를 아우르는 행태조사의 원활한 활용은 2018년 구축된 방통위의 방송통계포털 시스템을 통해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기초 데이터를 포함한 인포그래픽 등을 제공해 기관과 언론사 등이 조사를 활용할 수 있는 손쉬운 길을 열어두었다. 매체조사를 포함한 방송산업 전반에 대한 통계를 해당 포털을 통해 다양한 이용자와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두어, 정책과 전략의 수립에 있어 근거와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한편 세가지 국가승인통계 운영사례 분석을 통해 다뤄진 주요 사항을 압축적으로 정리한 것이 다음 <표 5-1>이다.

<표 5-1> 기존 국가승인통계의 특징과 시사점

	한국미디어패널조사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조사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통계청 승인 고시 - 통계 작성 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 미디어 기기 이용에 대한 통합적 고려 - 가구 면접원 방문 조사(2016년 CAPI 도입) - 개인 설문지 및 미디어 다이어리 유치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 통계청 승인 고시 - 통계 작성 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정보기술 고도화 속 정보격차 파악 - 가구 방문 구조화된 설문 대인 면접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통계청 승인 고시 - 통계 작성 기관: 방송통신위원회 - TV 시청 행태 연구에서 출발 - 다양한 시청취 매체에 대한 수용자 인식 - 및 시청 행태 변화 추적
정책적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통계조사 결과 및 분석 리포트 제공 정부 정책 담당자 및 민간 기업의 통계 수요 - 매체 간 융합 시대 상호연관/대체 증대 종합적 검토 및 지출 변화 파악, 정책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격차 해소 정책 수립 및 추진 성과 평가 - 소외계층 정보화 수준 연 단위 계량화 측정 - 국가정보화기본기획(~'14), 지능정보사회종합계획('21~) 정보격차해소 부문 연간 성과지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방송매체 수용자 인식 및 시청행태 변화 중단적 추적 - 효율적 수용자 정책 수립 활용 - 방송사업자, 언론사/광고회사 경영 및 전략 계획 수립, 매체 전략 수립 기초자료 활용
미디어 리터러시 조사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설문 개선 (미디어리터러시 문항, PC/스마트폰 구분) - 조사 방법 개선(컴퓨터 기반 조사 변화) - 동일가구 이용자 행태 변화 추적하는 종단적 연구의 함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등 환경적 요인 분석 반영 - 정보격차 수준 종합 평가하는 지수 산출 - 특정 계층의 미디어 이용과 활용에 대한 모집단 추출 및 표본 구성 함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IT 문항 확대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전문가 의견 수립 및 품질 개선 -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유사 통계와의 비교 및 이용행태에 대한 인식 비교 및 국가별 수준 지표 도출

제2절 전문가 심층 인터뷰

1. 인터뷰 개요

가. 인터뷰 절차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조사가 안고 있는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기반 해 국가승인통계를 추진할 경우 풀어야 할 과제들이 무엇인지를 살피기 위해 전문가 대상 심층 인터뷰를 수행했다. 인터뷰 대상 집단은 미디어리터러시 연구 및 실무 전문가와 통계 전문가로 나누었다. 연구 전문가의 경우 미디어리터러시 관련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통계 분야는 통계청 및 국가승인통계 관련 자문 및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를 추천받아 인터뷰 절차를 수행했다.

실무 전문가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으로 미디어리터러시 업무를 주관하는 시청자 미디어재단의 실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했다. 이와 함께 국가승인통계를 추진하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논의될 통계청의 실무적 사안들을 이해하기 위해 통계청 실무 담당자를 인터뷰했다. 또한, 미디어 관련 국가승인통계를 운영하고 있는 실무 담당자들 역시 인터뷰 대상자 군에 포함하여, 국가승인통계의 추진과 관리에 대한 실무적 사안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인터뷰 기간은 2023년 11월 3일부터 2023년 12월 11일까지였으며, 총 인터뷰 대상자는 13명이었다. 인터뷰 방식은 대면 및 서면 방식이 병행되었으며, 대상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평균 1시간이 조금 넘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는 인터뷰 대상자에게 질문지를 사전에 제시하여 해당 질문지를 중심으로 의견을 종합했다. 동시에 질문 과정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덧붙이는 반 구조화된 형태의 심층 인터뷰를 수행했다.

앞서 언급한 미디어리터러시 연구 및 정책 전문가, 통계 및 국가승인통계 담당 실무자를 포함한 총 13명의 인터뷰 대상자에 대한 특성과 조사 방법은 <표 5-2>와 같다.

〈표 5-2〉 인터뷰 대상자 특성

구분	소속	인터뷰 조사 방법
미디어리터러시 연구 전문가	대학	대면
	대학	화상
	연구소	대면
	연구소	화상
미디어리터러시 정책 전문가	시청자미디어재단	대면
	시청자미디어재단	서면
	시청자미디어재단	서면
	시청자미디어재단	서면
통계 연구 전문가	대학	대면
통계 실무 전문가	통계청	대면
	통계청	대면
국가승인통계 조사 정책 담당자	인론진흥재단	유선/서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유선/서면
합계	총 13명	

나. 인터뷰 내용

질문지 구성을 위해 3장에서 논의내용 즉, 기존에 수행되었던 미디어리터러시 관련 정책연구들을 검토하여 미디어리터러시 조사 전반과 개념, 분석 유목, 통계 인식과 국가승인통계로의 추진 등에 대한 쟁점들을 추출했다. 연구진과의 질문 구성을 위한 회의와 기 수행 연구에 참여한 연구 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거쳐 질문지를 구성했다. 질문지는 미디어리터러시 연구 전문가, 정책 전문가와 통계 전문가, 실무 담당자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질문과 내용으로 구성했다. 응답자의 편의를 위해 미디어리터러시에 대한 정의와 국가승인통계 개요를 사전 설명하는 장을 별도로 마련하였다. 미디어리터러시와 무관한 통계 전문가 혹은 국가승인통계 실무 담당자들에게는 미디어리터러시 관련 정보를, 국가승인통계에 대한 관점을 처음 접하는 미디어리터러시 전문가에게는 관련 내용을 소개하는 구성을 취했다.

수행된 인터뷰의 질문 영역과 내용은 〈표 5-3〉과 같다.

〈표 5-3〉 인터뷰 질문 내용

조사 영역	질문 내용
전문가/실무자의 미디어리터러시 조사 인식	현행 미디어리터러시 조사의 의미와 가치
	미디어리터러시 조사 구성과 핵심 요소
	미디어리터러시 정책 연계의 가능성과 한계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조사 구성과 분석 이해)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구성 이해
	측정 정교화의 선행 요건
	정책적 활용을 위한 분석 방안
전문가/실무자의 통계 인식과 국가승인통계 구성	통계 자료 활용의 의미와 가치
	국가승인통계 요건과 준비, 절차
	통계품질 진단 개요 및 보고 체계
	정책 연계를 위한 국가승인통계 구성
미디어리터러시의 국가승인통계 정책적 함의	통계품질 표준화
	승인통계를 위한 재구조화
	정책 로드맵 제언

2. 인터뷰 결과

가. 정책적 활용의 한계

미디어리터러시 조사의 일관된 수행과 이를 통한 정책에의 반영과 한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 미디어리터러시 개념 및 조사에 대한 입장과 논의를 살필 필요가 있다. 인터뷰 전문가 대상 중 미디어리터러시 연구 및 정책 담당 전문가들의 응답을 중심으로, 미디어리터러시의 개념과 조사에 대한 인식을 살피는 접근과 정책적 활용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한 검토 두 가지 측면을 아우르며 접근했다.

먼저 미디어리터러시 연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미디어리터러시 개념 합의의 필요성과 조사의 일관성 확보에 대한 논의를 확인하고자 했다. 아울러 미디어리터러시 정책 전문가들의 견해를 통해 정책적 활용의 현황과 그 한계를 확인하여, 개념 정립 및 통합적 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들을 살핌으로서 연구진이 추구하는 국가승인통계의 당위성을 얻고자 했다.

분석 결과, 미디어리터러시의 정책적 활용의 한계는 미디어리터러시 연구 및 조사의 파편화에서 기인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했다. 미디어리터러시 연구자들 간에도 개념 합의가 이루어지

지 못한 경우가 관찰되며, 연구 차원에서의 통합적 논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조사 역시 연구자마다 다른 관점에서 수행될 수밖에 없음을 한계로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표준화된 개념 정립과 통합적 연구 수행 없이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조사의 문제점을 짚었다. 조사의 반복적인 수행은 소모적인 형태로 귀결되며, 이는 결국 정책 활용에 있어서 낮은 성취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의견으로 귀결되었다. 다음은 인터뷰 대상자들이 언급한 조사의 반복적 수행과 그 한계를 정리한 것으로, 미디어리터러시 연구 전문가 및 정책 전문가 공히 해당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디어 영역이 계속 확장되고 있고, 리터러시에 대한 정의도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어, 미디어리터러시 지수를 개발할 때 객관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다. 미디어리터러시의 개념, 범위, 분류(리터러시 영역)에 대한 합의에 한계가 분명하지만, 필요한 지점이다.”(미디어리터러시 정책 전문가 3)

“제가 수행한 연구에서, 사회적인 합의로 된 미디어리터러시 지수에 대한 연구 방법론 부분이 빠져있었다. 저 같은 경우는 정책 사업을 목표로 좁은 의미의 미디어리터러시라는 개념을 포착해서 천착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개념들을 모두 포괄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미디어리터러시 실태조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비판적인 이해 능력인 건지 아니면 미디어에 대한 조정 능력인 건지 자기가 사용할 때의 그런 역기능에 대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보려고 하는 건지, 자기 표현 능력인 건지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개념화가 필요하다.”(미디어리터러시 연구 전문가 3)

“그간 미디어리터러시 관련 국내의 연구들을 보면 유의미한 결과를 많이 도출했지만 그 반면에 미디어리터러시 척도의 개발과 정교화에 노력하기보다 미디어리터러시 개념화와 그 구성요소를 밝히는 데 더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면이 있다. 이에 따라 미디어리터러시 연구의 경우 타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량적 연구가 폭넓게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해당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량적 수준이라 함은 ‘이용실태’ 정도다.”(미디어리터러시 정책 전문가 4)

응답자들은 개념적 차원뿐만 아니라 측정에서의 유목 구성과 역량 구분에 있어서도 이견이 존재함을 주장했다. 이는 연구별 미디어리터러시 역량의 유형 차이로 나타나며, 결과적으로 파편화된 연구로 귀결되어 일관된 정책 활용의 한계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미디어리터러시 측정 대상을 생애주기별로 ‘삶’의 방식에 따른 측정 할 것인지 또는 지역별로 미디어센터, 지자체 또는 교육청 단위 미디어교육을 시행하는 곳과 아닌곳으로 구분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미디어교육을 경험한 적이 있는 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을 구분할 것인지 또는 보편적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측정하는 도구 방식인지 등에 대한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다.”(미디어리터러시 정책 전문가 3)

“미디어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디어리터러시 측정 도구의 신뢰성과 범용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연구 결과의 한계로 인해, 미디어 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부분도 학계 등을 비롯한 곳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정부 부처 안에서 예산 심의 등 참고자료 정도로 활용되는 데 그친다.”(미디어리터러시 정책 전문가 2)

“미디어리터러시 교육과 관련된 정량적 연구를 수행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은 신뢰할만한 척도의 부재라고 생각한다. 미디어리터러시 관련 해외 척도의 경우 지나치게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여 점수를 산출하거나, 자국의 미디어 접근 또는 격차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를 그대로 가져와 국내의 미디어리터러시 소양을 다양한 관점에서 측정하는 것은 어렵다. 반면 국내 척도의 경우 다수의 연구에서 척도를 개발하고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였으나 척도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해당 척도를 통한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산출되지 않아 연구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미디어리터러시 정책 전문가 4)

종합하면, 기존에 수행된 미디어리터러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은 개념에 있어서 연구에 따라 상이함을 보였으며, 그에 따라 분석 유목 및 역량 유형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이로 인해 미디어리터러시 개념의 합의가 학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주지시켰다. 따라서

미디어리터러시 측정을 위한 역량 분류와 구성을 명확하게 수행하여, 일관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야 함을 주장했다. 궁극적으로 미디어리터러시에 대한 개념 및 분석 틀 합의를 구성하여, 현행 조사에 있어서 낮은 정책 활용과 소모적이고 파편화된 조사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을 살필 수 있었다.

나. 국가승인통계 추진 당위성과 요건

미디어리터러시 정책에서의 일관된 적용과 활용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 개념 합의와 역량 요소 및 측정의 일원화가 요구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국가의 승인통계로서 현행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조사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정책 담당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다. 앞서 정책 전문가 4가 밝힌바, 신뢰할 만한 척도가 부재한 상황과 덧붙여 기준이 되는 검증된 척도를 지속해서 분석한 데이터가 산출되지 않았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

미디어리터러시 조사의 신뢰 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측정 도구의 신뢰성 강화와 측정 방법의 적용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함을 응답자들은 강조했다. 특히 기존에 수행되어 온 미디어리터러시 역량 측정의 경우 설문조사 방식의 한계와 시청자미디어센터 10개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제한된 표집 등으로 인해 전국민적 역량 측정의 한계가 있음을 주지시켰다.

“현재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한 자기기입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다보니, 미디어리터러시 역량 측정에 한계가 있다고 여겨졌다. 국민 기초 미디어리터러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현황 파악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개별 방문 면접조사 방식 도입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만약 예산 및 조사원 교육 한계 등의 이유로 개별 방문 면접 조사가 어려울 경우, 객관식과 주관식 문항을 혼용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예: 사실과 의견 구분 가능 여부 관련 주관식 문항 신설 검토).”(미디어리터러시 정책 전문가 3)

“미디어리터러시라는 미디어 이용자의 이용 수준을 수량적 정보를 환산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한계가 있다. 리터러시 수준이라는 것은 응답하는 사람에 따라 자신의 위치는 인식하는 것이 다르고 자신의 리터러시 수준을 객관화시키기 매우 어렵다. 우리가

‘문해력’을 말하면서 국내의 결과보다 OECD의 PISA의 결과를 인용하는 것도 신뢰할 만한 측정 도구, 그리고 이를 측정하는 방법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한다. PISA에서는 아이들에게 자기입식으로 문해력 수준을 측정하게 하지 않고, 정교화된 문항을 측정을 하고 있어 이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미디어리터러시 정책 전문가 4)

“지수개발 시 연구 대상이 교육수혜자와 비수혜자로 구분할 것인지 교육수혜자가 교육 전과 교육 후를 비교할 도구 측정을 할 것인지, 그냥 범국민의 지역별로 조사를 할 것인지 등 ‘미디어리터러시 지수’의 기준점과 방향을 먼저 명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개발된 지수 측정 방식이 현장에서 또는 국가정책에서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미디어리터러시 정책 전문가 2)

추진할 수 있는 국가승인통계의 요건들은 통계 분야의 연구자와 정책 담당자들에 의해 정리되었다. 우선 승인통계로서 갖추어야 할 핵심 사안은 표본 설계가 가장 먼저 갖추어져야 함을 짚었다. 또한, 유사 통계와의 중복을 피하는 사안들을 검토하여 그 변별점을 명확히 드러내 보이는 절차가 통계청 제출 서류 및 연구 수행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사안으로 제시되었다.

“자료를 수집하는 연구의 본질적 특성상 표본 설계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지수를 만들기 위해서 조사 대상자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하기 위한 표본 설계가 핵심인 것이다. 통계가 계획된 대로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었는가 중요하기 때문에 확률 표본 설계라는 기본적인 틀 안에서 표본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본적으로 개인 단위 조사는 통계청에서 조사부 리스트를 받아서 조사부 추출하고 조사부 내에서 다시 가고 그다음에 가구원 추출하는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표본 설계를 해야 한다.”(통계 연구 전문가)

“조사 통계는 모집단을 어떻게 볼 건지 그러니까 전 국민을 대상이 될 것이다. 표본 설계를 해서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른 지수 산출이 연구 목표라면, 지수도 이제 단순 산술 평균으로 할 건지 아니면 가중치를 뒀서 할 건지 이런 것들도 결정해야 한다. 이

에 따라서 전반적인 조사 이 통계에 대한 기획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기획서가 먼저 제시되어야 것이 선결 조건이다. 무엇보다도 조사 통계니까 조사 표본 설계가 나와야 되고, (통계청 국가승인통계 제출에 요구되는) 7호 서식에 통계법 시행규칙 제7호 서식에 따라, 다시 말해 1호부터 8호까지 첨부 서류를 준비해 신청해야 한다.”(통계 실무 전문가 1)

보다 구체적인 국가통계 승인 절차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모집단 대표성을 갖춘 표본 추출을 위한 실무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 확률 표본 설계에 따른 조사구 리스트 추출 및 가구원 추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통계적 분석에 필요한 다른 변수들을 마련하고, 설문지 작성 등에 있어서의 문항 중복성 검토와 미디어리터러시 조사만의 특성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획과 논의를 확인해야 나가야 한다. 설문지와 그에 따른 통계 결과, 그 품질 검토 및 동의적 분산 등과 같은 통계의 기본 절차와 요건들이 갖춰질 때 승인 통계로서의 최소 요건을 확립하게 된다.

“통계청의 정책국에서 제출된 통계를 심의할 때, 관련 해당 분야의 표본설계 부분은 표본과 부서에 전달하여 표본 설계에 있어서 타당성을 검증한다. 이어서 실제 정책 승인을 주는 기관에서는 중복 여부, 즉 설문뿐만 아니라 조사 자체의 타 조사와 중복 여부를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이 통계가 얼마나 승인 통계를 받을 만큼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이를 위해서 통계청 미디어 관련 담당 및 주무부처의 기획안 제출 등이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통계 연구 전문가)

이 과정에서 표본의 대표성 확보 및 통계의 정당성 및 기획서 작성에서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통계 정책 전문가는 시험 조사를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표본 추출에서 조사 대상자 명부 확보를 위해서는 통계청과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 통계 승인에 준하나 다소간에 간략한 자료를 준비하는 시험 조사를 제출하여 통계청으로부터 관련 자료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조사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정교화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승인통계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시험 조사도 한두 번 수행한 후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시험 조사는 앞으로 하게 될 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조사에 쓰이는 명부를 받기 위해 일단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시험 조사의 경우 자세한 서류가 다 들어오지 않더라도, 1차 년도에는 시험 조사, 2차 년도에는 본 조사로 하겠다 라고 한다면 첫 회는 승인 신청을 위한 명분 확보를 목적으로 조사표, 표본 설계과 같은 사안들을 반영해나갈 수 있다.”(통계 정책 전문가 1)

결론적으로 국가승인통계 추진을 위해 크게 두 가지 사안을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첫째, 표본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학술적, 실무적 검토와 논의가 요구된다. 둘째, 유사 통계와의 비교에서 변별점을 명확히 하고, 통계의 의미와 가치를 명확히 드러내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분석 틀 구성과 합의된 미디어리터러시 역량 측정 분류를 구축하고, 미디어리터러시 지수의 기준점과 방향을 명확히 하는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 그 선결 과제들을 갖춘 후 국가승인통계에 요구되는 표본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조사 표본 설계를 명문화하고 학술적 검토를 통해 정당화해야 한다. 또한, 타 조사와의 중복 여부를 기존에 수행된 미디어 관련 조사들과 비교하고, 해당 항목들의 중복 여부와 분석의 변별점을 명확히 제시하여 국가승인통계 추진의 당위성을 확보해야 한다.

통계청의 승인을 위해서는 우선 표본 구성의 명부를 수령하기 위해 시험 조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조사를 위해 본 조사에 앞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1차년도, 2차년도 계획 등의 절차를 마련해 따른다. 시험 조사를 통해 확보된 조사표, 표본 설계 등을 본 조사에 반영할 때 국가통계로서의 승인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 정책적 합의와 한계점 제언

미디어리터러시 지수의 국가승인통계화는 궁극적으로 전 국민의 미디어리터러시 역량 평가와 더불어 관련된 정책 마련 및 활용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우선 국가승인통계 추진 및 실현 자체에서 오는 합의와 사회적 의의다. 미디어리터러시를 둘러싼 학계와 업계의 정책 담당자들의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예컨대 방송통신위원회를 주무부처로 하는 미디어리터러시 조사를 국가 차원에서 수행하여 제시한다면, 일반화된 통계로서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미디어리터러시 연구를 둘러싼 학계의 상반된 입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미디어리터러시 측정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것이 쌓여서 국가통계 등으로 발전해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보편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간 수행되어 온 많은 연구들이 난립되는 상황에서, 지수에 대한 단편적 내용, 문항에 대한 연구 별 구분 등을 극복하고, 국내 수준과 상황에 맞는 보편화도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측정 도구에 있어서도 유럽의 연구들을 인용하여 국내형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단편적으로 쓰인 부분이 많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 워딩 등을 변화할 필요성이 있다.”(미디어리터러시 정책 전문가 1)

“미디어리터러시 조사가 표준화한다는 의미는, 곧 국가 통계가 되면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측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미디어 교육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효과에 대한 연구는 밝혀진 바가 드물다. 그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국가 통계를 통해서 계속 보면 미디어리터러시 역량이 올라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효과가 측정이 된다 것, 그것 자체로도 국가승인통계의 정책적 합의와 학술적 의미는 크다고 본다.”(미디어리터러시 연구 전문가 1)

“미디어리터러시 국가승인통계는 기초 조사로도 의미가 있다. 예컨대 지역 간 격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줄 수 있다. 미디어리터러시가 개인의 역량과 사회 사회적 환경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맥락성이라고 해서 사회적 환경을 EU 같은 곳에서는 함께 측정한다. 즉 사회적 환경에 관한 부분을 이제 정부가 뒷받침해줘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에서 이런 부분을 계속 측정해가지고 지역 간의 편차가 있다든지 아니면 특정 세대가 문제가 된다든지 아니면 특정 어떤 어떤 직군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을 밝혀낼 수 있게 된다. 이 국가승인통계 기초 자료를 통해서 발견이 된다면, 미디어 교육 정책을 수립할 때 미디어 역량의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그 취약계층에게 이 조사 결과에서 나온 부분 중에 어떤 역량이 부족한가를 발견해서 그 역량을 교육하는 그런 교육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될 것이다.”(미디어리터러시 연구 전문가 1)

“우리가 미디어리터러시 지역별로 얼마큼 격차 있는지를 할 때 예를 들면 대 지역에 있는 다양한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가중치로서도 점수를 만들 수가 있다. 그러나 가구 및 개인 설문조사를 수행한다는 목표 아래 미디어리터러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지역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계층, 취약계층한테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사다. 이러한 정책적 방향을 고려한 연구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미디어리터러시 연구 전문가 3)

“그간 많이 수행되어 온 미디어리터러시 조사에도 불구하고, 그런 작업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다시 말해 연구 결과가 갖는 임팩트가 그렇게 세지 않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승인통계를 한다는 얘기는 리터러시 자체를 국가가 굉장히 중요하면서 뭔가 이게 뭔가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어떤 그런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개별 연구와 그 결과는 우리나라 전반적인 리터러시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또한 과제의 영속성 측면에 있어서도 부처의 영향, 관점에 따라 변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국가의 승인 통계다, 라고 하면 수치 자체가 우리의 현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낮은 부분에 있어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 등이 개진될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자체가 국가 관련 영역의 수치로 들어가는 그 자체가 리터러시 논의, 관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이 된다고 본다.”(미디어리터러시 연구 전문가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 및 정책 전문가 집단에서 국가승인통계 추진의 한계점 및 제언을 덧붙였다. 우선 전 국민 대상의 설문 수행에서 오는 한계점들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예컨대 청소년 대상 설문 구성의 경우 이용자의 목표와 미디어 환경 자체가 상이하다. 마찬가지로 중장년층의 미디어 활용 역시 다름에도 이를 동일한 측정 척도로서 평균화시키는 부분으로 설문이 구성되는 부분에서 연령대별 특징을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미디어리터러시 연구 전문가 4). 이에 따라 생애주기별로 측정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거나, 개별 연구를 통해 청소년과 중장년층을 구분하여 개별 연구가 수행된 맥락들을 설명하기도 했다.

또한, 국가승인통계 추진 시 가장 어려운 지점으로 인식과 실태 부분의 구분이었다. 다시 말해 미디어 기술에 대한 부분, 현황에 관련한 부분들은 그 증감이나 측정에 있어서 명확하게 수

치화되나, 미디어리터러시에 대한 인식은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결과를 제시함에 있어 한계점들이 노출된다. 아울러 개인에 대한 미디어리터러시 역량 측정에 치우치다보니, 사회가 제공하는 미디어리터러시 수준과 그에 대한 측정은 빠져있다. 즉, 개인적 영역에서의 미디어 활용에 대한 부분은 어느정도 기존 연구를 통해 측정되거나 논의되어 왔지만,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영향은 크게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미디어리터러시 연구 전문가 4). 이에 대해 해외 사례를 들면서 그 제언을 덧붙였다.

“미디어리터러시 역량을 측정에 있어 측정 가능한 역량이 있고 측정이 불가능한 역량이 존재한다. 셀프 리포팅이지만 핀란드와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리터러시 역량에서 인터넷을 연결할 줄 아는지 연결할 줄 모르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참여 관찰을 통해서 측정을 한다. 단순히 할 줄 안다, 라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의 상황을 준 다음에 임무를 클리어하게 끝내면 그 사람 미디어리터러시의 그 역량은 갖춘 사람 이런 식의 역량을 측정하는 것이다. 즉 EU 등에서는 개인적인 영역 사회적인 환경적인 요인으로 스펙트럼을 나눠 조사 첫 단계에서부터 구분해서 접근한다. 반면 국내 연구 같은 경우 개인에게 초점을 맞춰서 사회가 주고 있는 미디어리터러시 역량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개념들은 없다. 이 부분과 함께 인식 파트, 행위의 결과 파트를 구분해서 제시하면 국가승인통계를 받는 데 훨씬 더 용이할 것으로 본다.”(미디어리터러시 연구 전문가 4)

이에 대해, 최근 국가승인통계로 승인받은 한 미디어 통계 분야의 정책 담당자는 관련해서 인식 문항은 많이 제외하고 행태 조사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국가승인통계 추진 전 수행했던 2020년 조사와는 크게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기존 조사에서도 인식 문항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승인통계 추진 과정에서 긴요한 제언으로, 통계청의 담당자마다 승인 기준과 기초가 상이하여 조금은 정성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담당자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합의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문했다(국가승인통계 조사 정책 담당자 1).

또한, 새롭게 승인받은 통계가 기존 조사 영역과 중복되는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 유사하다고 보일 수 있는 조사를 두 개 정도 선정하여 해당 항목들을 일별해 비교하는 연구를 별도로

수행했다. 조사 결과 중복되는 부분이 두드러지지 않았으며,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의 특성상 유사 조사에 문항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국가승인통계 조사 정책 담당자 2).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 정책 수립에 활용되는 기초 자료로 필요한 부분들을 각각 자문했고, 그를 활용하는 근간으로서 국가승인통계를 추진할 수 있었음을 밝혔다.

3. 소결 및 시사점

전문가들은 미디어리터러시 지수의 정책적 활용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서 국가승인통계로의 추진에 대체로 동의했다. 또한 기간 정책연구로서 파편화된 통계 조사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념 및 연구 방법의 합의와 일관된 추진을 주문했다.

나아가 미디어리터러시 역량 측정을 위한 기준과 문항 선정의 절차를 거쳐 국가승인통계 추진의 선결 조건들을 달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과정에서 필수 요건인 표본의 대표성 확보와 유사 통계와의 변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통계청의 승인 과정 진행에 있어 수월성을 확보해야 함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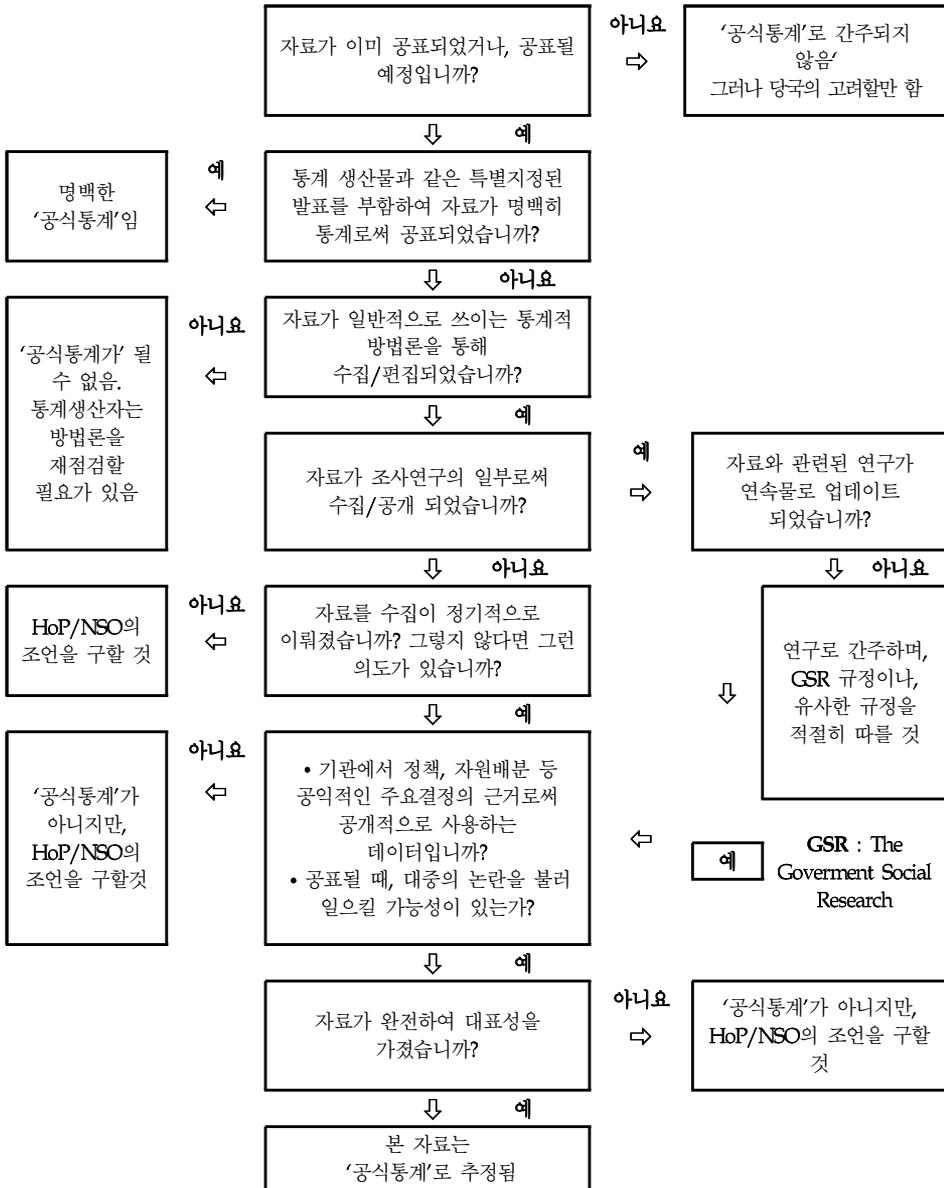
미디어리터러시의 국가승인통계 추진은 결국 전 국민의 미디어리터러시 역량 평가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 수립과 집행의 근간을 마련하는 부분에서 합의를 갖는다. 이는 또한 주무 부처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과 위상 확보는 물론, 종단적 연구로서 기초 조사를 제공하고 이를 국가 차원의 비교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삼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조사의 국가승인통계 추진은 미디어 취약 계층에게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련된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근거 자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시의성과 합의는 지대한 것으로 판단됐다. 국가 차원의 승인통계로서 파급력을 갖춘 조사 결과의 제시는 전 국민적 인식 개선 및 미디어리터러시 조사 및 정책 필요성의 정당화를 이끌어내는 근거가 될 것으로 인식됐다.

이에 따라 기술적 차원에서 국가승인통계 추진의 한계점들을 보완하고, 이를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통계 주관 및 집행이 이루어질 때, 미디어리터러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지원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는 결론에 대다수 응답자들의 동의가 이뤄지고 있었다.

분석 결과는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조사 국가승인통계화의 타당성이 강하게 존재함을 시사한다. 국가승인통계로서 미디어리터러시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정책활용도 제고는 물론 낭비되는 정책자원을 최소화함으로써 도출된 결과물의 획기적 활용 및 관리가 가능하리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림 5-1]은 국가승인통계화 판단을 위한 내부 흐름도를 도식화한 것으로 후술할 지수 운용 체계 구성 및 제안 내용에 접목시켜 추후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조사 국가승인통계계획에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그림 5-1] 공식통계 판단을 위한 전체흐름도 (flow chart)

* 출처: UK statistics Authority(2012). National statistician's Guidance : Identifying Official statistics. 재구성

제6장 지수 운용체계 구성 및 제안

연구진은 앞선 논의를 통해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조사의 필요성 및 정책 추진의 정당성을 검토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지수의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당국 혹은 학계에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결과들이 응축되고 활용되는 방식이 정책적 관점에서 만족할만한 수준을 확보하지 못한 채 다소 아쉬운 흐름을 이어왔다는 점 역시 살필 수 있었다.

본 장은 앞서 논의된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연구 검토 및 국가승인통계회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정리하고, 이에 기반해 향후 미디어리터러시 지수의 국가승인통계 추진 과정에서 추구해야 할 개선안 및 정책적 절차를 제안한다.

제1절 분석결과 및 시사점

해외 및 국내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운용 현황을 분석적으로 살폈던 2장과 3장의 논의는 지수 운용의 정책적 정당성이 강하게 존재함을 확인케 했다.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지수의 정책적 활용 방안 및 적용 영역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해외 미디어리터러시 운용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미디어리터러시 수준 향상은 개인적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지만, 국가 혹은 사회 전반의 역량 향상과도 연결된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최근 수년여에 걸쳐 횡행하고 있는 가짜뉴스(Fake news)에 대한 대응 역량향상은 21세기 시민사회의 기본 역량으로 이어지는 정책 차원의 목표에도 부응하는 것이었다.

또한, 미디어리터러시의 정책적 활용을 위해 지수의 보다 객관화된 구성 및 적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국가 차원의 논의들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23년 EU가 제시하고 있는 「미디어리터러시 기술의 증진 및 개발을 위한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은 지수의 고도화를 통한 정책적 활용을 촉구한 대표적 사례다.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디어리터러시 측정 방법론의 공통점은 개인의 미디어 활용 능력 및 미디어 사용 양상, 그리고 미디어 활용에 대한 개인의 교육 정도를 측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지표의 구성 방식 및 측정 방법에 있어

운용 주체가 차별적이더라도 지수를 도출하기 위한 설문 내용 및 구조 등이 유사도가 매우 높게 형성되도록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각 회원 국가는 이를 통해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체계화할 것을 요구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해외 미디어리터러시 지수가 추구하고 있는 객관화된 측정 방법은 개인 혹은 국가의 역량을 파악하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을 활용해 비교 가능한 형태로 구조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내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조사 및 운용 현황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던 시사점은 엄격한 측정 지표의 확립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일관된 정책 목표 설정의 한계 그리고 국가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파편화된 조사와 논의로 말미암아 미디어리터러시의 핵심 역량으로 꼽히는 콘텐츠에 대한 비판적 이해 능력 향상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으며, 기술적 차원의 미디어 콘텐츠 제작과 활용에 초점을 맞춘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그간의 지수 조사가 집중돼왔다는 점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현상에 대한 진단과 논의를 통해 연구진은 일관된 조사분석 및 결과도출을 통해 정책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국가 통계화의 필요성이 국내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영역에 존재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었다. 분석 결과 도출된 시사점을 토대로, 연구진은 미디어리터러시 지수의 국가승인통계를 추진할 경우, 정책당국이 크게 두 가지 측면의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향후 미디어리터러시 지수가 국가승인통계에 연계·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수가 국가승인통계로 인정받게 될 경우, 이의 정책적 활용은 단지 공표만으로 이뤄지진 않기 때문이다. 승인통계인 지수를 정책의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하는 주체들이 늘수록 승인통계의 활용도는 높아지고, 이의 품질관리는 엄격해지며, 시대적 변화상을 능동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피드백 역시 활성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승인통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기 위해선 승인통계 활용에 나선 주체들과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승인통계의 조사 기획 단계부터 결과 발표 후 피드백을 통한 고도화 과정까지 선순환구조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각 통계 자료의 포괄범위(일반정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표주기(년, 월, 일), 시계열 등은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관해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미디어리터러시 지수의 수준 평가 및 측정에 대해 사용역량 및 확립의 개념 연계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기존 지수의 조사 현황은 매우 산발적이고, 조사 시점에 따라 일관되지 않은 측정지표와 개념들로 인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었다. 이를 조사 기획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특히

모집단 및 표본집단에 대해 정교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승인통계의 형식 및 내용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연구진은 이상에서 획득한 전략적 시사점을 토대로, 5장에서 국가승인통계로 승인받은 세 개의 사례를 선정해 국가승인통계 추진배경, 조사개요 및 개선과정 그리고 정책적 활용 및 기여도를 중심으로 내용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미디어리터러시 지수가 국가승인통계화 되기 위한 시사점들을 추출했다. 또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진행하였고, 분석 결과를 통해 미디어리터러시 지수의 국가 승인 통계화를 추진하기 위한 시사점으로 지수 구조 및 절차에 있어서 변화가 이뤄져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우선 국가 승인통계가 되기 위해 미디어리터러시 지수를 구조화할 때, 객관성 및 중립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염두에 둘 필요성이 크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선, 미디어리터러시의 개념, 범위, 분류(리터러시 영역)에 대한 정제되고 합의된 개념적 접근이 선행되어야 하며, 지수의 측정 대상 및 측정 방식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컨대, 측정 대상을 생애주기별로 삶의 방식에 따른 측정으로 할 것인지, 지역별로 미디어센터, 지자체 및 교육청 단위 미디어 교육을 시행하는 곳과 아닌 곳으로 구분할 것인지, 미디어 교육을 경험한 적이 있는 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을 구분할 것인지 등 측정 대상 그리고 이에 따른 측정 방식을 명확히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수가 승인통계화가 되기 위해선 또한 국가승인통계의 형식 요건에도 부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게 제기됐다. 해당 형식 요건은 통계 조사기획, 조사표설계, 표본설계, 자료처리 및 집계 등이 있으며,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조사는 현재 형식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각 영역별 기본 원칙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구조화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형식요건 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언급된 영역은 표본설계였다. 표본설계의 진행 과정은 모집단 확정 및 분석, 표본추출틀 구축, 표본 규모 결정, 표본 배분, 표본 추출, 표본명부 생성, 모수 추정순으로 이루어진다. 표본설계 중 표본 추출은 확률표본에 의해 추출하여야 하고, 모집단의 모든 단위가 선택될 확률이 0보다 커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함이 거론됐다. 즉, 표본설계의 규모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획 단계에서 결정해야 하며, 표본이 커질수록 표본오차는 작아지므로 되도록 큰 표본을 얻는 등 철저한 기획과 판단과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표본설계는 요구수준과 운영상의 제약조건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음도 고려사항 중 하나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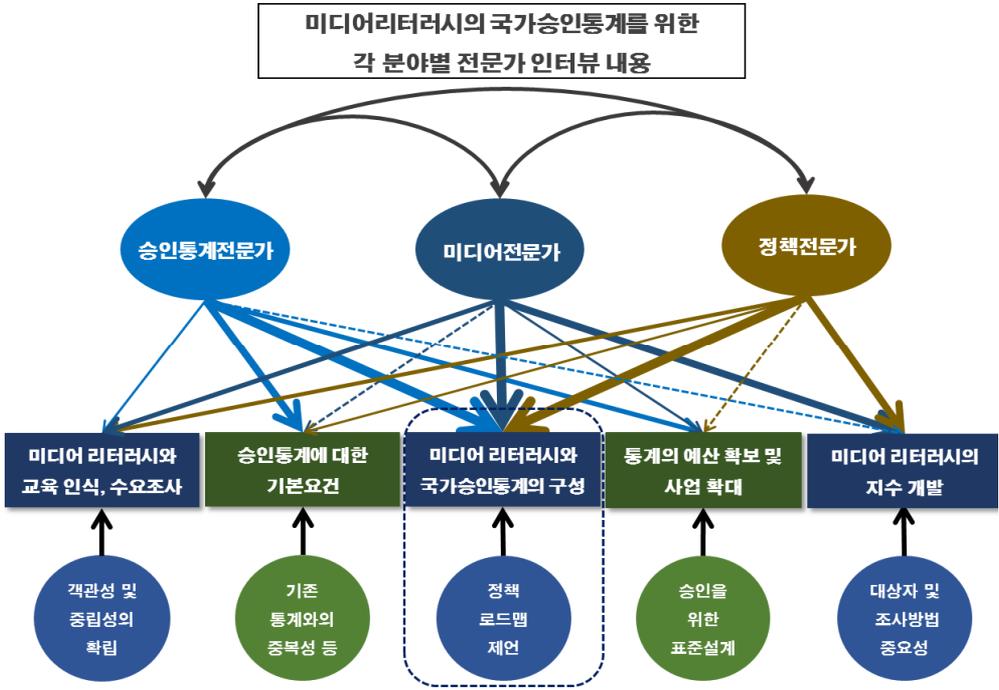
다. 더불어 표본은 확률표본 추출과 비확률표본 추출 등으로 명확히 나뉘 적용해합도 덧붙여 거론된 대목 가운데 하나였다.

확률표본 추출은 목표모집단의 조사변수값의 분산, 신뢰수준, 허용오차에 따라 결정되며, 비확률표본 추출은 사용 가능한 예산과 시간에 따라 조사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특별히 계산 방법 없이 진행된다. 이는 분산이 클수록, 추정치에 대해서 높은 신뢰성을 원할수록, 허용오차가 작을수록 표본의 크기는 커져야 한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 역시 논의 과정에서 살필 수 있는 주요 고려 요소였다.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조사를 국가승인통계화하는 과정에서 표본 추출에 집중해 주목해야 할 점을 각각 비교 분석하여 정리한 것이 <표 6-1>이다.

<표 6-1> 확률표본추출 및 비확률표본추출의 비교 분석

구분	확률표본 추출	비확률표본 추출
표본의 모집단 대표성	높음	낮음
표본추출 오류계산	가능	불가능
추계통계기법 적용	가능	불가능
비용	높음	낮음
표본추출기법	높은 수준 요구됨	높은 수준 요구되지 않음

한편, [그림 6-1]은 미디어리터러시 지수의 국가 승인통계 추진을 위해 운영사례분석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한 시사점을 추출한 뒤 핵심 내용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6-1] 미디어리터러시 지수의 국가 승인통계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시사점

제2절 국가승인통계 추진 방안

국가승인통계 추진은 한번 기획되고 실시되면 그 계획의 완성도에 따라 국가통계의 승인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당초 계획이 부실하면 그 이후 단계에서 상당한 노력이 투입되더라도 추진 과정에서 큰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추진 주체는 최초 기획 단계에서 승인절차 및 요건에 맞춰 매우 정교한 추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승인 대상 통계조사에 갖는 특성에 따라 형식과 절차에는 다소 차이가 존재할 수 있지만, 6장 1절에서 언급한 각 영역별 시사점과 전략적 접근은 대부분의 승인통계 추진 주체가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과정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본 절은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조사를 국가승인통계로 추진하기 위해 추진 주체인 방통위가 전략적 관점에서 수행해야 할 구성 요건들을 확립한 뒤, 이를 실행에 옮길 로드맵을 구성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연구진은 이를 위해 앞선 논의에서 도출된 시사점과 함의를 기반으로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방안을 제안하고, 제안 내용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국가승인통계 추진 조직 구성

국가승인통계 추진 과정에서 가장 먼저 착수해야 할 과제는 미디어리터러시 지수의 국가승인통계화라는 과제를 이끌고 추진할 조직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동력을 만드는 것이다. 추진 주체는 원칙적으로 방통위 지역미디어정책과 그리고 시청자미디어재단 미디어교육부 등이 맡겠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 실행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추진업무를 전담할 조직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조직 체계로는 지수의 국가승인통계추진업무는 방통위 혹은 시청자미디어재단 모두 다양한 업무 가운데 하나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 집중된 추진력이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이에 따라 현재 수행되고 있는 지수 조사 업무의 진행과정을 고려할 때, 방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 내부 구성원, 그리고 외부 연구 및 실행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 조직을 둘 것을 제안한다.

가칭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품질 관리 위원회’가 연구진의 제안을 구체화할 위원회 명칭이 될 수 있다. 이 위원회의 역할과 임무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기 전과 후 등 시점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판단된다. 우선 지정되기 전 주요 임무는 현재 수행되고 있는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조사를 국가승인통계 형식 및 내용 요건에 맞춰 재구성한 뒤, 정책적 로드맵에 따라 수시로 지수 조사의 품질관리를 수행하면서 승인통계화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구성해 나가는 것이다. 승인통계로 지정받은 뒤에는 지수 조사가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결과를 산출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사 결과가 정책에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에 가교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수 활용의 외연 확장에 필요한 역할까지도 맡을 수 있다고 본다.

둘째, 가칭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품질 관리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의 역할과 활동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보편적으로 위원회는 조사를 기획하고, 지수 조사 과정과 결과물에 대한 품질을 관리하며, 조사 과정 중 발생 가능한 다양한 변수에 대응방식을 논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조사의 경우, 현재까지 이와 같은 품질관리가 상대적으로 엄격히 관리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보니, 기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일 것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가장 먼저 지수의 국가승인통계화를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을 정교화한 뒤, 구체적인 실행 매뉴얼을 구성해야 한다. 승인의 전제로서 언급되는 사항을 촘촘하게 포함하고, 다양한 절차를 마련한 뒤, 기획안을 구체화할 매뉴얼 등을 채택해야 한다. 그리고 실무 조사팀은 이를 사전계획대로 철저히 진행되, 진행의 주요 시점마다 위원회의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다. 통계조사는 실시 전 종합시행계획, 조사지침서 등을 작성하여 순차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조사업무의 효율화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통계 관리 및 실사계획, 현장조사 등 안내서를 작성하여 조사에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수립된 통계계획이 실제로 차질 없이 시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가 될 수 있다. 완벽하게 계획하고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탓이다. 진행 중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하여 계획 변경 시, 당초 계획에서 목표가 제대로 수립되었는가, 처음 계획한 초점에 맞추어 진행되고 있는가, 실제로 이들 절차가 조사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오류 및 변수에 대응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조사는 통계조사 절차·제도상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가승인통계를 추진함에 있어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중앙관리가 필요한데, 이는 조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표본설계요인 등 내부 변수이외에도 다양한 외부 요인에 대한 효율적 대응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의 역할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날 수도 있다.

예컨대 각 기관 간의 협조 미흡으로 통계자료가 충분히 조사 되지 못하거나 유사 통계업무 중복으로 응답자의 거부감이 높게 나타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때 신속하고 효율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선 추진주체가 운영하는 중앙조직의 역할이 필요한데, 위원회가 그 역할을 맡을 수 있다.

한편 국가승인통계 추진 주체가 이와 같은 논의에 기반해 단기 및 중·장기차원의 내부 업무 개선 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풀어야 할 일반적 진단 및 개선방안의 적용과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표 6-2〉).

〈표 6-2〉 단기 및 중·장기 내부 개선방안

구분	문제점	개선방안
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의 신규 진입이 미흡하여 실태와 중요성에 대해 점검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청 관련 홈페이지에 승인대상 절차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신청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 보고서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설계를 관련 부서 인원, 예산 등 통계작성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전문인력의 협조와 자문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에 대한 일반적 설명과 자료집계 및 추정방법에 대한 설명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고체계를 수립하여 관련 항목에 대한 추가 설명 및 보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작성 메뉴얼화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당자의 통계작성업무를 체계화하고 정확한 통계생산을 위한 기반 마련
중장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의 유용성 측면에 비해 이용자들이 극히 제한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품질차원 중 '관련성' 측면에서 이용자 발굴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표상 조사 내용의 보완 및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로 발굴되는 이용자로부터 의견수렴과정을 통하여 조사표를 보완하고 새로운 설문 내용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본설계 없는 조사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본의 대표성 및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표본추출틀을 보완하고 표본설계를 통하여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무응답률이 높은 자료수집방법을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인력의 확충 및 조사예산의 확충을 통하여 다른 수집 방법, 예를 들어 면접조사 또는 전화조사로 자료수집방법을 전환 표본들에 대한 응답률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며 조사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음

<표 6-2>가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문제점에 대한 진단 및 개선을 추구하는 보편적 과정으로, 위원회는 위의 진단 및 개선방안을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조사에도 적용해 개선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영역은 과감하게 개선하고, 이를 체계화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의 역할을 고려할 때, 위원회의 구성은 방통위 담당업무 사무관 및 주무관 각 1인, 시청자미디어재단 담당 실무자 2인, 외부 미디어리터러시 연구자 2인, 통계 연구자 1인 그리고 승인통계 추진 경험에 기반 해 실무 자문을 맡아 줄 자문역 1인 등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위원회는 가급적 2024년 초 출범시켜 승인통계 요건에 따른 지수 조사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2024년 하반기부터 3개년 계획을 세워 지수조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면, 국가승인통계화 및 승인획득 후 안정화를 위한 전반적인 일정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위에서 제시한 개선 및 구축 과제를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조사에 접목해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연구진은 다음 섹션에서 적합성 판단 및 분류체계 등 주요 세부 개선 내용 및 권고안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3개년에 걸친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적합성 판단을 위한 업무 체계 구축

앞서 언급한 조직 및 절차상의 변수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과제는 모든 업무 절차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국가승인통계화를 추진하는 통계조사 절차 및 처리과정이 승인대상 통계를 신청하는데 있어 부적합한 영역이 있다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등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 업무는 앞에서 언급한 단기 및 중·장기차원에서 제시한 환경 개선 방안을 토대로 실제 내부 업무 절차를 점검하면서 추진되어야 한다. 승인통계의 수립계획서와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하고 검토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과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 업무는 앞서 언급한 가칭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품질 관리 위원회’가 주도하되, 추진 주체 내 행정조직이 뒷받침하는 구조를 취하는 것을 제안한다. 전문적인 업무 성격상 내부 구성원만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통해 해당 통계의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부문을 정리한 내부 의견서가 도출되고 문서화가 미흡한 사안들에 대한 현황을 추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획득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승인통계의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을 위원회는 수립해야 한다. 세부 적합성 판단 과정을 순차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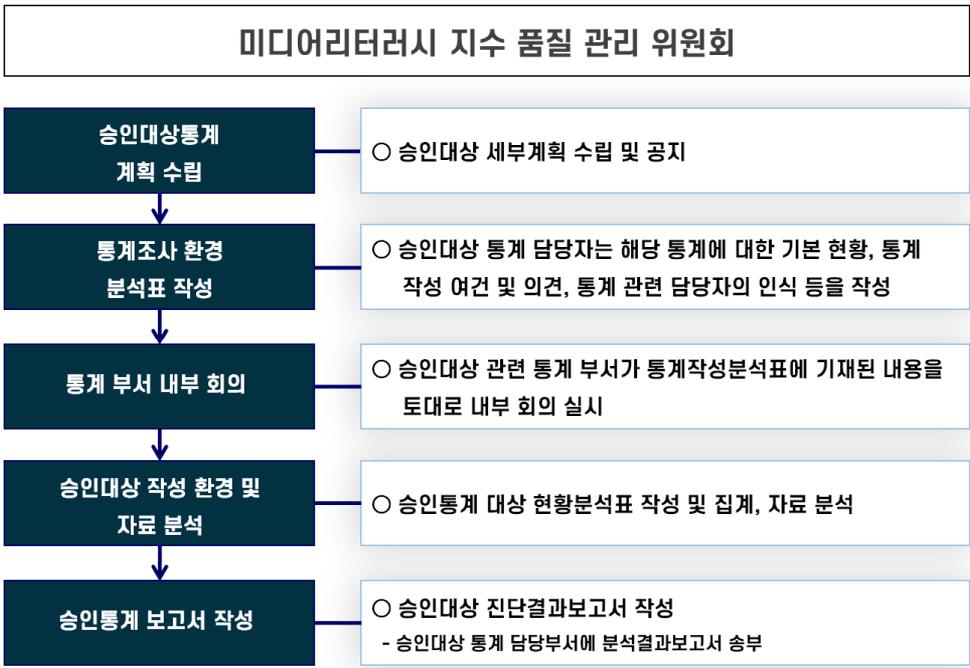
- 통계작성 기획에서는 통계작성 목적의 명확성, 용어의 개념 및 정의, 통계작성 기획의 타당성, 예산, 인력, 일정의 적절성, 통계기획 시 이용자의 요구 반영 등을 중점으로 작성한다.
- 통계작성 설계 부문에서는 보고 대상의 명확한 설정, 보고 작성 체계의 명확성, 보고 양식의 통계작성 목적과의 부합 정도, 보고지침서의 작성, 새로운 보고 양식을 위한 예비조사 실시 등이 진단해야 한다.
- 자료수집 부문에서는 개별자료 진단 및 검증을 위한 작업, 업무 내용의 명확한 설정, 현장조사 등을 검토한다.
- 자료처리 부문에서는 자료입력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자료 편집 작업의 체계 등을 검토한다.
- 자료집계 및 통계작성 부문에서는 통계표 및 그래프의 적절한 작성, 집계 결과에 대한 검증작업 등을 실시한다.
- 결과 공표 및 자료 이용 부문에서는 결과 공표 문서화의 적절성, 결과의 다양한 매체 제공, 공표 일정의 준수 등을 검토한다.
- 사후관리 및 보관 부문에서는 통계작성 체계 관리, 오차 관리, 이용자 관리 및 요구사항 파악, 통계 품질 관리 실태 등을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해야 하겠다.
- 자료수집의 타당성 진단은 자료 수집 체계에 대한 점검 단계로 자료수집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유형과 발생빈도 등을 진단하는 것으로 아래의 사항을 중심으로 작업해야 한다.
- 자료수집방법의 타당성은 통계 작성 절차의 적합성 진단과 직접 연계되는 부문으로, 통계작성 방법을 고려하여 적절한 자료수집의 타당성을 진단하는 방안을 수립한다.

특히 보고통계의 경우 보고 작성 체계 점검 및 비표본오차가 강조되어 정리될 필요가 있다. 보고 양식, 보고 작성 방법 및 보고 단계별 과정 등 보고 라인별로 기관이나 부서를 직접 방문 및 직접 면담을 통해 보고 작성 환경이나 보고 작성에 대한 애로 사항 등을 검토함으로써 승인 통계 보고의 작성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과 타당성이 있는 승인통계계획을 수립한다.

승인 대상 결과보고서를 정리하여 해당 통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는 특히 각 부문에서 발생한 취약점이 다른 부문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즉, 인과관계를 감안하여 상호 비교하여 대상이 승인통계가 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구체화해야 한다.

승인대상 통계의 방향성은 각 부문별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관련성, 정확성, 시의성/정시성, 접근성/편리성, 비교성, 일관성, 효율성, 서비스성/해석성 등의 7가지 요소와 연관하여 검토한다. 검토결과보고서를 중심으로 해당 결과를 요약하고, 발생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 승인 대상의 통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주요 절차를 확립한 뒤, 승인대상 통계 계획수립부터 보고서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업무 흐름도를 통해 표현한 것이 다음 [그림 6-2]다. 모두 5 단계를 거치게 되며, 각 단계에서 주요 업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위의 업무흐름 역시 가칭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품질 관리 위원회’가 수행하고 행정조직이 뒷받침한다면, 큰 차질 없이 원하는 분석 절차 확립 및 분석 결과물을 획득할 수 있으리라 판단했다.



[그림 6-2] 승인대상 관련 통계 조직 내부 업무 흐름도

3. 승인대상 분류 체계 확립 및 개선계획 수립

미디어리터러시 지수의 국가승인통계 추진과정에서 외형적 업무체계의 흐름이 잡혔다면, 다음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살펴야 할 대목은 승인대상의 분류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조사 계획의 세부사항에 반영해 엄격하게 살피는 것이다. 첫 번째 결정사항은 승인 대상의 분류 체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확립하는 것이다.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조사가 어느 범주에 포함돼 단계적으로 분류되도록 하며, 이를 통해 지수 조사가 갖는 의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것이다.

승인 대상인 미디어리터러시 지수에 대해 앞서 언급한 내용들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해야 하며, 승인통계조사명, 승인통계작성 목적, 조사 항목을 중심으로 주제와 제시된 중요한 논점이 순차적으로 실현되는지 혹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등을 살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예시를 들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승인대상의 주체를 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전제를 충족하고 있는가.
 - 분류 대상인 통계의 주제가 작성 범위에 언급된 경우, 해당 통계 주제로 분류한다.
 - 대상 승인통계의 주제가 다양한 영역을 포괄할 경우, 단계를 거쳐 분류를 지정한다.
- 가정 먼저 최상급 분류단계인 대분류 [미디어리터러시 지수]를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중·소분류 단계인 [미디어],[리터러시],[지수]를 결정한다.

연구진은 본 연구의 대상인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조사에 승인통계 분류를 적용할 경우, 미디어(Media)와 리터러시(Literacy)가 합성된 복합주제임을 감안, 주분류를 ‘미디어리터러시’로 지정하고 부분류를 ‘미디어’ ‘리터러시’ ‘지수’로 지정하되 다중 분류할 것을 제안한다.

분류체계까지 확정되면, 조사 과정에 대한 전략적인 개선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연구진은 이를 다음과 같이 5가지 사항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① 표본설계에 의한 표본조사

현행 승인통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자료 수집 방법은 확률적 방법에 의해 일정 크기의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아닌, 모집단으로 간주되는 승인대상 계획을 세워 해당 자료를 분석하여 통계를 수집 및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전수조사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자료수집방법을 채택하고 있어 전수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는 현행 승인통계에서 조사 방법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이 전체 모집단을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표본설계가 필요하며, 이때 표본설계는 통계적 방법에 의해 확률표본을 추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조사가 표본설계를 기획할 때는 가칭 미디어리터러시 품질관리위원회로부터 지속적인 자문 및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표본설계 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그것이 갖는 대표성을 충분히 확보해 나가는 등의 개선작업이 표본설계 기획 및 구조 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② 조사인력 확보 및 오차 관리 체계화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조사가 실제 조사를 수행하게 되면 이 과정엔 다양한 오차들이 존재할 수 있다. 포함오차, 무응답 오차, 그리고 조사표, 설문지, 조사원, 응답자 등에 의해 발생하는 관찰오차나 측정오차 등이 그 예다. 따라서 지수 조사 과정에서 오차 관리는 지속적인 과제가 된다. 과학적인 체계 수립이 필요한 이유다. 특정 인력에 의해 조사가 실시, 관리, 분석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오차의 정확성이나 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충분한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며, 이 역시 적절한 수준에서 통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디어리터러시 품질 관리 위원회의 역할이 이 과정에서도 부각될 수 있다.

③ 자료수집방법 변경

미디어리터러시 지수가 국가승인 통계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승인 대상 관련 인력을 확충하고, 각 대상에 적합한 형태로 자료수집방법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정 집단 혹은 대상을 겨냥한 현행 미디어리터러시 측정 방식은 보편적 관점에서

객관적 응답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특정 대상이 아닌 현실 가능함 범위를 철저히 검토하여 보다 신뢰성 있는 환경에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획해야 한다.

④ 승인대상 통계조사 방법

조사원 개인의 능력은 통계의 신뢰성 확보나 업무 추진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이다. 따라서 미디어리터러시 지수의 국가승인통계 주체는 앞서 제시한 승인대상 관련 세부 업무를 구체화하여 지속적으로 체계 정비와 안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⑤ 품질관리 및 이용자 관리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조사를 승인통계로 추진함에 있어 전반적인 통계품질 및 관련성 확보는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관련성은 이용자들에게 얼마나 의미 있고 유용한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척도다. 따라서 일반적 통계 이용자들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등에서 승인통계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잠재 이용자들을 발굴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조사와 관련한 많은 의견을 수렴할 때 관련 승인통계의 관련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조사와 관련된 피드백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이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이 조사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제3절 국가승인통계 추진 로드맵

연구진은 1절과 2절을 통해 제시한 추진 방안을 정책당국이 점진적으로 반영하면서,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조사가 국가승인통계화 된 이후 초기 안정화 상태에 접어들기까지 3년여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2024년을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조사의 국가승인통계 추진 원년으로 삼을 경우, 2026년말 승인통계 획득 후 초기 안정화 상태가 이뤄지는 시기가 될 수 있다. 판단 근거는 각 시기별 추진 전략과제의 물리적 완성 시점을 고려한 데 따른 것이다. 미디어리터러시 지수의 국가승인통계화라는 목표를 수립하고, 연차별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전략과제 및 실행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4년은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조사를 국가승인통계로 격상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점검하고, 이를 실행해 나가는 단계로 승인통계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기반 조성기로 볼 수 있다. 이 시기 초반 가정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품질관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로 하여금 주요 추진 과제를 직접 실행하거나 관리 혹은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 주요 추진 과제는 국가승인통계 추진 요건 및 체계를 분석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지수의 구성방식을 국가승인통계의 형식 및 내용 요건에 맞춰 정비하고 기획하도록 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제시하면, 추진요건 및 체계검토 과정엔 반드시 법적 근거 및 승인통계 현황 분석을 토대로 현재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조사가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차별화 지점을 설정하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분석 결과 도출된 결과물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이 확립되면, 2024년 하반기 지수 구성을 새롭게 정비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단순한 정비가 아닌 국가승인통계화를 위해 형식 및 내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개선안들이 적용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과정은 위원회가 중심이 돼 내부 위원 및 외부 연구진 혹은 전문조사업체 등을 통해 다양한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언급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위원회 자체 수행방식이다. 위원회에서 전반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체계검토를 거친 뒤, 지수 구성을 정비하는 것이다. 이때 내부 위원 중 일부를 검토 영역별로 배치해 검토결과보고서를 도출하고, 실행점검 역할을 부여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또 다른 방식은 외부 연구진을 선정해 동일한 업무를 부여한 뒤, 결과보고서에 대한 검토 및 논의를 통해 과업을 마무리할 수도 있다. 종합하면, 2024년은 전체적으로 국가승인통계 추진의 밑그림을 선명하게 그리고, 그

기획에 맞춰 현행 지수 조사를 개편하는 작업이 주류를 이루게 되는 셈이다.

2025년은 국가승인통계화를 목표로 진행되는 2차년도로서, 미디어리터러시 지수조사의 고도화 및 체계 확립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시기는 국가승인통계 획득 사업추진 과정을 다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상반기는 체계확립 차원에서 1차년도에 조성된 기반 작업을 토대로, 본격적인 지수 조사 활동이 전개되는 시기로 판단한다. 이때, 유의할 점은 사전에 기획되고 조율된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원칙을 준용하면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조사가 국가승인통계가 되기 위한 신청절차를 앞두고 진행되는 만큼 사전에 계획된 틀을 가능한 벗어나지 않고 지수 조사의 품질관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이 과정은 위원회가 주도하되, 다소 엄격한 관리 및 감독하에 연구진 혹은 전문 조사업체가 선정되고, 기획된 내용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위원회는 지수 조사가 실시되기 전후로 지수활용의 외연을 확장하고 정책적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디어리터러시 지수를 다양한 부처에서 활용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연대협약을 체결하고 결과를 가공해 제시하거나 도출된 지수를 내외부 기관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이를 공표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또한 지수 조사가 본격화되는 시점엔 지수의 활용도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기획 방안에 대한 논의도 위원회 내에서 함께 모색될 필요가 있다. 지수에서 드러난 시민 개인 역량에 따라 방통위 혹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및 구성 방식을 달리 가져가는 등의 정책 활용방안은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다양한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해 관련 정책을 지수 조사와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밀도 높게 전개하는 것은 2025년 상반기 매우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하반기는 개선된 지수 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계청에 국가승인통계를 신청하는 절차를 밟는 시기로 연구진은 판단했다. 1차년도 기반 조성 그리고 2차년도 상반기 지수 조사 과정을 통해 승인통계 신청을 위한 요건 및 전제들이 충족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승인통계 신청은 행정적 절차이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밟아나가기 위해선 승인신청서 접수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장기간에 걸친 준비를 하고도 행정적 형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고배를 마시는 경우들이 왕왕 있기 때문이다.

현재 승인통계 처리 절차를 세분화하면 모두 9단계로 나뉜다. ①승인신청서 접수 → ②승인대상 심사 → ③신청서류 검토 및 보완요구 → ④통계청 내 관련 부서 내용심사 → ⑤수정 및 보완요구 → ⑥통계조정과 내 직원심사 → ⑦검토의견서 작성 → ⑧보고 및 결재 → ⑨결과통보 및 조정시스템 처리 등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이 가운데 ①과 ②, ③과 ④, ⑥과 ⑦, ⑧과 ⑨ 단계는 업무 처리 내용의 속성상 하나의 과정으로 묶을 수 있어 단계를 큰 덩어리로 구분지으면 모두 5단계로 압축할 수 있다. 각 단계가 안고 있는 특성을 감안할 때, 처리 과정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선 통계청에서 사전에 권고하는 사항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①과 ②단계에선 직권지정제도를 둘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③과 ④단계에선 피드백과 통계를 공시화할 것을, ⑥과 ⑦단계는 부서 간 가시화된 협업 시스템의 구축을, ⑧과 ⑨ 단계는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승인신청 접수 이전에 이와 같은 권고사항을 충실하게 준비해 승인신청을 한다면 큰 무리없이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2차년도 하반기 국가승인통계 신청 전 그리고 직후 단계에서 보완 및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있는가를 점검하고, 부족한 영역을 매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음 <표 6-3>은 승인통계 처리 절차와 그에 따른 보완 및 권고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표 6-3〉 승인통계 처리 절차와 그에 따른 보완 및 권고사항

연번	현행	개선(안)	
		현 절차	승인통계 보완 권고사항
1	승인신청서 접수	- 문서 및 조정시스템	- 직권지정제도 도입(규제강화) : 부서간 상호 협업 및 정보 공유
2	승인대상 여부 심사	- 통계법 제3조에 의거 심사 (과내 의견수렴) - 승인대상이 아니면 반려조치	- 부분통합 및 절차간소화 : 시스템 간소화
3	신청서류 검토 및 보완 요구	- 조사표, 지침서, 표본설계내역, 결과표 등 신청서류 구비 및 주요사항 포함여부 검토	- 통계작성의 권고 (법령 21조) 준용 : 피드백, 통계 공시화
4	통계청 내 관련 부서 내용심사	- 표본관리과, 통계기준과, 통계작성부서 등에 내용심사 의뢰	: 권고 의무적 수용제도 도입 (심사 규제 틀 부분&세부 확립)
5	수정 및 보완 요구	- 조정담당자 및 관련부서 심사결과에 따라 미흡한 부분에 대해 수정 및 보완 요구	- 부서간의 협조 및 협업 : 업무의 분담으로 통한 세분화
6	통계조정과 내 직원심사	- 통계조정과 조정업무담당 직원들에 의해 최종 심사	- 수정 및 보완 요구 이후의 피드백 및 보완 시 절차 간소화
7	검토의견서 작성	- 최종 검토의견서 작성	
8	보고 및 결제	-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결재권자(국장)까지 보고	•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법령 28조) • 통계작성기관(법령3조)
9	결과통보 및 조정시스템 처리	- 문서발송 및 조정시스템에 처리완료	: 제도 개선을 위한 국가기본통계로 관리 : 보고 및 결제에 대한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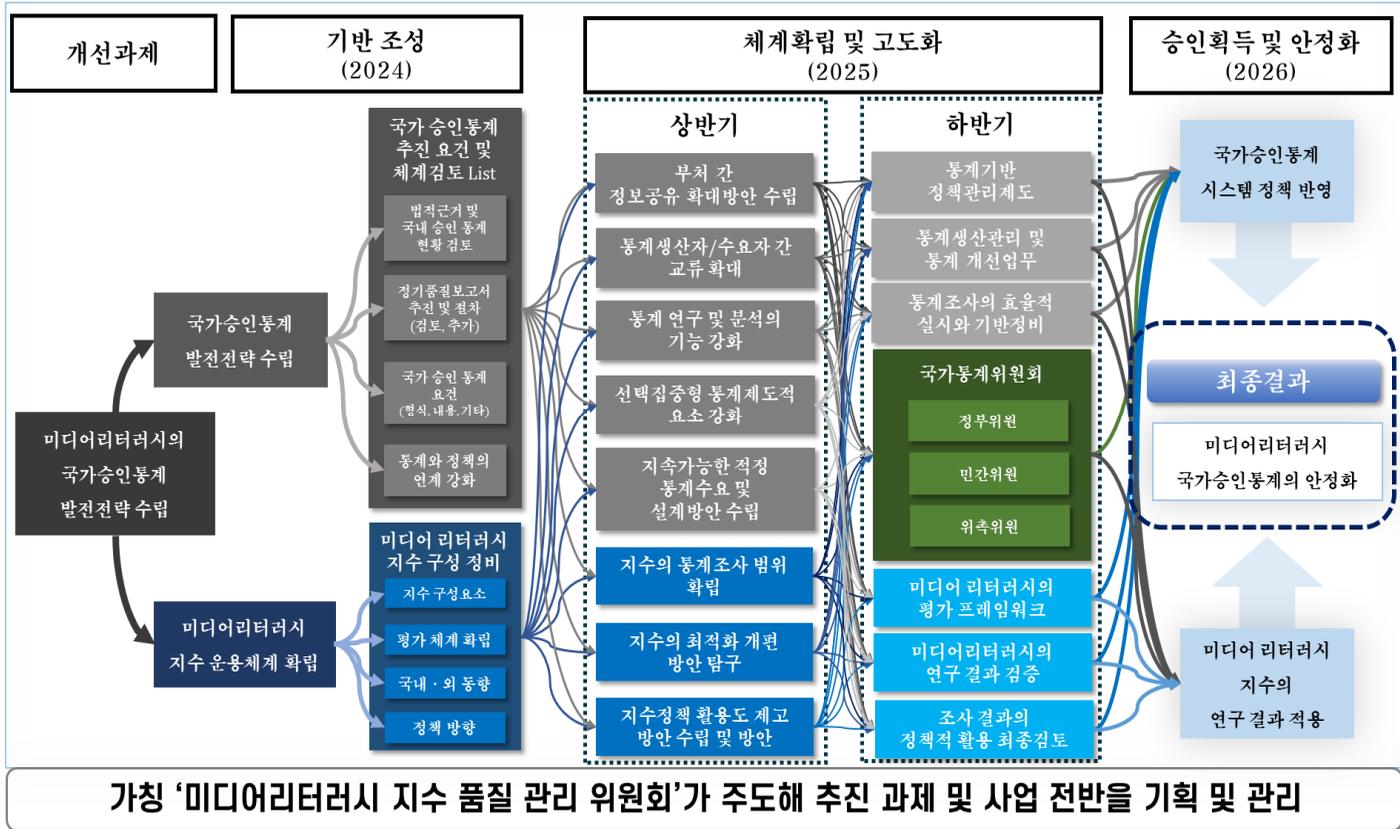
사업추진 3차년도인 2026년은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조사가 통계청으로부터 국가승인통계의 지위를 획득한 후 안정화를 거치는 시기로 판단했다. 이 시기는 2차년도에 이어 진행되는 지수 조사를 안정화하고 고도화면서 정책에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는 섬세한 작업들이 이뤄지는 단계로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앞선 국가승인통계 운영사례 분석에서도 살폈듯이, 통계조사가 국가승인통계의 지위를 얻고 나면, 적극적으로 미진한 지점을 보완하고 조사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사회 변화상을 반영해, 정책 수요가 발생하는 새로운 지점을 확인하고 조사의 효용을 높이는 작업들을 진행해 왔음을 살필 수 있었다.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조사 역시 승인통계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면, 정책당국 및 학계 등과 다양한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해 이와 같은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학계로부터 받을 수 있

는 피드백 구조는 운영사례 분석에서 살펴봤던 패널조사 등이 취하고 있는 방식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패널조사가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한국미디어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는 학술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패널조사 내 원시자료에서 발견된 데이터 오류를 수정하며, 통계 이용에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설명과 분석 결과에 대한 설명 등과 같은 문의 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 처리 과정의 오류를 광범위한 피드백을 통해 바로잡는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이는 조사 결과 및 원시 데이터에 대한 관리 및 신뢰도를 크게 향상시키는 체계로 인식되고 있다.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조사 역시 패널조사가 취하고 있는 학술지원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되, 조사의 특성과 차별화 지점을 구축해 전문가 집단의 피드백을 학술영역에서 주기적으로 취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책영역에서 승인통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선 방통위, 과기정통부 그리고 문체부 등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지수 조사 결과를 추출해 정책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부처에 제안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디어 교육과 관련된 논의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진행되고 있는데, 교육의 내용과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참조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지수는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파편화된 일시적 데이터 혹은 조사 결과에 기반해 각 정책당국이 정책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셈이다.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조사가 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데이터를 가공해 제시할 수 있다면, 정책활용도는 매우 높아질 수 있다. 이 역시 위원회가 주도하고, 내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밀도 있게 추진한다면 승인통계의 정당성과 신뢰성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3년에 걸친 로드맵을 구성한 것이 [그림 6-3]이다.



[그림 6-3] 미디어리터러시의 국가승인통계화를 위한 연차별 사업 추진 내용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2023). <http://www.law.go.kr/>
- 국가통계포털(2023). <https://kosis.kr/serviceInfo/statisInstitution.do>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2).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통계정보보고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2). <2022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 길태영(2019). 한국노인의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 질적 해석적 메타통합의 적용. <노인복지연구>, 74권 2호, 193-218.
- 김경희 · 김광재 · 이숙정(2017). <미디어 리터러시 지수 개발 및 지역별 격차 측정 조사>. 방송통신위원회 연구보고서.
- 김양은(2005a). 미디어교육의 개념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28권 1호, 306-324.
- 김양은(2005b). 리터러시 관점에서의 미디어교육에 관한 연구: 언어로서의 미디어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27권, 427-450.
- 김양은(2007). 미디어 교육 교과과정 모델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37권, 73-99.
- 김황대(2014). <2014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국가 통계시스템 구축>. 한국통계진흥원 연구보고서.
- 문혜성(2005). <미디어교육학>. 서울: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 미디어미래연구소(2021).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한 미디어리터러시 역량 측정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연구보고서.
- 미디어미래연구소(2020). <디지털 사회에서의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개발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연구보고서.
- 방송통신위원회(2020).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통계정보보고서.
- 방송통신위원회(2022). <2022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 손미란(2022). 대학 기초교양교육으로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 D대학의 핵심역량 기반 비교과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 <인문연구>, 통권 101호, 101-125.

- 신명환·최혜궁·최현정·이현준(2022).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미디어리터러시 역량 측정 연구>. 시청자미디어재단 연구보고서.
- 심규호(2010). 국가승인통계 품질 등급 부여 및 상대지표 개발. <품질경영학회지>, 38권 2호, 150-160.
- 심미선(2022). 미디어메시지 리터러시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116호, 38-76.
- 심재웅·신명환·김민주·유지운(2021).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한 미디어리터러시 역량 측정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연구보고서.
- 심재웅·전주혜·신명환·김민주·천혜선·유지운·조소영(2020). <디지털 사회에서의 미디어리터러시 지수 개발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연구보고서.
- 안정임·서윤경·김성미(2012). <SNS 시대의 한국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지수’ 개발 및 측정조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연구보고서.
- 안정임·서윤경·김성미(2013).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성에 관한 연구 : 미디어 리터러시와 교육경험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45권 2호, 161-191.
- 안정임·전경란(2006). <한국 미디어교육의 체계화 및 활성화 방안>. 방송위원회 연구보고서.
- 오세욱·윤현옥(2022). ‘미디어 리터러시’로 접근한 ‘알고리즘’: ‘뉴스알고(NewsAlgo)’ 사례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연구>, 2022년 특집호, 7-37.
- 이정은·김병련·조은지·윤혁(2023).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필요성에 대한 중등특수교사와 미디어교육강사의 인식. <특수교육>, 22권 1호, 141-168.
- 전영은·정문성(2022). 한국과 독일 중학교 사회 교과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내용 비교 분석. <사회과교육>, 61권 4호, 113-130.
-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8). <한국미디어패널조사> 통계정보보고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22). <2022 한국미디어 패널조사>.
- 정성호·지은초(2020). <데이터기반행정부 시대, 재정통계 연계활용을 위한 제언>. 한국재정정보원 연구보고서.
- 정용찬(2018). <정책지원 강화를 위한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선 심층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진재현(2013). <지방자치단체 국가승인통계 현황과 정책 활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천혜선 · 이찬구 · 성지연 · 이수연(2016).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효과성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연구보고서.

통계용어 검색서비스. 통계설명자료 (2023), <https://www.narastat.kr/metasvc/index.do>

통계정책관리시스템(2023).

<https://www.narastat.kr/pms/StatPolciyBizInfo.do?sGubun=11&selectMenuId=0010002300301301>

통계정책관리시스템. 승인통계현황(2023), <https://www.narastat.kr/pms/index.do>

통계청(2014). <2014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국가 통계시스템 구축>.

통계청(2015). <국가통계 승인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통계청(2019). <통계작성 단계별 가이드라인>.

통계청. 통계분류포털(2023), <http://kssc.kostat.go.kr/>

통계청. 통계품질관리 통계품질진단보고서(2023), http://kostat.go.kr/policy/quality/qt_dl/5/1/index.board

해외 문헌

- Aguirre, R. T. P., & Bolton, K. W. (2014). Qualitative interpretive meta-synthesis in social work research: Uncharted territory. *Journal of Social Work*, Vol. 14, No. 3, pp. 279-294.
- European Association for Viewers Interests (2009). “Study on Assessment Criteria for Media Literacy Levels: A comprehensive view of the concept of media literacy and an understanding of how media literacy level in Europe should be assessed” , Final Report.
- European Commission (2011). “Testing and Refining Criteria to Assess Media Literacy Levels in Europe” , Final Report.
- European Commission (2018).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disinformation : Report of the independent High level Group on fake news and online disinformation. Luxembourg ::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 European Commission (2022). “Final report of the Commission expert group on tackling disinformation and promoting digital literacy through education and training” . B-1049 Brussels.
- European Commission (2023).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Guidelines pursuant to Article 33a(3) of the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on the scope of Member States’ reports concerning measures for the promotion and development of media literacy skills” , Brussels, 21.2.2023 C(2023) 1105 final.
- European Commission, “Digital Education Action Plan (2021-2027)” , Retrived from <https://education.ec.europa.eu/focus-topics/digital-education/action-plan>
-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Democracy Action Plan” , Retrived from https://commission.europa.eu/strategy-and-policy/priorities-2019-2024/new-push-european-democracy/european-democracy-action-plan_en#documents
- European Commission, ” European Education Area” , Retrived from <https://education.ec.europa.eu/>

- Evans, D. (2003), Hierarchy of evidence: a framework for ranking evidence evaluating healthcare interventions. *Journal of Clinical Nursing*, Vol. 12, No. 1, pp. 77-84.
- Leuven, K. U., et al. (2009). “Independent study on indicators for media pluralism in the member states—Towards a risk-based approach. Prepared for the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Information Society and Media” . Retrieved from http://ec.europa.eu/information_society/media_taskforce/doc/pluralism/pfr_report.pdf
- Open Society Institute - Sofia (2023). “The Media Literacy Index 2023: Measuring Vulnerability of Societies to Disinformation”
- Renee, H., Mary, M., Rongwei, T. & Pamela, S. (2022). Measuring the implementation of media literacy statewide: a validation study, *Educational Media International*, Vol. 59, No. 3, pp. 189-208.
- Sandelowski, M., & Barroso, J. (2003). Creating Metasummaries of Qualitative Findings. *Nursing Research*, Vol. 52, No. 4, 226-233.
- State of Rhode Island General Assembly (2017). AN ACT RELATING TO EDUCATION - CURRICULUM. 2017--S0106 LC000316.
-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2013). “Global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Assessment Framework: Country Readiness and Competencies”
- Van Prooijen, J.-W. (2017). Why education predicts decreased belief in conspiracy theories.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Vol. 31, 50-58.
- Weed, M. (2008), A Potential Method for the Interpretive Synthesis of Qualitative Research: Issues in the Development of ‘Meta-Interpretation’ .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Research Methodology*, Vol. 11, Issue 1, 13-28.

● 저 자 소 개 ●

김 광 재

-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석사
-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박사
- 현 한양사이버대 광고미디어학과 교수

권 순 길

- 강원대 경영학과, 회계학과 졸업
- 강원대 경영학과 석사
- 인하대 순환경제환경시스템전공 박사
- 현 프랑스 트루아공대 박사후연구원

이 중 명

-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 고려대 언론학과 석사
- 고려대 언론학과 박사
- 현 국민대 미디어광고학부 강사
- 현 강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강사

이 중 효

- 가천대 신문방송학과, 도시행정학과 졸업
- 한양사이버대 광고미디어MBA 석사
- 현 인하대 순환경제환경시스템전공 박사과정

방송통신융합 정책연구 KCC-2020-30

미디어리터러시 지수의 국가승인통계

추진 타당성 및 방안 연구

2023년 12월 29일 인쇄

2023년 12월 29일 발행

발행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발행처 방송통신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TEL: 02-2110-1323

Homepage: www.kcc.go.kr
